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200041-10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소중안권리 공정안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숙명여자대학교 윤광일, KAIST 박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선화)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일러두기 |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내 통합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 01 ▶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 119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153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 183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 207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
- 215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245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 263 ▶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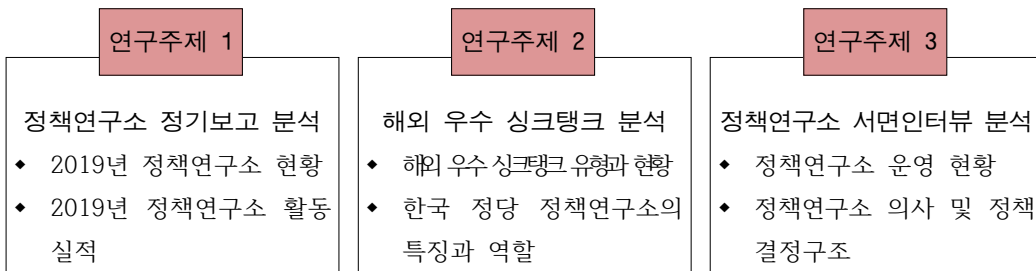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설치, 운영해야 하는 부속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19년 정책연구소 활동과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1년간 활동성과를 비교·분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정당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책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9년 현황과 활동실적을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 운영 추세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둘째, 해외 우수 싱크탱크 유형과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지위, 정당과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평가한다. 셋째,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의 실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답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당 정책연구소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나아가 정책 정당으로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은 2004년 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로 제도적 지원을 받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각 정당은 2004년 개정 정당법에 신설되어 현재 정당법 제38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 재정지원의 근거는 동법 제38조 제2항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이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발전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개발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와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모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했는데,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국고로부터

지원받음으로써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국고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조항에 따라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보고를 진행한 각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다.

<그림 1-1> 연구주제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된 이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세 가지 연구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각 정당 정책연구소가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정기보고’ 분석과 평가이다.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보고를 한 정책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등 총 7개 정당의 정책연구소이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해외 우수 싱크탱크와 정당의 정책개발 기능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의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준거점을 설정하고,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지위, 정당과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평가한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정책연구소 핵심 인력에 대한 서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책연구소 운영 현황과 의사 및 정책 결정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서면 인터뷰에는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일반적 운영,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총 세 가지 대주제에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내용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했다.

이 연구는 2019년 정책연구소 현황과 활동실적 분석과 서면 인터뷰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II.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2019년 활동실적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국의 정당들은 「정당법」 제38조에 따라서 정책의 개발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정책연구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물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제28조는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당해연도의 활동과 실적 자료를 토대로 정책연구소의 조직, 재정 및 각종 활동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표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정당체계의 안정성이 낮고 기존 정당들의 합당 및 분당, 신생정당의 출현이 빈번하기 때문에 정당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다. 2019년의 경우 2015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없는 해로 상대적으로 정당의 이합집산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2018년에 활동했던 정당들의 정책연구소가 그대로 활동하여, 총 7개의 정책연구소가 활동실적을 보고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자유한국당 소속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당 소속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당 소속 민주평화연구원, 정의당 소속 정의정책연구소, 민중당 소속 민중정책연구원, 우리공화당 소속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등 7개 정당 산하의 7개 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 인력 등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1) 연구와 정책개발, 2)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실적, 3) 교육과 연수활동, 4) 정책홍보, 5) 자료발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활동과 실적을 보고하였다.

이들 7개 연구소 중 1995년 설립된 여의도연구원과 2000년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민주연구원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 정당 중에는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가 그동안 이름을 바꿔왔지만 2012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 왔다. 여의도연구원의 전신인 여의도연구소는 1995년 집권여당의 정책연구소로 설립되었고,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경상보조금의 30%를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 만성적 재정난에서 벗어났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정책 연구기능이 위축됐으나 2008년 분리된 두 정당의 연구소를 통합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다른 정당들의 경우는 신생 정당들로 연구소의 활동

연혁 또한 길지 않다. 본 연구는 7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통해 이들 정책연구소의 조직, 재정 및 각종 활동과 실적을 비교 분석한다.

<표 2-1> 정책연구소의 변화 (2012-201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2008.8.27.)				민주연구원(2016.11.4.)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소 (1995.2.3.)	여의도연구원(2013.10.10.)						
바른미래당					국민정책연구원 (2016.3.9.)		바른미래 연구원 (2018.10.30.)	
					바른정책 연구소 (2017.4.7.)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2012.12.11.)			미래정치센터 (2015.8.24.)	정의정책연구소 (2017.11.7.)			
민주평화당							민주평화 연구원 (2018.3.15.)	
우리공화당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2018.12.11.)	
민중당							민중정책 연구원 (2018.1.1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책연구소 현황(<https://www.nec.go.kr/portal/bbs/list/B0000352.do?menuNo=200478>)

1. 정책연구소의 조직

1) 설립 및 운영근거

2019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7개의 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8조에 따라서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표 2-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7개의 정책연구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은 별도의 당규없이 당헌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에 연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헌에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지금까지 당헌에서 임기 규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는 당헌과 당규를 통해 운영되며, 당규에서 역시 연구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두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앙조직규정” 가운데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하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은 2019년 연말 현재 설립된지 2년이 넘지 않은 신생 연구원이며, 이들 중 바른미래연구원과 민주평화연구원은 소속 정당이 2020년 통합하여 새롭게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규정

	당헌	당규
더불어민주당	<p>[제57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0.8</p> <p>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없음
자유한국당	<p>[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19.1.17.</p> <p>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p> <p>2005.06.30. 제정</p> <p>2018.02.02. 개정</p>
바른미래당	<p>[제6절] 정책연구원 (제정) 2019.6.28</p> <p>제7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p>	<p>「중앙조직규정」</p> <p>2018.03.12. 제정</p> <p>2019.01.16. 개정</p>

	당헌	당규
바 른 미 래 당	제7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정 의 당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17.10.21.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호 「정책연구소」 2012.11.09. 제정 2019.05.04. 개정
민 주 평 화 당	[제107조] 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제정) 2018.2. ①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108조] 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제정) 2018.2.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우 리 공 화 당	[제50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3.2. ①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당헌	당규
우리공화당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④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민중당	[제45조] 정책연구소 (제정) 2017.10.15.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호 「정책연구소」 2017.11.01. 제정

2)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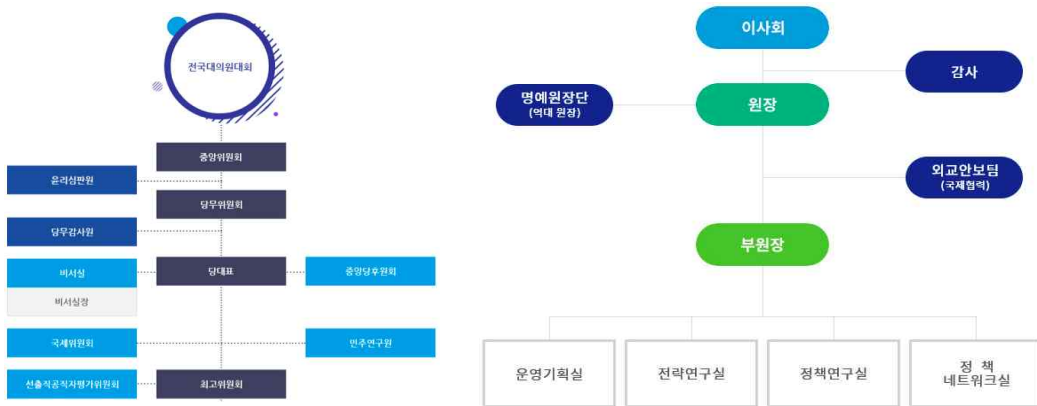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조직은 중앙당과 연구소의 관계, 그리고 연구소 자체 조직의 역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당헌, 당규, 또는 연구소 정관에는 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과 원장(소장) 선임 규칙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당내에서 연구소가 차지하는 위상을 규정하게 된다.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당규 또는 연구소 정관을 살펴보면 연구소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내부적인 운영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표 산하의 기관이지만 당대표 직속기관인 비서실, 중앙당 후원회 등과 달리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2-1> 왼쪽 참조). 민주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장 정책연구소(당헌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주연구원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며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당헌 제57조 1항).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당헌 제57조 제2항). 또한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당헌 제57조 제3항)하는 등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원장은 당헌에 근거하여 중앙당 당직자로서 전국대의원대회(제15조), 중앙위원회(제19조), 당무위원회(제22조), 최고위원회(제28조), 청년정책협의회(제52조)에 참석하며, 부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제15조), 중앙위원회(제19조),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제41조), 정책조정회의 위원구성(제48조) 등에 참석하는 등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중앙당에 대한 연구소의 정책 및 연구기능의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원장의 임기이다.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연구소 이사장을 맡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소장의 임기가 지켜진다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연구소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변재일(2012년), 민병두(2014년) 소장이 임기중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었으나 2년의 임기를 채웠고, 2016년 취임한 김용익 원장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되었다. 이어 2017년에 취임한 김민석 원장이 2년간 임기를 채웠고, 2019년에 양정철 원장이 직을 넘겨받았으나 2020년 4월 16일 총선 바로 다음 날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 두었다. 현재 원장은 올해 9월 취임한 홍익표 의원이 맡고 있다. 2012년 이후 취임한 원장들은 김용익 원장과 양정철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정해진 임기인 2년동안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존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 조직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theminjoo.kr/group.do>);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dp.or.kr/about/organiChart.php>).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 힘)의 정책연구소로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사무총장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그림 2-2> 왼쪽 참고, 여의도연구원의 지위는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연구원 내부 조직의 경우 2019년과 달리 원장 산하 상임고문이 폐지되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46조 1항),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당헌 제46조 2항). 2020년 2월 17일 개정된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원장,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 이내, 외부인사 중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등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제5조 1항).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하며(제5조 2항),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제6조 2항).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보다는 원장이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2조 2항), 여론조사 결과는 사무총장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여의도연구원은 민주연구원과 비교할 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원장과 중앙당의 관계로 볼 때 연구원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김영삼, 이회창 등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했던 시기에는 윤영오(1996년 취임), 윤여준(1998년 취임), 유승민(2000년 취임) 원장이 2년 이상 소장 또는 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및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2013년 취임해 2년간 근무한 이주영 원장을 제외하면 모든 원장들이 수개월에서 1년 내외의 기간동안만 근무하는 등 원장 임기가 짧고 원장이 자주 교체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장이 자주 교체된다고 해서 연구원의 중앙당에 대한 종속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개발을 하기위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2-2>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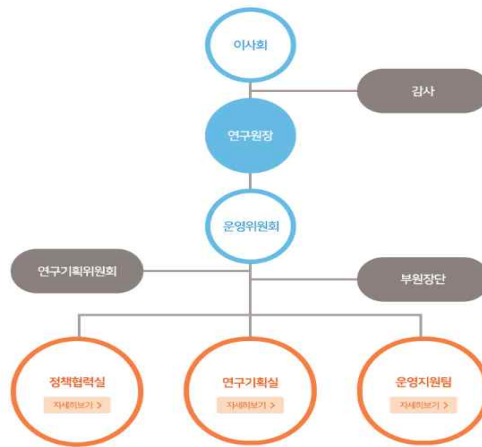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http://www.libertykoreaparty.kr>);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ydi.or.kr>).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이후에도 기존 양당의 정책연구소들이 별개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 10월 30일 바른미래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그림 2-3> 참고). 바른미래연구원은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74조),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당헌 제75조 1항).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75조 2항).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바른미래연구원 원장과 부원장 뿐만 아니라 연구위원과 연구원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당헌 제12조 2항), 당무위원회에는 원장과 부원장이 참여하는 등(당헌 제18조 2항)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며, 참여의 범위도 넓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당헌과 당규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해서 결성한 민생당의 당헌과 당규에는 연구소의 당내 위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의 정관도 내부 구성과 운영방침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홍경준 원장이 2년간 연구원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바른미래당이 2020년 합당을 통해 민생당을 결성하면서 혁신과미래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설립 초기 연구원이 리더십의 연속성을 유지했지만 소속 정당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림 2-3> 바른미래연구원의 조직도



출처: 바른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rmins.or.kr/html/15>).

정의정책연구소는 정당 체제의 변화 속에서 소규모 정당 소속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정당연구소 중 오랜 역사를 지닌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과 비교할 때 중앙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높은 연구소라고 볼 수 있다.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연구원 이사장을 맡는 다른 정당연구소들과 달리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이 당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어있다(당규 제11호의 제5조). 소장 및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당규 제11호의 제11조 2항). 2015년 손호철 현 이사장이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2017년 연임이 결정되었다. 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 연구를 진행한다는 당헌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연구소의 연구와 운영의 연속성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이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당규 제11호의 제8조). 다른 정책연구소들의 경우에는 당외

인사를 이사와 감사 등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는 당원만이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당규 제11호의 제10조).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소장이 “당 대회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18조 2항).

<그림 2-4> 정의당의 조직도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

민주평화연구원은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한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2018년 3월 15일 새롭게 출범하였다.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주평화연구원은 연구활동 및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당헌에 명시되어 있다(당헌 107조).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의 지명을 통해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당헌 108조 2항).

민주평화연구원 역시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원장과 부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되어 있다.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며(당헌 제12조 3항), 원장은 당무위원회(당헌 제23조 2항)와 최고위원회(당헌 제35조 2항), 부원장은 중앙위원회(당헌 제18조 3항)와 정책조정회의(당헌 제90조

2항)에 각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당헌에서 민주평화연구원의 지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출범 이후 천정배 의원을 원장으로 선임했으나, 2019년 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한 이후 원장 직이 공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통해 민생당을 창당해 전환기를 맞았다.

<그림 2-5> 민주평화당과 민주평화연구원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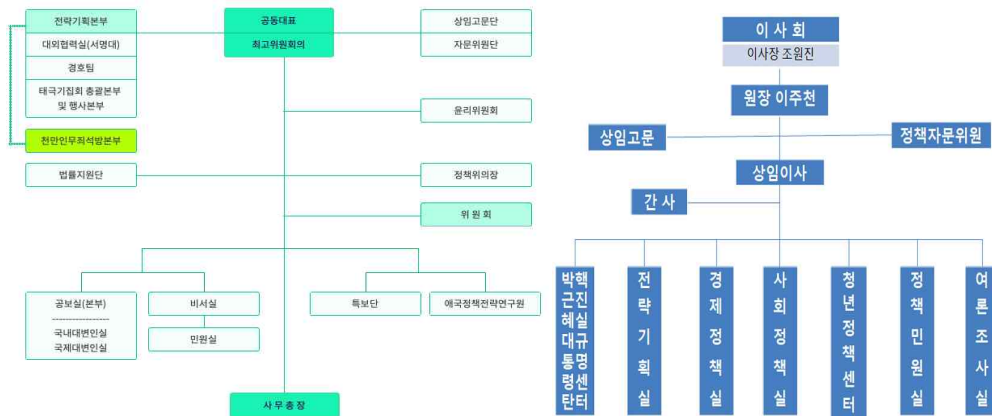


출처: 민주평화당 홈페이지(<http://peaceparty.or.kr/org.php>); 민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http://idp.re.kr/bbs/content.php?co_id=organization).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우리공화당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정당연구소로 당헌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했으며(제50조 3항),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소장의 임기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50조 4항).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공화당의 경우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특보단과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원진 당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이주천 원장이 2019년 창립 이후 원장을 맡고 있다.

<그림 2-6> 우리공화당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조직도



출처: 우리공화당 홈페이지(http://www.orp.or.kr/main/sub_menu/sub_01_org_chart6.php); 애국정책전략연구소 홈페이지(http://ppsr.co.kr/?act=info.page&pcode=sub1_1)

민중정책연구원은 민중당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정당연구소이다(당헌 제45조 1항). 연구원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당헌 제45조 3항),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규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2017.11.01. 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당헌 제45조 4항). 당규에서 정의정책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민중정책연구원 역시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당규 제13호의 제9조).

민중정책연구원의 경우 중앙당 조직에서 정책연구원의 지위와 연구원 조직에 관해 명시한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당헌과 당규 모두에서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연구원

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확보해야 한다. 2019년 각 정당의 정당연구소 정기보고 결과를 수합해 보면 7개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총 169명으로 2018년의 157명에 비해 10명 증가하였다. 이들 중 박사급 연구인력은 54명(32%), 석사급 60명(35.5%), 기타 55명(32.5%)로 나타났다. 고용된 직원 수는 총

9명으로 연구인력 이외에 여의도연구원이 1명, 민주평화연구원이 3명, 정의정책연구소가 2명, 애국정책전략연구소가 3명을 자체고용 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박사급 인력이 12명, 석사급 인력이 8명 증가되었고, 기타로 분류되는 석사학위 미소지자들이 8명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도 볼 수 있다.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소 간에 연구인력의 규모와 구성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29명(39.7%), 석사급 연구원 25명(34.3%), 기타 19명으로 총 73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할 때 총 인원은 3명 증가했으나 박사급 인력 7명, 석사급 인력 6명이 늘어났고, 기타 인력이 10명 줄어들었다. 민주연구원은 연구인력의 구성 면에서 전문성이 높은 인력의 비중을 늘리고 기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였다. 앞서 서술한 7개 연구소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서 박사급 인력이 총 11명, 석사급 인력이 7명 증가했는데, 민주연구원이 전문인력 충원 경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6명, 석사급 21명, 기타 29명으로 작년에 비해 박사급과 기타 인력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석사급 인원이 3명 늘어났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박사급 인력이 2018년 8명에서 2019년 11명으로 늘어났고 석사급 인력은 6명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평화연구원은 박사급 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석사급 인력이 1명에서 0명으로 감소해 연구원이 크게 위축되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총 연구원수 1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박사급 인력이 2018년 2명에서 2019년 3명으로 늘어나고, 석사급 인력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 줄어들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2018년에 비해 박사급 인력을 1명 늘려 2명이 되었고, 석사급 인력은 2명으로 유지되었다(2018년 자료는 2018년도 정책연구소 정기보고 자료를 참조하였음).

2018년 12월에 설립되어 2018년도 활동내역이 없었던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소는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으로 연구인력을 총 2인 규모로 확보하였고, 자체 고용인원이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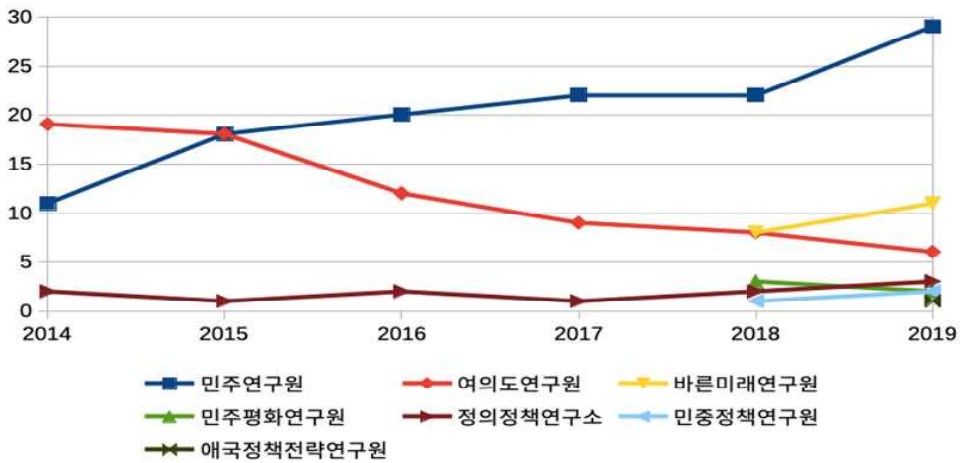
<표 2-3> 2019년 정책연구소 연구인력 현황

	연구원				직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민주연구원	29 (39.7)	25 (34.3)	19 (26.0)	73 (100)	-	-	0
여의도연구원	6 (10.7)	21 (37.5)	29 (51.8)	56 (100)	1	-	1
바른미래연구원	11 (57.9)	6 (66.6)	2 (10.5)	19 (100)	-	-	0
정의정책연구소	3 (30.0)	5 (50.0)	2 (20.0)	10 (100)	2	-	2
민주평화연구원	2 (100)	-	-	2 (100)	3	-	3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50.0)	1 (50.0)	-	2 (100)	3	-	3
민중정책연구원	2 (28.6)	2 (28.6)	3 (42.8)	7 (100)	-	-	0
합계	54 (32.0)	60 (35.5)	55 (32.5)	169 (100)	6	0	6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

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로 박사급 연구인력의 규모를 들 수 있다.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이후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2014년에는 여의도연구원이 19명의 박사 인력을 보유하고 11명을 보유한 민주연구원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은 2015년 박사급 연구원을 18명으로 대폭 늘린 이후 20여명의 박사 인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2016년 박사연구원 숫자가 12명으로 줄어들면서 연구역량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9년에는 박사급 인력이 6명으로 축소되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정당의 규모에 비해서 박사급 연구원의 숫자가 많은 편으로 2018년에 8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하고 2019년에는 11명으로 박사 인력을 늘렸다. 바른미래당이 정책 개발 및 연구인력에 의욕적인 투자를 하였지만 2020년 민생당으로 통합되면서 바른미래연구원이 혁신과미래연구원으로 개편된 만큼 바른미래당 시절만큼 연구인력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원은 소규모의 연구원이지만 꾸준히 박사급 인력을 2명 전후로 유지해 왔다.

<그림 2-7> 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수 변화(2014-20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그림 2-7>과 2019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분화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의 숫자가 7개로 늘어나면서 정당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의 총합 또한 늘어났다는 점이다. 소규모 정당의 연구소일지라도 최소한의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연구소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의 총합이 늘어난 것이다. 박사급 연구원의 합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정당들의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2019년 정책연구소 연구원의 경력별 분류

경력별 분류	7년 이상	2년 이상~ 7년 미만	2년 미만	합계
민주연구원	38 (52.1)	16 (21.9)	19 (26.0)	73 (100)
여의도연구원	47 (83.9)	2 (3.6)	7 (12.5)	56 (100)
바른미래연구원	3 (15.8)	12 (63.2)	4 (21.0)	19 (100)
정의정책연구소	3 (30.0)	7 (70.0)	-	10 (100)
민주평화연구원	-	-	2 (100)	2 (1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2 (100)	2 (100)
민중정책연구원	-	-	7 (100)	7 (100)
합계	91 (53.8)	37 (21.9)	41 (24.3)	169 (100)

2019년 현재 정당연구소별 연구원의 연구경력을 살펴보면 7년차 이상의 경력자 비율이 여의도연구원이 83.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민주연구원이 52.1%,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가 30%를 차지했다. 신생 정책연구소들 사이에서는 바른미래연구원이 15.8%로 7년차 이상의 경력자의 비율이 높았고, 민주평화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의 경우 모두 연구경력이 2년차 이하였다. 정당연구소들 중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가 연구경력이 많은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생 연구소들은 연구경력을 시작하는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연구원의 경력과 연구소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학력별 경력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재정

정당의 경상 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로 배분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후 정부의 보조금은 정당연구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으며 정당연구소의 재정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예산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규모에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재정 여건은 크게 차이가 난다. 2019년 정기보고에 나타난 각 정당연구소의 재정수입은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그리고 바른미래연구원이 각각 61억9천여만원, 44억9천여만원, 29억7천여만원을 소속정당으로부터 배분받아서 예산이 큰 연구소 균을 이루고 있다. 그 외의 연구소들은 10억 미만의 정부 보조금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받았다.

2018년의 경우 민주연구원(95.6%), 바른미래연구원(100%), 민주평화연구원(100%), 민중정책연구원(99.5%) 등이 예산의 대부분을 정당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여의도연구원(64.3%), 정의정책연구원(78.1%)이 상대적으로 정당지원금 의존도가 낮은 편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기타수입이 24.5%에 달했으며 정의정책연구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총 수입의 21.9%를 차지하였다(『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2018). 2019년에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당지원금 의존도가 낮아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여전히 정당지원금이 총수입의 92.3%를 차지하여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당보조금의 비중이 작년보다 더 낮아진 59.2%로 나타났는데, 2018년과

달리 기타수입은 0.5%에 불과했고 전년도 이월금이 40.3%를 차지했다. 바른미래연구원도 총소득에서 전년도 이월금의 비중이 (50.8%)를 차지하여 정당지원금의 비율이 48.6%로 낮게 나타났다. 민주평화연구원, 정의정책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은 총소득 대비 정당지원금의 비율이 70-80%로 나타났고, 전년도 이월금이 약 20-30%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여의도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당에서 전년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2018년에 창당되었고, 민중당도 2017년 말에 창당되어 전년이월금이 없었지만, 2019년의 경우는 전년 2018년 예산으로부터 이월금이 발생하였다.

지출액이 가장 큰 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으로 약 58억7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어서 민주연구원이 약 57억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약 18억2천6백만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정책연구소들은 10억원에 못미치는 액수를 지출하였다. 2018년에 총수입 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저조하였던 민주평화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이 설립 이후 활동을 지속하면서 수입 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75% 이상으로 나타나 양적인 측면에서 연구소 활동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바른미래연구원은 지출액 규모가 총수입 대비 29.8%에 머물러 활동이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 연구소인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은 총수입 대비 지출액의 규모가 85.1%와 77.4%를 차지했다.

<표 2-5> 2019년 정책연구소 활동경비(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잔액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	계		
민주연구원	6,197 (92.3)	231 (3.4)	287 (4.3)	6,715 (100)	5,712 (85.1)	1,003 (14.9)
여의도연구원	4,493 (59.2)	40 (0.5)	3,056 (40.3)	7,589 (100)	5,871 (77.4)	1,718 (22.6)
바른미래연구원	2,978 (48.6)	33 (0.5)	3,113 (50.8)	6,124 (100)	1,826 (29.8)	4,298 (70.2)
정의정책연구원	834 (80.8)	12 (1.2)	185 (17.9)	1,031 (100)	845 (82.0)	186 (18.0)
민주평화연구원	651 (70.4)	12 (1.3)	261 (28.3)	924 (100)	696 (75.3)	228 (24.7)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24 (87.4)	0 (0)	18 (12.6)	142 (100)	141 (99.4)	1 (0.6)
민중정책연구원	306 (75.0)	10 (2.5)	92 (22.5)	408 (100)	332 (81.4)	76 (18.6)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

<표 2-5>는 각 정당들이 정책연구소에 투입한 재원의 규모를 한눈에 보여준다. <표 2-6>에서는 각 정당들이 수령한 경상보조금의 규모와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보조금을 비교하여, 국고 보조금 중 정책연구소로 투입된 재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각 정당들이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정당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총액은 약 432억3천4백만원에 이르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약 138억2천2백만원을 수령했고, 뒤이어 자유한국당이 약 135억9천3백만원을,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99억2천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뒤이어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우리공화당이 각각 27억3천4백만원, 21억6천9백만원, 9억5천3백만원, 3천4백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들 정당은 정부가 지급한 경상보조금 중 30% 이상을 연구소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정당들이 30% 이상 지원 조항을 충족시켰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이 44.8%의 보조금을 연구소에 지원하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33.1%, 그 외의 정당들은 30%에 근접한 금액을 정책연구소로 지원했다. 우리공화당의 경우는 정부의 정당보조금의 액수가 적어서 정당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보다 연구소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원금이 정부 보조금 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표 2-6> 2019년 정당별 보조금과 정책연구소 지원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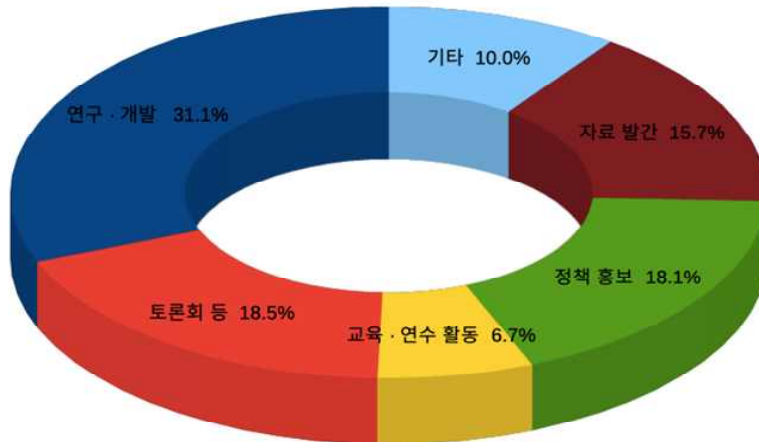
	지급액	지급총액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주 평화당	우리 공화당	민중당
경상보 조금	1/4분기	10,843.1	3,416.6	3,401.5	2,471.2	674.0	641.8	0.0	238.0
	2/4분기	10,851.4	3,413.5	3,405.8	2,463.4	682.2	641.4	7.1	237.9
	3/4분기	10,688.3	3,399.1	3,255.2	2,465.5	682.1	636.9	11.4	238.0
	4/4분기	10,851.4	3,593.0	3,530.8	2,526.7	695.7	249.2	16.1	240.0
	총액	43,234.1	13,822.3	13,593.3	9,926.8	2,734.1	2,169.2	34.5	953.9
	비율(%)	100.0	32.0	31.4	23.0	6.3	5.0	0.1	2.2
정 책 연 구 소 지 원 금	총액	15,583.2	6,196.7	4,492.9	2,978	834.2	650.8	124.4	306.2
	총액 중 비율(%)	36.0	44.8	33.1	30	30.5	30	360	32.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2. 2019년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연구 및 개발, 토론회, 교육 및 연수활동, 정책홍보, 자료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 분석대상 이 된 7개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활동실태별 실적을 합산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8>과 같다. 이들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와 개발(31.1%)이었고, 이어 토론회와 정책홍보가 각각 18.5%, 18.1%로 뒤를 이었다. 자료발간이 15.7%, 교육 및 연수활동이 6.7%로 나타났으며, 개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활동이 10%였다. 활동형태별 실적은 활동 건수를 조합한 것으로 예산 배분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다.

<그림 2-8> 2019년 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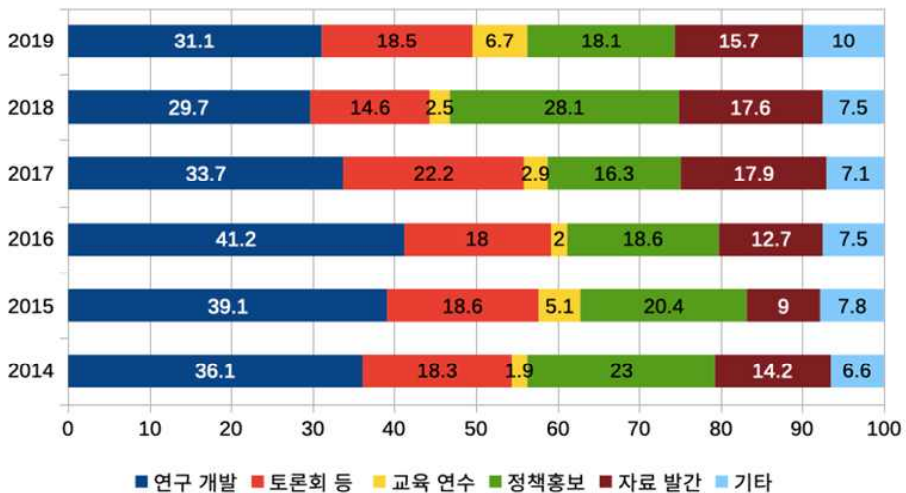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과 상대적 비율은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림 2-9>는 2014년 이후 연구소의 활동형태별 비율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연구 및 개발활동이 전체 활동건수의 30-40% 정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연구 및 개발활동이 연구소의 본연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 및 개발활동의 비중은 다소간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림 2-9>에 따르면 2014년 이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연구 및 개발활동이 늘어나면 정책홍보 및 자료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듦, 연구 및 개발활동이 줄어들면 정책홍보 및 자료발간 활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및 개발에 이어서 토론회와 정책홍보 활동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유형이다. 뒤이어 자료발간에 연구소가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수활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그림 2-9>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변화(2014-20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그림 2-9>에 나타난 정책연구소의 유형별 활동실적의 변화양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정책연구소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활동실적을 분류해 보면 서로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적 건수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이 515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했으며, 민주연구원이 363건, 바른미래연구원이 28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원이 264건, 민중정책연구원이 239건의 실적을 보고하였고, 민주평화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100건 미만의 실적을 거두었다. 연구인력의 규모로 보면 민주연구원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여의도연구원이 그 다음 규모이고, 바른미래연구원까지 상위 3개의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편이며 다른 연구소들의 연구 인력은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 연구소들의 실적이 결코 부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연구개발(22%)과 교육 및 연수활동(20.1%)에 비중을 두었다. 2018년에는 교육 연수활동 건수의 비중이 1.7%였는데, 2019년에는 20.1%로 급증하였고, 정책 홍보활동의 비중은 30.2%에서 3.9%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민주연구원이 교육 및 연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여의도연구원은 연구 및 개발활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51.3%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정책 홍보 활동이 22.9%, 그리고 토론회 등 행사가 16.1%를 차지하였다. 교육 연수활동은 민주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연구소와 유사하게 1.2%에 불과하다.

바른미래연구원은 토론회 개최와 정책홍보 활동에 각각 33.9%, 30.4%를 할애하였다. 이어서 자료 발간이 19.6%, 그리고 연구 및 개발활동이 12.1%로 나타났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연구 및 개발활동에 비해서 홍보 및 소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한 것이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연구 및 개발활동은 1건에 불과하고 토론회와 정책홍보에 많은 역량을 투여했다는 점에서 바른미래연구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진보정당 계열인 정의정책연구소와 민중정책연구원은 부족한 연구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개발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 개발이 연구소 활동의 42%를 차지하였고, 민중정책연구원은 24.3%로 나타났다.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에 연구와 개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으로 51.3%(264건)이다. 다음으로 정의정책연구소가 42%(111건), 민중정책연구원 24.3%(58건), 민주연구원 2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 주력한 연구소는 민주평화연구원과 바른미래연구원이다. 각각 47%(31건), 33.9%(95건)이며, 정의정책연구소와 여의도연구원이 뒤이어 17.4%(46건), 16.1%(83건)이다. 교육 연수활동에서는 민주연구원이 20.1%(73건)로 압도적이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도 각각 31.8%(14건), 5.9%(14건), 그리고 나머지 연구소들은 10건 미만의 실적을 보여주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교육연수활동에 할애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연구소의 규모가 작다보니 민주연구원과 비교할 때 건 수로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정책홍보는 바른미래연구원이 30.4%(8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중정책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발간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연구소는 민중정책연구원으로 31.4%(75건)에 이르렀고,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가 25.8%(17건), 23.5%(62건)을 기록했다.

<표 2-7> 2019년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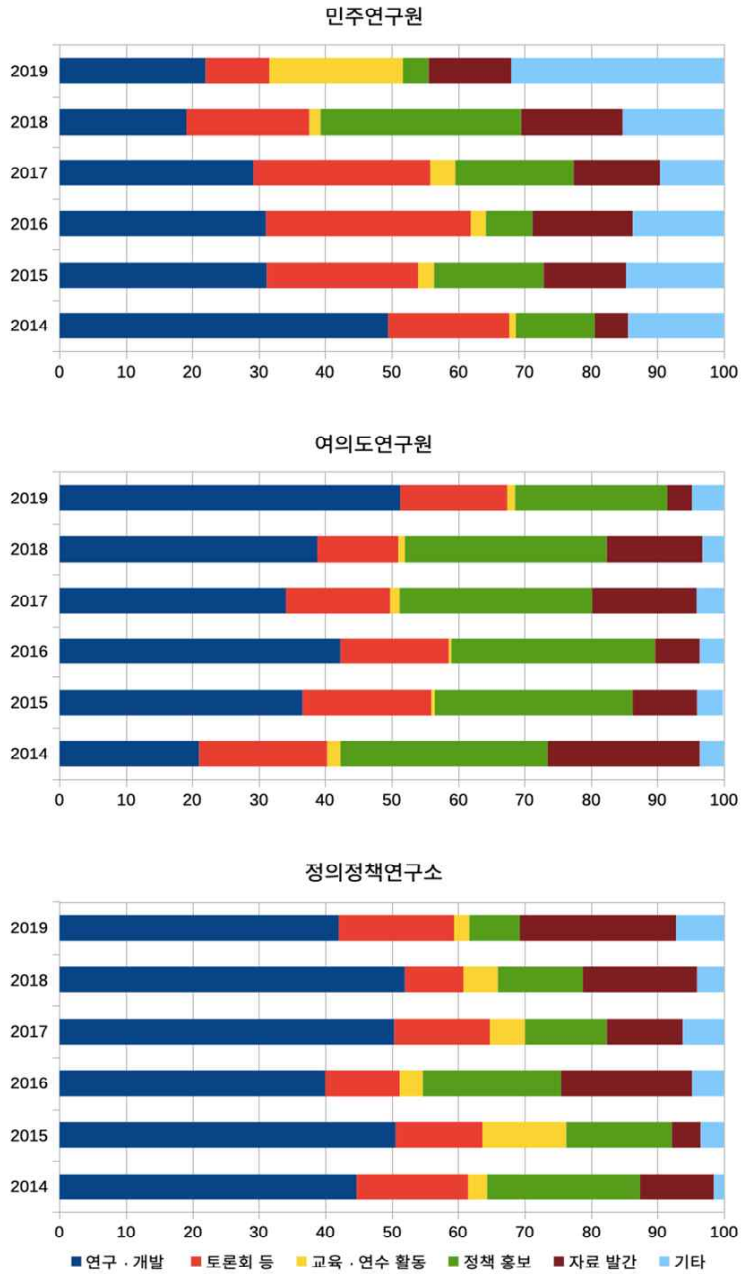
	연구·개발	토론회 등	교육연수 활동	정책 홍보	자료 발간	기타	계
민주연구원	80 (22.0)	35 (9.6)	73 (20.1)	14 (3.9)	45 (12.4)	116 (32.0)	363
여의도연구원	264 (51.3)	83 (16.1)	6 (1.2)	118 (22.9)	19 (3.7)	25 (4.9)	515
바른미래연구원	34 (12.1)	95 (33.9)	4 (1.4)	85 (30.4)	55 (19.6)	7 (2.5)	280
정의정책연구소	111 (42.0)	46 (17.4)	6 (2.3)	20 (7.6)	62 (23.5)	19 (7.2)	264
민주평화연구원	1 (1.5)	31 (47.0)	1 (1.5)	16 (24.2)	17 (25.8)	0 (0.0)	66
애국정책전략 연구원	2 (4.5)	4 (9.1)	14 (31.8)	9 (20.5)	5 (11.4)	10 (22.7)	44
민중정책연구원	58 (24.3)	33 (13.8)	14 (5.9)	59 (24.7)	75 (31.4)	0 (0.0)	239
합계	550 (31.1)	327 (18.5)	118 (6.7)	321 (18.1)	278 (15.7)	177 (10.0)	1771

출처: 각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9년 정기보고>에서 작성.

정책연구소별로 시계열적 자료를 통해 활동유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신생 연구소를 제외하고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원의 세 정책연구소가 2014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활동유형 구성의 변화를 꾀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

민주연구원은 2014년에는 연구 및 개발활동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그 비중이 2015년부터 30% 근방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 이후에는 20% 전후로 낮아졌다. 반면 토론회 개최는 2014년 이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늘어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정책홍보활동은 해마다 증가 혹은 감소폭이 큰 편이고, 자료발간은 2015년에 대폭 증가한 이후 꾸준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19년에 교육 및 연수활동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림 2-10>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 비중 변화(2014-20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 이후 연구 및 개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 약 20%이던 연구 개발 실적이 2018년에는 50%를 넘겼고, 2019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론회와 정책홍보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자료발간의 경우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연구원과 비교할 때 여의도연구원은 교육 연수에 미미한 비중을 할애해 왔고 2019년에도 여전히 교육과 연수실적은 저조하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소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개발실적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 수 있다. 2014년 이후 이 분야의 실적이 꾸준히 50% 전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 연구·개발 활동실적

2019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수행 주체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전체 550건의 연구 및 개발활동 실적 중에서 정책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실적은 총 469건(85.3%)이었고 외부용역 48건(8.7%), 그리고 공동연구 33건(6%)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개발 실적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었고, 바른미래연구원이 20.6%로 외부용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민주연구원은 총 80건 중 자체연구가 53건(66.3%), 외부연구가 9건(11.2%), 공동연구가 18건(22.5%)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총 264건의 실적 중 절대다수인 245건(92.8%)이 자체연구 결과였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총 34건의 실적 중에서 자체연구가 26건(76.5%)이고 외부용역 7건(20.6%), 공동연구 1건이었다. 정의정책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도 자체연구의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었고, 민주평화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모두 자체연구였다.

<표 2-8> 2019년 정책연구소별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자체	외부	자체외부(공동)	계
민주연구원	53 (66.3)	9 (11.2)	18 (22.5)	80 (100)
여의도연구원	245 (92.8)	7 (2.7)	12 (4.5)	264 (100)
바른미래연구원	26 (76.5)	7 (20.6)	1 (2.9)	34 (100)

	자체	외부	자체외부(공동)	계
정의정책연구소	95 (85.6)	15 (13.5)	1 (0.9)	111 (100)
민주평화연구원	1 (100)	-	-	1 (1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 (100)			2 (100)
민중정책연구원	47 (81.0)	10 (17.3)	1 (1.7)	58 (100)
합계	469 (85.3)	48 (8.7)	33 (6)	550 (100)

출처: 2019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

2019년의 연구 및 개발활동 실적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연구 건수는 2017년까지 증가해 오다가 2018년에 감소했으나 2019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연구 주체의 경우, 자체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2014-2019년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체	298 (86.4)	422 (87.4)	467 (85.7)	536 (91.0)	431 (88.9)	469 (85.3)
외부용역	23 (6.7)	23 (4.8)	38 (7.0)	41 (7.0)	40 (8.2)	48 (8.7)
자체·외부 (공동)	24 (7.0)	38 (7.9)	40 (7.3)	12 (2.0)	14 (2.9)	33 (6)
계	345 (100.0)	483 (100.0)	545 (100.0)	589 (100.0)	485 (100.0)	550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지금까지 연구 및 개발활동 실적을 건수를 단위로 측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개별 연구 건의 질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연구의 질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표 2-10>은 연구실적을 연구기간 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정책연구소들이 단기과제에 치중하고 정당의 중장기적 전략과 목표를 세우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9년 정책연구소들이 수행한 연구 및 개발실적 550건 중에서 1개월 이하의 단기과제가 81.8%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구 개발은 5%에 불과하였다. 정책연구소 별로 살펴보면 여의도연구원이 총264개 실적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256건이 1달 미만의 단기 실적이었다. 실제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루짜리 연구를 포함하여 1주일 이내의 단기과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박사급 인력이 대폭 감축되는 등 연구인력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진보계열의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에 소속된 정의정책연구소와 민중정책연구소는 1개월 이하의 단기과제의 비중이 72.1%, 67.2%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중장기 과제를 상대적으로 다수 수행하였다. 6개월 이상을 요하는 장기과제는 총7건 중 정의정책연구소에서 4건을 수행하였고, 여의도연구원과 바른미래연구원이 각각 2건, 1건을 진행하였다. 6개월 짜리 실적은 총 4건인데 이중 절반인 2건이 정의정책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고, 민주연구원과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각각 1건의 실적을 보고하였다.

<표 2-10> 2019년 연구·개발 활동실적의 추진기간별 분류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12 개월	12개월 이상	계
민주연구원	49 (61.3)	18 (22.5)	6 (7.5)	5 (6.2)	1 (1.25)	1 (1.25)			80 (100)
여의도연구원	256 (97.0)	6 (2.2)					2 (0.8)		264 (100)
바른미래연구원	26 (76.5)	5 (14.7)	2 (5.9)				1 (2.9)		34 (100)
정의정책연구소	80 (72.1)	8 (7.2)	5 (4.5)	9 (8.1)	3 (2.7)	2 (1.8)	4 (3.6)		111 (100)
민주평화연구원						1 100			1 (100)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1 (50)	1 (50)						2 (100)
민중정책연구원	39 (67.2)	6 (10.3)	13 (22.4)						58 (100)
합계	450 (81.8)	44 (8)	27 (4.9)	14 (2.5)	4 (0.7)	4 (0.7)	7 (1.3)		550 (1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서에서 작성.

<표 2-11>은 2014년 이후 신생 연구소를 제외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의 추진기간별 연구 및 개발활동 실적이 변화한 양상을 보여준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4년 이후 단기연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였고,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에는 단기연구의 비율이 76.7%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99.2%에 이르게 되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초기에 단기연구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6년에 중장기연구의 비율이 20.7%로 상승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장기연구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표 2-11> 2014~2019년 추진기간별 연구·개발활동 실적 변화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민주연구원	단기	140	93.3	137	95.1	99	92.5	148	91.9	112	91.8	73	91.2
	중장기	10	6.7	7	4.9	8	7.5	13	8.1	10	8.2	7	8.8
	소계	150	100	144	100	107	100	161	100	122	100	80	100
여의도 연구원	단기	66	76.7	115	82.1	163	85.8	128	90.8	158	97.5	262	99.2
	중장기	20	23.3	25	17.9	27	14.2	13	9.2	4	2.5	2	0.8
	소계	86	100	140	100	190	100	141	100	162	100	264	100
정의정책 연구소	단기	105	96.3	188	94.5	119	79.3	152	88.4	107	82.3	93	83.8
	중장기	4	3.7	11	5.5	31	20.7	20	11.6	23	17.7	18	16.2
	소계	109	100	199	100	150	100	172	100	130	100	111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 단기는 3개월 이하를, 중장기는 3개월 초과 기간 동안 추진된 활동실적임

2)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2019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 중 토론회 등 개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이다(그림 2-7). 2018년에는 간담회 개최가 해당 활동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토론회가 32.1%(105건)로 30.3%(99건)인 간담회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세미나가 19.3%(63건)이고 여론조사, 포럼 등을 진행했다. 강연회 등은 기타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토론회 개최 실적은 연구소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유형의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소는 바른미래연구소로 총 95건의 실적을 보고했고,

여의도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가 각각 83건, 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소별로 구체적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경우 토론회가 16건으로 45.7%를 차지하였고, 포럼 10회(28.6%), 간담회와 세미나 각 4회(각 1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간담회와 세미나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각 31건(각 37.3%)을 개최했고, 뒤이어 토론회를 20회(24.1%) 진행하였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여론조사가 토론회 등 개최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 25회(26.3%)를 실시했고,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가 각 18회로 뒤를 이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의 경우는 토론회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총 21회로 67.7%를 차지했고, 세미나를 7회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간담회를 25회 개최(54.3%)하고 토론회를 16회 열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간담회 21회, 토론회 11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표 2-12> 2019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분류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여론조사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6 (45.7)	4 (11.4)	10 (28.6)	4 (11.4)		1 (2.9)	35 (100.0)
여의도연구원	20 (24.1)	31 (37.3)		31 (37.3)		1 (1.2)	83 (100.0)
바른미래 연구원	18 (18.9)	18 (18.9)	12 (12.6)	18 (18.9)	25 (26.3)	4 (4.2)	95 (100.0)
정의정책 연구소	16 (34.8)	25 (54.3)	1 (2.2)	2 (4.3)	1 (2.2)	1 (2.2)	46 (100.0)
민주평화 연구원	21 (67.7)			7 (22.6)	3 (9.7)		31 (100.0)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3 (75.0)			1 (25.0)			4 (100.0)
민중정책 연구원	11 (33.3)	21 (63.6)				1 (3.0)	33 (100.0)
합계	105 (32.1)	99 (30.3)	23 (7.0)	63 (19.3)	29 (8.9)	8 (2.4)	327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서에서 작성.

* 정책연구소가 구분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타에 토크콘서트 등을 포함함

2014년 이후 정당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특별한 규칙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표 2-13>은 각 연구소들의 최근 활동실적을 수합한 결과이다.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포럼 모두 연도에 따라 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14년과 2015년에 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면, 2016년 이후 여론조사 수행 빈도수가 평균적으로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2014-2019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토론회	31 (8.4)	84 (21.9)	11 (26.8)	90 (25.0)	58 (24.4)	105 (32.1)
간담회 (자문회의)	26 (7.0)	50 (13.0)	11 (26.8)	143 (39.7)	109 (45.8)	99 (30.3)
포럼	22 (5.9)	27 (7.0)	9 (22.0)	14 (3.9)	9 (3.8)	23 (7.0)
세미나	62 (16.7)	52 (13.5)	8 (19.5)	32 (8.9)	31 (13.0)	63 (19.3)
여론조사	226 (60.9)	169 (44.0)	- -	64 (17.8)	12 (5.0)	29 (8.9)
기타	4 (1.1)	2 (0.5)	2 (4.9)	17 (4.7)	19 (8.0)	8 (2.4)
합계	371	384	41	360	238	32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각년도).

3) 교육·연수 활동실적

당직자,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2019년 현재 전체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 및 연수활동은 총 118건으로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연례 보고서는 정책연구소의 교육 및 연수활동을 당직자, 당원, 청년/대학생, 시민, 기타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류한다. 2019년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활동이 총 74건으로 62.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당직자 및 시민 교육에 정당들이 힘을 쏟았다. <표 2-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에 생긴 교육 및 연수활동 내역의 변화는 민주연구원이 주도하였다. 다른 연구소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 및 연수 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성과 또한 미미하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은 작년까지와 달리 올해에는 교육 및 연수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다.

<표 2-14> 2019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당직자	당원	청년학생	시민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0 (13.7)	61 (83.6)		1 (1.4)	1 (1.4)	73 (100.0)
여의도연구원	2 (33.3)	3 (50.0)			1 (16.7)	6 (100.0)
바른미래연구원	4 (100.0)					4 (100.0)
정의정책연구소	4 (66.7)				2 (33.3)	6 (100.0)
민주평화연구원	1 (100.0)					1 (100.0)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1 (7.1)		13 (92.9)		14 (100.0)
민중정책연구원	4 (28.6)	9 (64.3)			1 (7.1)	14 (100.0)
합계	25 (21.2)	74 (62.7)	0 -	14 (11.9)	5 (4.2)	118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서에서 작성.

* 당직자 대상연수에 연구소 자체 교육연수 포함됨.

2019년에 교육 및 연수관련 실적이 급증한 사실은 2014년 이후 이 분야 실적내역을 정리한 <표 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정책연구소들의 교육 및 연수활동 내역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9년에 이르러서 활동내역이 급증하였고, 그중에서도 당원 교육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표 2-14>에 나타난 것처럼 민주연구원의 교육 기능 강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2-15> 2014-2019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직자	8 (11.9)	9 (14.3)	16 (61.5)	12 (23.1)	16 (40.0)	25 (21.2)
당원	3 (4.5)	2 (3.2)	1 (3.8)	18 (34.6)	16 (40.0)	74 (62.7)
청년/대학생	5 (7.5)	1 (1.6)	- -	3 (5.8)	- -	
시민	- -	- -	- -	4 (7.7)	- -	14 (11.9)
기타	51 (76.1)	51 (81.0)	9 (34.6)	15 (28.8)	8 (20.0)	5 (4.2)
합계	67	63	26	52	40	11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4) 정책홍보 활동실적

정책연구소는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당원 및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2019년 전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중 정책홍보 활동은 18.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보활동에는 여의도연구원이 118건의 실적물을 보고했고, 바른미래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이 뒤를 이어 각각 85건, 59건의 정책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표 2-16>를 살펴보면 연구소 사이트와 SNS가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책자 배포도 중요한 홍보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크게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소별로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연구소에 따라서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지만, 여의도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민중정책연구원은 사이트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민중정책연구원은 특히 책자보고서를 배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게재와 SNS를 활용하는 방식은 <표 2-17>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2014년부터 대세로 자리잡았다.

<표 2-16> 2019년 정책연구소별 정책홍보 방법

	사이트 게재 (+SNS)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보도자료	책자배포 (보고서)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0 (71.4)		4 (28.6)		14 (100.0)
여의도연구원	40 (33.9)	14 (11.9)			64 (54.2)	118 (100.0)
바른미래연구원	60 (70.6)	25 (29.4)				85 (100.0)
정의정책연구소	4 (20.0)	16 (80.0)				20 (100.0)
민주평화연구원		8 (50.0)	4 (25.0)	1 (6.3)	3 (18.8)	16 (100.0)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1 (11.1)	8 (88.9)				9 (100.0)
민중정책연구원				59 (100.0)		59 (100.0)
합계	105 (32.7)	81 (25.2)	4 (1.2)	64 (19.9)	67 (20.9)	321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서에서 작성.

* 뉴스레터 등은 보도자료, 이메일 배포 등은 기타로 분류함.

<표 2-17> 2014-2019년 정책홍보 방법 비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이트게재 (+SNS)	160 (72.7)	215 (85.0)	132 (53.7)	172 (60.1)	319 (69.7)	105 (32.7)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54 (24.5)	34 (13.4)	92 (37.4)	69 (24.1)	98 (21.4)	81 (25.2)
보도자료	3 (1.4)	1 (0.4)	19 (7.7)	15 (5.2)	16 (3.5)	4 (1.2)
책자(보고서)	3 (1.4)	1 (0.4)	1 (0.4)	9 (3.1)	13 (2.8)	64 (19.9)
기타	- -	2 (0.8)	2 (0.8)	21 (7.3)	12 (2.6)	67 (20.9)
계	220	253	246	286	458	32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5)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2019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중에서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연구 개발, 토론회, 정책 홍보에 이어 네 번째이다. <표 2-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행물 중에는 자료집 발간이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고서와 연구논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관지 발행은 간행물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연구소에서 많은 역량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연구원은 자료집 20건과 보고서 18건을 발간했다. 그 외에 5편의 연구논문과 2건의 책자도 간행물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간행물 발행실적이 19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민중정책연구원, 정의정책연구원 등 진보 계열 정당들이 간행물 발간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연구소의 규모가 작지만 각각 75건과 62건의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민중정책연구원의 경우 대부분 당원들과 토론자료로 사용할 연구논문이고, 정의정책연구원은 인터넷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여 게재하였다(<표 2-18>의 기타 실적). 바른미래연구원도 간행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35건의 보고서, 13건의 자료집 등 총 55건의 간행물 발행 실적을 보고하였다. <표 2-19>은 2014년 이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16년부터 간행물 발행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연구소들이 보고서와 자료집 발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소가 당원 및 유권자들과 자신들이 생산한 성과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2-18> 2019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보고서	자료집	연구논문	기관지 (책자)	기타	계
민주연구원	18 (40.0)	20 (44.4)	5 (11.1)	2 (4.4)		45 (100.0)
여의도연구원	12 (63.2)	7 (36.8)				19 (100.0)
바른미래연구원	35 (63.6)	13 (23.6)		2 (3.6)	5 (9.1)	55 (100.0)
정의정책연구소	11 (17.7)	12 (19.4)	1 (1.6)		38 (61.3)	62 (100.0)
민주평화연구원		17 (100.0)				17 (100.0)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1 (20.0)	4 (80.0)				5 (100.0)
민중정책연구원		11 (14.7)	64 (85.3)			75 (100.0)
합계	77 (27.7)	84 (30.2)	70 (25.2)	4 (1.4)	43 (15.5)	278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9년 정기보고서에서 작성.

<표 2-19> 2014~2019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고서	58 (44.3)	29 (26.1)	94 (59.1)	108 (37.5)	104 (36.5)	77 (27.7)
자료집	47 (35.9)	48 (43.2)	49 (30.8)	50 (17.4)	70 (24.6)	84 (30.2)
연구논문	4 (3.1)	6 (5.4)	6 (3.8)	75 (26.0)	62 (21.8)	70 (25.2)
기관지(책 자)	8 (6.1)	11 (9.9)	10 (6.3)	21 (7.3)	8 (2.8)	4 (1.4)
기타	14 (10.7)	17 (15.3)	-	34 (11.8)	41 (14.4)	43 (15.5)
계	131	111	159	288	285	27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Ⅲ. 한국 정책연구소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

제3장은 해외 우수 싱크탱크와 정당의 정책개발 기능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의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준거점을 설정하고,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지위, 정당과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평가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각 정책연구소의 원장, 부원장, 연구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2019년도 정책연구소 대상 서면 인터뷰는 정책연구소와 중앙당 간의 관계, 정책연구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정책연구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정책연구소 운영 및 정책결정구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정책연구소와 정당의 관계

정책연구소 혹은 싱크탱크의 유형, 역할 및 기능은 각국의 민주주의 역사적 배경, 이념적 비전과 지향성의 여부, 자금의 출처(정부/민간)에 따라 다양하다. 싱크탱크(Think Tank)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공공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과 대학 연구소들을 포함한 싱크탱크와 정책 연구 기관을 통칭하고(McGann 2019), 협의로는 정부 및 정당, 시장기구에 독립적이며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의 행위자로서 활동하지 않는(Pautz 2010),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임유진, 서현진 2016, 106)을 지칭하기도 한다.

임유진·서현진(2016)은 정책연구소 혹은 싱크탱크 중에서도 정당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당 정책 연구소를 영향력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공재단형 정당 싱크탱크(public foundation), 당파형 정당 싱크탱크(factionalism), 비당파적 정당 싱크탱크(non-partisan), 민간형 정당 싱크탱크(private-advocacy)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공공재단형 정당 싱크탱크로는 독일 정당 정치재단 유형, 민간형 정당 싱크탱크로는 미국식 민간 싱크탱크가 대표적이다. 이와 차별되는 유형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와 기업, 이익집단, 민간 후원 등을 받는 싱크탱크 등 다양한 싱크탱크가 혼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집단과 연계를 갖는 정파적 싱크탱크가 이념의 확산과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스웨덴 유형이 있다.

2004년 법제화된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정당과

긴밀한 연관 하에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면에서 독일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박경미 외 2018년도 정책연구소평가 보고서)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정책연구소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의 정당 재단들에서 찾을 바 있다(신두철 2007, 2009; 한의석 2015). 하지만 독일의 정당 재단들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연수가 주요 활동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주요 활동이 정책 연구 및 개발, 네트워킹이며 정책적 영향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형 민간형 정당 싱크탱크와 비슷하지만 미국형 싱크탱크는 초당파적(조진만 2014 참조)이라는 점에서 소속 정당의 이념과 비전의 정책적 연구와 확산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와 차별적이다. 즉, 지난 16여 년간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흐름 속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당파적 연구 조직이자 정책 개발기관으로서 ‘당파적 싱크탱크’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및 시민사회 정책 연구소 활동 조사를 통해 정책연구소 순위를 발표하는 미국 펜실베이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e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의 『2019 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Global Go To Think Tank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싱크탱크는 61개로 세계 26위 규모이지만 활동 조사 평가 상 상위 랭킹(1~175위)에 오른 연구소들은 대체로 경제 개발 관련 국책연구소들-KDI(19위), KIEP(32위), EAI(67위)-이다(68-74).¹⁾ 반면 싱크탱크 수나 규모, 영향력 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인 미국은 1871개 싱크탱크가 존재하며, 헤리티지 재단은 세계 1위의 싱크탱크에 올라있다. 독일의 경우 218개에 이르러 세계 6위 규모인데다 상위 랭킹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15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17위), 국제안보연구소(SWP)(29위), 하인리히 뵐 재단(89위) 등 정책연구소들이 올라있으며, 그 중 주요 정당과 연관이 있는 정당정치재단이 3개에 이른다. 북유럽에서 가장 많은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90개의 싱크탱크를 보유해 숫자로는 세계 14위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위 랭킹에 올라있는 싱크탱크는 스톡홀름 국제조사연구소(Stocklm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SIPRI)(31위)와 Timpro(93위) 두 개이다. SIPRI는 정부 출연 연구소이고, Timbro는

1) The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GGTT)는 각국의 싱크탱크들을 자원, 활용, 성과, 영향력 지표 등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매년 글로벌싱크탱크리포트(Global Go to Think Tank Report)를 발간한다.

기업지원을 받는 신자유주의 싱크탱크이다(Allern and Pollack 2020, 2).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해 한국의 정치분야 정책연구소는 규모와 활동, 성과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겠다.

2.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특징 및 역할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이념,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정당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정책 현안에 대한 전략 마련과 선거 공약 개발 및 선거 공약집 설계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여론조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즉, ‘당파적 싱크탱크’로서 소속 정당의 이념과 비전을 연구하고 정책 아이디어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정당 정책 및 공약 지원기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사회 속의 정당 또는 “유권자 속의 정당(the party on the ground)”(Mair 1994) 역할이 취약한 한국 정당의 특징과 연결된다. 독일 정당에서 설립된 싱크탱크인 정치재단들이 독립적 지위를 보유하고 정치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정당 이념 및 정책의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대체로 정당의 정치적 위치, 당면과제, 현행 주요 이슈 등에 치중해 정책 개발 및 정당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정책연구소 법제화 이래 정당 정책연구소의 정책 전문성 강화 및 정책개발 역량의 향상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과 동시에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일 뿐 재정적 독립성이 떨어지고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수반되었다(서현진·임유진 2016; 서현진 2012; 조진만 2014).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정부의 정당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의 역할에서 공공성을 배재할 수 없다. 싱크탱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역사적으로 싱크탱크가 “정치엘리트간의 합의를 이끄는 역할과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동원”(Parmer 2004, 19)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 가능하다.

첫째,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초당파적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에 충실한 정책연구소에서 나아가 정당 정책연구소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둘째,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 단체들을 포함한 정책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속이다. 이념지향성에 기초해 혹은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결책을 주창하는 주창적 싱크탱크(advocacy think tank)(Thunert 2001)와 같이 학계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거나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정책개발을 수행,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에 대한 자문은 한국의 연구소들이 공히 수행하지만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적극적이며, 시민사회 단체 및 특정 이익집단과의 협력 및 공동 정책 개발은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이 활성화해온 바 있다.

셋째, 독일의 정당정치재단과 같이 교육 및 교류협력, 네트워킹 등을 통해 정당 이념 및 정책을 확산하는 민주주의 교육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시민정치교육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박경미 외 2018; 신두철 2007, 2009), 현재까지 소속 정당 간의 이념 갈등과 정쟁으로 인해 정당연구소간의 교류 협력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글의 3절 서면인터뷰 분석 참조).

한국 정책연구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적 역할 제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II장의 2019년도 정책연구소 실적분석과 별도로 각 정책연구소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는 정책연구소와 정당간의 소통방식,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의견을 구함으로써 정책연구소 의사결정 방식의 독립성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당파적 특징과 제한적 기능과 역할 면에서 2019년도에는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3. 정책연구소 서면 인터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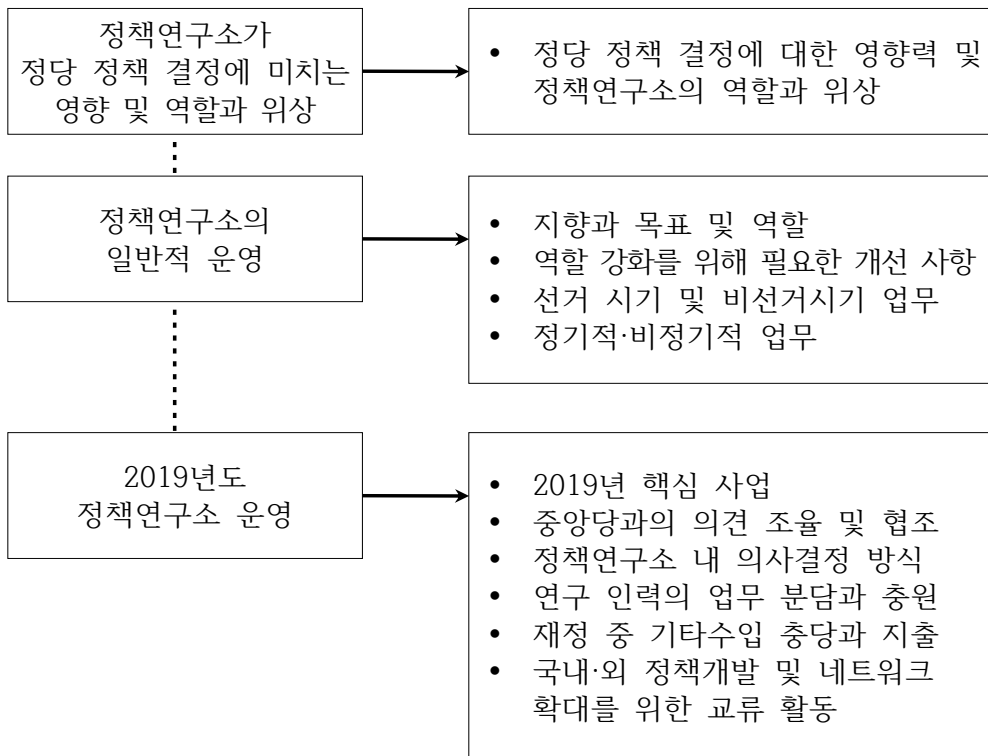
정책연구소 서면 인터뷰는 2020년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되었다. 서면 인터뷰 질문은 <그림 3-1>과 같이 크게 세 주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과 위상’에 관한 것이다. 2004년 정당법에 의해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이 법제화된 이래로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역량 강화 및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 번째 항목은 정책연구소 구성원으로서 정당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한국 정책연구소의 특징상 정책연구소의 정책 산출 능력 향상과 정책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항목이다.

두 번째 주제는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에 대한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 재정 자립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이유, 정책연구소의 일상적 업무와 사업에 대한 총 4개의 질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주제는 ‘2019년도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것이다. 총 6개의 질의 항목은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 정당과 정책연구소의 소통 절차 및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1> 서면 인터뷰 주제 및 질의 항목



서면 인터뷰 방식은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대상인 6개 정책연구소들(온·오프라인 연락이 되지 않는 민주평화연구원 제외)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등 총 3명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명칭은 본 연구 보고서가 작성된 2020년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답변한 정책연구소 응답자들을 직급별로 표시하면 <표 3-2>와 같다. 결과적으로 정책연구소의 대내외적 상황에 의해 응답자 수 및 직급의 차이가 있었고, 응답자 직급 공개를 원하지 않는 연구소도 있었다. 따라서 서면인터뷰 결과는 각 정책연구소들이 제출한 연간활동 내용 분석을 정책연구소 구성원들의 상세 운영 현황 내용과 견해를 참고함으로써 보충하는데 의미가 있다. 정책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견해와 평가 내용을 직급별로 수집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연간활동을 파악,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표 3-1> 서면인터뷰 응답자 현황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합계
민주연구원	-	-	1	1
여의도연구원	-	-	1*	1
정의정책연구소	-	1	1	2
혁신과미래연구원	-	-	1*	1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	-	1
진보정책연구원	1	-	2**	3
합 계	2	1	6	9

* 연구원 내부 방침 상 직책 미기재

* 연구원 내부 방침 상 직책 미기재

** 1명은 정책실장

※ 민주평화연구원은 온·오프라인 연락이 되지 않아 본 서면인터뷰를 수행하지 못함.

1)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과 위상

첫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의 정당 내 역할과 위상을 묻는 동시에 향후 위상 제고와 영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질문 문항은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당과 밀접한 연관에 있는 정책연구소들이 정당이 필요한 정책 연구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정책연구소의 정당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연구소의 영향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요건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행법상 정책연구소가 출판사업, 후원금 모집, 학술 사업 등을 통한 독자적인 수익의 창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충과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재정 독립성에 제한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 응답자는 정책역량강화와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당을 통한 정당교부금 배부가 아닌 정책연구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응답자는 당지도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정책연구원의 종속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정책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의도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 혁신과미래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과 같은 소수 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진보정책연구원 응답자들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예산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원내 교섭단체위주로 지원하는 현행법을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등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답자들 다수가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 산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데 대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 하지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으며, 정당이 당면한 과제(선거 등)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관으로서 종속적 지위에 대한 불만 또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제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 3-2>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제언**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소의 재정 및 인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수준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여의도연구원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법적 제약으로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정의정책연구소	정당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①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총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하며 ② 정당교부금 배부를 정책연구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소 독립 후원회 조직, 출판활동, 교육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재정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③ 시민 대상의 정치교육 제한을 개선하여야 함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구소가 중앙당에 부속된 하위부서처럼 운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운영상의 효율성 증대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당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후원금 모집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법·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정책연구소가 당 지도부 입장을 대변하는 현실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 정책연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자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 및 정책 연구 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진보정책연구원	정책연구소가 진보당의 주요 정책 입안, 선거공약 수립 등 정책결정에 실질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책연구소는 정당교부금 규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고보조금이 원내교섭단체 위주로 지원되므로 소수정당은 정책연구소 운영이 어려운 현실. 예산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출 기준으로 배분하는 등 변화 필요

2)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두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의 장·단기적 목표 및 역할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이다.

답변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이념,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정당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정책 현안에 대한 전략 마련과 선거 공약 개발 및 선거 공약집 설계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여론조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당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을, 정의정책연구원과 진보정책연구원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비전과 의제 연구를 강조했다. 전체 의견을 종합하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은 정당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보유한다기 보다는 정당의 필요에 따라 정책 개발과 선거공약 설계, 당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소수 정당의 정책연구원은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비전을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3> 정책연구소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을 연구하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며 새로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여의도연구원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시민교육, 청년지도자 양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및 지식네트워크 구축, 여론조사 활동 등의 주요 사업들을 수행. 당면 목표로는 제1야당으로서 정책 혁신 선도, 연구원 변화와 혁신, ‘국민의 힘’ 정당명 변경에 따른 당의 혁신과 변화 지원
정의정책연구소	궁극적으로 정의당의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진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으로서 가치 및 비전, 아젠다 및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통적 목표인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 노동존중사회, 한반도 평화 등을 결합시켜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신장과 더불어 탈탄소 그린 뉴딜을 위한 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함. 구체적 사업으로는 정책연구와 개발, 연구 및 토론회 개최, 출판 및 정보화 사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

	응답내용
혁신과미래 연구원	당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입법과제와 현안에 대한 연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대안 제시 및 당론 수립,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생성 및 검증, 각종 선거 핵심공약 수립 및 공약집 설계 등 수행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시민의식 양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를 위해 일반 당원 및 국민을 훈련·교육하는 역할을 하며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해 당원 교육을 강화
진보정책 연구원	정당의 주요 활동과 관련한 정책 및 선거 공약 개발, 한국 사회 진보적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과 대안의제 연구 및 제시, 주요 정책 교육, 정책네트워크 구성

세 번째 질문은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이다.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손꼽히는 사항은 재정자립성이다. 6개 정책연구소 중 5개 연구소 소속 응답자들이 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있는 연구원 충원과 유지가 필요하며 연구원의 안정적이며 독립적 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상 정당교부금 가운데 정책연구소로 지급되어야 하는 30%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을 경유하지 않고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이 아닌 정책연구소가 인사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구체적 제안을 했으며, 진보정책연구소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3-4>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재정 자립성,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순으로 중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 자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도 가능
여의도연구원	가장 시급한 사항은 재정 자립성 확립이며 이로서 정당으로부터 독립성 해결될 수 있음. 정책연구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정당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정당보조금의 약 30%가 정책연구소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0% 활동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전용되고 있음. 국고보조금을 당을 거치지 않고 정당연구소로 직접 지급하거나 선거법을 개정해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함
정의정책연구소	재정적 독립 및 인사 독립성이 가장 중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17개 상임위 대응 최소 1명씩 총 17명의 정책연구인력이 필요하고, 정책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구소가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분한 자체 연구인력 확보, 외부 정책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킹 형성, 타 정당 연구소와 정책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하부기관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 필요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연구/전문 역량 강화, 인사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당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당과 연구소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 재정적 차원에서 당원이나 국민들의 직접 성금에 의존해야 독자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 시급.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 선발을 위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이 교섭단체이므로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소는 재정이 미흡하여 정책연구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변경 혹은 당비와 매칭펀드제, 또는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 대책 필요

정당교부금을 정당을 경유해서 지급받는 현행 제도와 정책연구소 지급분이 정당 필요에 따라 유용됨으로써 만성화된 정책연구소 자금난과 이로 인해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의 충원과 유지가 어려운 현실, 정당에 대한 인사권의 종속성 등 재정자립성과 조직 독립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존 연구와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미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이재철·당위남 2018, 서현진·임유진 2016, 박경미 외 2019). 하지만 여전히 법·제도적 개혁이나 정책연구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의 업무와 사업 내용에 대한 것으로 선거 시기와 선거없는 시기로 나누어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질문은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이다.

선거 시기에 정책연구소들은 선거체제로 전환된다. 주로 선거 전략 및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 정책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은 통상 선거 3-4개월 전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운동가 등)을 초빙하여 연구원 산하 특별 조직인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국회의원과 당 기구를 참여시켜 정책/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한다.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때는 선거 전 당 정책위원회가 주도한 <공약개발단>을 출범시켰고, 여연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참여해 당 국회의원, 정책기구 등과 함께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여연 차원의 <비전위원회> 구성없이 직접 당 정책위와 협의해 선거공약을 개발했다. 선거에 임박해서는 정책이슈별 당의 입장을 요약 정리해서 ‘포지션 페이퍼’를 발행한다. 소수정당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선거법 숙지 교육을 정책연구원이 담당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표 3-5> 정책연구소의 업무 및 사업(선거 시기)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선거공약 수립, 정책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각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원	선거 3~4개월 전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된 연구원산 하 특별 조직인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정당 국회의원과 당 기구를 참여시켜 정책/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성과를 분야별로 집대성하고 출판해 당 정책위의 정책과 공약 개발에 참고하도록 함. 선거일에 임박해 정책이슈별 당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포지션페이퍼’ 발행 및 개별 후보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참고자료 작성 등 선거 지원업무에 집중
정의정책 연구소	각종 당원·유권자 대상 정책 및 정치의식 관련 여론조사, 중앙당 공약개발 지원,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및 시도당·지역위 지원사업을 진행
혁신과미래 연구원	연구원 조직을 정책·공약 개발 등 핵심역량과 총선과제 중심으로 재편, 당의 선거전략 및 선거공약 개발, 유권자 지형분석 및 데이터 선거시스템 구축, 정세분석 및 전략과제 기획, 정책 전문가들에게 정책자문과 정책제언을 받아 선거 공약화, 각 지역별 선거환경 분석 및 예비후보자용 선거 기초데이터 정비 작업 수행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선거에 필요한 정책 개발, 선거법 숙지 교육
진보정책 연구원	정책공약 개발, 교육, 발표 및 선거 지원

선거 없는 시기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크게 정책 연구 및 개발, 여론조사, 이슈 및 현안 분석, 네트워킹, 교육 및 연수 등으로 나누어진다. 상시 업무로는 공통적으로 정책보고서 작성,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책 개발, 국내외 연구소 및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여론조사 실시 등을 수행한다. 각종 현안 및 이슈를 다루는 이슈브리프(여의도연구원), 이슈·동향보고서(정의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혁신과미래연구원), 정책과논점(진보정책연구원) 등을 발행한다. 서면 인터뷰 결과로는 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사업은 주요 업무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정책 연구소가 제출한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보고> 자료를 확인하면 여당 소속의 민주연구원(73회)을 제외하고 혁신과미래연구원(1회), 여의도연구원(6회),

정의정책연구소(6회) 3개 정책연구소는 2019년 한 해 동안 10건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 연수를 실시했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14회), 민중정책연구원(14회)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답변에서는 중·대 정당 정책연구소 응답자들이 정책 연구 및 개발, 여론조사, 이슈 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소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소수 정당 정책연구소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원의 일상 업무로서 교육 사업을 강조한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계몽 및 당원 교육을 위한 <정치아카데미>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책아카데미>, 광역 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책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양 당의 교육·연수 실적을 확인한 결과는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정책연구소의 업무 및 사업(선거 없는 시기)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각 분야별 정책보고서 작성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실시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와 연구원별 개별 연구로 구분되며 공동연구로는 ‘정부정책 평가’, ‘여연정책연구’, ‘이슈브리프’, ‘현안 보고(일간, 주간, 월간)’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인별로 세미나 및 비공개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로 정부정책 평가, 자료집 제작
정의정책연구소	여론조사 분석 및 종합, 중장기 의제 사업 및 전략개발, 분야별 연구 및 이슈·동향보고서 작성 및 토론회 추진, 각종 포럼운영, 외부전문가 네트워킹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슈페이퍼’ 작성 및 발송,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중·장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당의 정책 개발, 외부 전문가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킹 구축, 정책전문가 대상 각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각종 이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주제 발표를 통한 국민계몽과 홍보활동,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계몽 및 당원교육
진보정책연구원	정책 현안 분석, 주간 <정책과 논점> 발간, ‘정책토론회’ 주관, 당내·외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 정책교류, 정책 교육 사업으로 ‘정책아카데미’, ‘광역 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책교육’ 등 수시 실시

<표 3-7>은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을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

사업으로 나누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정기적 사업으로는 정책보고서 작성, 정기 간행물 발간, 각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실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실시되며 비정기적으로는 현안 및 중요 사안 보고 작성, 토론회 및 간담회, 정책 의제 형성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기 사업은 정책연구소별로 유사한데 여의도연구원은 연구성과를 간행물로 발간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류별로 정기간행물 형식의 <이슈브리프>, 보고서 양식의 <현안보고> 및 <주간 동향>, 소책자 형식의 <여연정책연구> 등 총 4종을 발행한다. 이슈브리프는 당지도부, 국회의원, 당원에게 배포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지역 순회 <정치아카데미> 운영, 정의정책연구소는 진보담론 제시를 위해 당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큰크림작업반’을 운영해 한국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당의 전략, 장기적 전망, 성장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진보정책연구원은 격년 개최되는 ‘정책당대회’ 의제 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책연구소들의 비정기적 사업은 대체로 선거 시기 혹은 정치 현안 발생에 따른 분석 보고서 작성,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이다.

<표 3-7>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민주연구원	분야별 정책보고서 작성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실시	현안 및 중요 사안의 토론회 및 간담회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작성 및 책자 발간과 공개 토론회 및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각 실별로 현안 발생 시 일간, 주간, 월간 등 부정기적으로 <현안보고> 작성, 내외 정책전문가 협업에 의한 장기 심층 연구상과를 도서형태인 <여연정책연구>로 발행

	정기적	비정기적
정의정책 연구소	각종 연구조사사업 및 토론회 개최, 당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큰그림 작업반’ 운영. 당원·유권자 정책수요 및 정치의식 조사, 월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발간, 여론동향 리포트, 이슈브리핑 및 보고서, 칼럼 등 작성. 분야별 포럼 및 외부전문가 네트워킹, 청년기자단 및 청년포럼 운영, 노동 및 산업계 연구소와 연계 하에 총선 정책 생산 네트워크 구축	각종 정책수요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 선거대응 여론조사 실시. 지역구 출마 후보 적합도 조사, 전국여론조사, 정당지도 편성전략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치인식조사 등 실시
혁신과미래 연구원	정책 콘텐츠(정책 마케팅 및 대응논리) 개발 및 당 활용 지원, 이슈페이퍼 발행(현안과 이슈 분석과 대응), 정책간담회(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 및 활동성 배양), 홈페이지 운영, 반년간지 발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 토론회, 당 지도부의 요구에 의한 메시지 또는 자료 작성,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진행 등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정치아카데미’를 개설, 지역을 이동하면서 운영	당 사무처의 전략회의에서 필요한 안건 분석, 토의·
진보정책 연구원	<정책과 논점> 발행, 총선정책 공약 수립 해설·교육, ‘비교섭단체 상·하반기 정책연구용역 집행’, ‘정책현안토론회’, 세미나 개최, 정책당대회 정기(격년) 개최	2019년 정책당대회 의제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층계층 의제 확대회의 운영, 강령제정위원회 참여, 주권위원회 운영, 청년정책팀 운영, 새로운 노동정책 연구개발해 전체 당원 교육 실시, 2020 총선에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사회적 의제화

3)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다섯 번째 질문은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이다. 2019년 대부분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은 2020년 실시될 제21대 총선에 대비하여 소속 정당의 비전, 정책 개발 및 공약 연구를 핵심 사업으로 했으며 주요 정책의제는 분야별 차이가 있지만 주로 경제 및 대북

정책이었다. <표 3-8>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제1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부 정책 비판과 이에 기초하여 대안적 비전을 개발하고 대항 담론과 정책화에 주력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기능한 반면,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은 연구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소속 정당의 이념 및 비전을 정책화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토론회 등을 수행했다.

여의도연구원은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수립하고 정책화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초, 당의 경제정책(“징비록”, “민부론”)을 구상하고, 대북통일(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반, 안보통일정책(“안보실정백서: 안보가 안보인다”, “민평론” 등)을 당과의 협의 하에 개발 및 발표하는 등 대안 담론을 형성하고, 경제, 통상, 외교안보, 대북통일,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 분야별 <포지션 리포트>를 발행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립하고 민주당과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21대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총선 대비 상임위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고, 이후 당 정책위와 협력 하에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보수정권 9년의 재평가를 통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정권의 집권기간을 회고하며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시사점 발견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 대선이후 야당의 위치에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의존도와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9년도 실적보고를 통해 여의도연구원의 연구개발 건수는 264건으로 민주연의 80건, 정의연의 11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책홍보 건수 또한 118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야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대안 정책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홍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정책연구개발 활동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비중이 큰 분야는 2019년 기준으로 할 때 경제지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 분야와 핵위기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북 관계라고 답변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핵심 사업은 첫째, 21대 총선 대비 차원에서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재정비전 2020년 예산(안), 21대 총선거치와 비전, ‘수권정당의 길’ 보고서 작성 및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둘째, 국민살림살이 향상을 위한 대안 경제 담론과 정책 제시, 셋째,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사업의 수행 등 이었다. 진보정책연구원의 주요 정책의제는 재벌개혁-재벌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연구, 청년-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분석 및 민중당 대응방향 연구, 고용보험 개혁-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방안, 노동기본권 강화-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농업개혁-농지법 개정(안),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대학-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보건의료 - 민중당 보건의료_건강권 공약 개발, 재벌개혁 세부방안 -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평화군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등이다.

연구원의 정기적/비정기적 사업, 2019년 핵심 사업 및 주요 정책의제 등을 통해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은 소속 정당의 이념 및 지향에 기초하여 정책 및 선거 공약 등을 연구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당파적 정책연구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8>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 - 새 100년의 꿈, 진정한 광복 2045> 발간 (5월) • 21대 총선 대비 정책 및 공약 연구
여의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 정책 실적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수권정당으로서 대안 마련 • 분야별 포지션 페이퍼 및 현안보고서 작성 • 21대 총선 대비 정책공약 개발 • 보수정권 9년의 재평가를 통한 대안 모색

	응답내용
정의정책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총선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 국민 살림살이 향상을 위한 대안 경제 담론과 정책 제시, 기후 급변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 등 입안 •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사업 수행: 21대 총선 대비 당원대상 정치의식조사 및 FGI 조사 • 외부정책 네트워킹 유지 발전을 위해 평화포럼, 청년포럼, 경제 포럼 운영
혁신과미래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대 총선 관련 당 선거전략 및 선거공약 개발 • 연구원 조직을 정책·공약 개발 등 핵심역량과 총선과제 중심으로 재편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구 • 유권자 지형 분석 및 데이터 선거시스템 구축 • 각 지역별 선거환경 분석 및 예비후보자용 선거 기초데이터 정비 작업 수행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 정책과 문재인 정부 정책 비교 • 4.15 총선에 대비한 정책개발 연구 • 문재인 좌파정권에 대한 비판과 정부 실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진보정책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및 외교통일 분야 정책 개발 • 정책당 대회 준비 • 20대 총선 공약개발- 주요 정책의제: 재벌개혁, 청년, 고용보험 개혁, 노동기본권 강화, 농업개혁, 기후위기, 대학-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보건의료- 민중당(현 진보당) 보건의료·건강권 공약 개발, 재벌개혁, 평화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여섯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와 중앙당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설문 문항은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이다. <표 3-9>의 응답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소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연구계획 및 사업 결정, 모든 의사결정 절차는 실질적으로는 중앙당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이루어진다. 정의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으며, 원장 및 부원장은 중앙당 대표에 의해 임명되거나(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제외), 당 국회의원이 맡는다. 즉, 일부 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정책연구원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원장이 중앙당에서 임명되고 이사장 및 이사회가 중앙당 대표단으로 인적으로 중첩되는 등(애국정책전략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중앙당과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 여부 및 실시 횟수와 무관하게 중앙당과 정책연구소간 의견조율 및 협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과 같이 사안에 따라 당대표-당지도부-연구소장, 혹은 중앙당 사무총장-연구실장 및 연구기획실장이 정기적, 상시적 회의를 갖는 정책연구소가 있고, 정의정책연구소처럼 온라인과 공문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하는 연구소도 있지만 주요 결정은 공히 중앙당과 의사소통을 거친다.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당과 정책연구소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으며 정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을 소속 정당의 이념과 비전 연구, 정책 연구 및 개발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연구소 구성원들의 독립성 요구는 이념 및 비전, 정책 방향성 등 비당파적 혹은 이념 중립적 연구 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위상 정립과 같은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권한, 즉 재정 및 인사권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9> 정책연구소와 중앙당의 소통절차 및 협력관계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 절차는 없으며 각 실별 연구 및 사업계획 작성 후 원장단 회의에서 결정, 모든 사업의 최종결정과 성과물 활용은 원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짐
여의도연구원	중앙당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 각 업무 및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무적 특성에 따라 중앙당과 의견조율 및 협의, 당의 당면 전략 및 거시적 결정사안은 당대표-당 지도부-연구소장이 논의 후 결정. 기본적 사안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이 정기적(주 2회 이상)·상시적 조율 및 협의. 실무적 사안은 각 연구위원과 중앙당의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 간 비정기 회의를 진행
정의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등을 공보실과 조직국을 통해 이메일카톡 등으로 배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문을 통해 상호간 업무 진행
혁신과미래연구원	중앙당과 긴밀한 소통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연구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출간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사회를 구성, 당과 연구원이 일체성을 가지며 당 정책연구소가 정책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장이 정책위의장을 겸함.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이 참석해 정기 업무보고를 하고, 당 기획조정회의에 정책실장이, 당직자회의에 연구원 전원이 참석해 업무 보고 및 기획 조정을 함
진보정책 연구원	주요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중앙당 대표단으로 구성됨,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 연구원 사업을 논의·결정, 중앙당과 소통 하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원의 정책결과물은 중앙당이 시도당과 소통하여 홍보 및 기획사업 진행

일곱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것으로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이다. 정의정책연구소를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소들은 이사장 및 이사진이 당대표단이다. 또한 정의연과 민주연을 제외하고 연구원장이 국회의원 또는 주요 정당 정치인이다. 따라서 사업 및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연구위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원장이 하거나 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며, 성과 확산 방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은 당 지도부의 재가가 정해진 절차임을 의미한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구위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 제도적 해결보다는 연구원 내부에서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정책 연구소 내 주요 의사결정이 당과의 협이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과 개선필요성

	의사결정방식	개선 필요성
민주연구원	원장단 회의에서 최종 사업 및 성과확산 방식이 결정되며, 각 사업주체 혹은 실별 협업을 통해 집행됨	top-down과 bottom-up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연구원 운영 측면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

	의사결정방식	개선 필요성
여의도연구원	주별 전체회의, 실별 통상회의, 정기 실장단회의(주 2회 이상) 등을 통해 의사결정,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원장 및 지도부가 이사진의견 수렴해 핵심 사안 결정	없음
정의정책 연구소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전원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안) 수립 및 중요 사항 심의 후 이사회(상/하반기)에서 최종 결정. 최종성과물 확산은 당대표, 부대표 등 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 광역 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요 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단위에서 집행	없음
혁신과미래 연구원	연구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협의→협의 내용에 대해 기안서·품의서 작성→결재 후 집행→사업 진행 회의 및 토론→연구원 홈페이지 및 SNS 게시	각 사안에 대해 관련된 연구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사업결정은 최고회의와 연구소이사장(당대표)의 최종 의견수렴이 필수적	사업 결정에 대해 최고회의와 자유롭고 긴밀한 토론이 필요하며,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중앙당의 지침과 방향에 따른 실행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므로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진보정책 연구원	정책연구원의 주요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단위인 이사회 구성원이 중앙당 대표단으로 구성됨.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 연구원 사업을 논의 결정함.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원회의에서 사업 입안-대표단 보고 및 의결-당무위원회 보고 및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전 당적으로 주요 정책 확산	연구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필요

여덟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의 고용 및 충원과 관련된 것으로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표 3-11>은 답변을 인력 고용 및 충원기준과 보완할 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연구인력 채용기준이 분명한 정책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에 대한 채용기준을 연구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직급에 따라 업무가 배분되며 개별적으로 연구 및 사업을 분담한다. 고용 및 충원 방식은 공개채용 및 특별 채용 등이고 채용시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협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거대 정당의 정책연구소들 이회 소수 정당 정책 연구소의 경우, 당의 이념과 비전에 동의하고, 해당 분야의 활동 경력을 요구한다. 혁신과미래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등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무별, 분야별 차별성과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황을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연구인력 충원 문제는 활동 경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 기준 및 보완할 사항

	인력 고용 및 충원 기준	보완할 사항
민주연구원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에 관해서는 필요분야에 대한 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 당의 노선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보강의 필요가 있는 분야 및 취약부분을 우선시 함	연구인력 충원은 궁극적으로 재정문제와 직결됨
여의도연구원	현행 연구원 체제는 이사장과 원장 이하 6실 2센터 체제로 직급에 따라 고용 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상이함	없음

	인력 고용 및 충원 기준	보완할 사항
정의정책 연구소	고용 및 충원 기준은 분야별 의제 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역량, 진보정당 및 정치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등. 연구능력에는 학위 및 연구성과 뿐 아니라 사회운동 및 정당 활동 경험 중시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등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발굴, 인턴 및 연구원 직제 편성을 통한 연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토
혁신과미래 연구원	충원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원 인원 및 기준 결정, 학력별 업무/사업의 명확한 구분 없음	부서별 역할, 연구방향성에 따라 정책개발 사업 및 연구에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학력과 경력 우선시, 응모자의 정체성이 당의 정강정책에 합당하고 당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것을 요구	없음
진보정책 연구원	당의 기본 노선과 방향에 동의하는 당원으로서 당의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해당분야 활동경험 및 전문성	재정이 부족해 한 명의 연구원이 다분야 정책연구 해야 하는 한계, 해당 분야 전문가 충원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필요

아홉 번째 질문은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표 3-12>는 응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수의 정책연구원은 기타 수입이 없으며 정당지원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여의도연구원은 통상적 입출금 통장과 은행 이자 외에는 연구원 이전으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회계 상 기입을 위한 항목이지 활동경비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수입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경비 지출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연구소 연구 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항목별 보다는 월 단위별 지출 결제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하는 견해(민주연구원), 사무직 수당은 인건비 항목에, 연구원 수당은 정책개발비 항목에 해당하는 현행 계정 과목을 통일해

달라는 요구(혁신과미래연구원) 등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소수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원은 독립적 예산편성과 재정자립성을 이유로 독자적 교육사업, 후원금 모집 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3-12> 2019년 정책연구소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개선 필요사항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항목별 지출-결제보다는 월 단위별 지출-결제 체계 도입이 필요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이 전부이므로, 기타수입은 따로 없음
정의정책연구소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사업, 교육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허용, 장려하는 법 개정 필요
혁신과미래연구원	정당지원금(경상보조금) 계정과목 중 ‘정책개발비’ 항목이 가장 큰 비중 차지. 정책연구소 직원 및 연구원에 지급되는 보수 및 제 수당은 정책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기본경비(인건비)와 구분기재. 사무직과 연구직 업무 및 역할 구분이 잘 되지 않음. 정책연구소 인건비 계정과목을 동일하게 통일할 필요 있음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정책연구 활동비 확장 필요. 소수정당 소속 연구원은 중앙당에 종속되어 독자적 예산편성이 어려우므로 연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체 예산 수립과 일반인 대상 후원금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바람직
진보정책연구원	없음

마지막 질문은 정책연구소의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설문 문항은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이다. 네트워킹 활동에서는 정당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연구소 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정당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 여당의 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과 국책연구원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소를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자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은 여당의 정책연구원으로서 국내 지자체 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 등과 MOU를 맺는 등

정부 출연기관의 지원을 통해 풍부한 네트워킹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의 정책협약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2020년도에는 노동, 중소기업정책 관련 주요 해외 싱크탱크(독일 AiF, 이탈리아 ART-ER/c.MET05 등)와 정책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위해 정책네트워크실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소속 정당(현 국민의 힘)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자유우파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념적 선명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2019년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의 협력 계획에 이어 2020년 1월, 1차 상견례 및 공동연구 기획 회의, 2차 총선 평가 및 정의당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충격과 한국의 녹색회복정책 공동연구’를 주제로 공동 정책연구 개발 및 심포지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산하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기획한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용역과제를 5개 원내 정당 정책연구소가 공동 수행함으로써 원내정당 정책연구소 간 협력 기회가 있었다. 각 당 정책연구소는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정책연구소들 간 교류와 협력이 향후 지속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이념과 비전을 연구하고 정책 및 공약 생산에 주력하는 한국의 정책연구소들이 이념갈등과 정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교류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시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의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3-13> 네트워킹 및 교류 목적과 성과

	네트워킹 및 교류 목적	성과
민주연구원	주요국 싱크탱크와 정책협약 및 국내 싱크탱크들과 정책협약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정책협약, 국내 지자체 연구소 및 정출연과 정책협의를 위한 MOU 체결, 국내 대기업연구소와 정책협의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여의도연구원	2019년도에는 여의도연구원과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자유우파 시민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킹에 집중, 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선진화재단 및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등 주요 싱크탱크 및 정책연구기관을 방문해 교류협력을 활성화 방안 협의, 정당학회 및 국제정치학회 등 학술단체의 세미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 최근 학술 이슈 트렌드 파악	자유우파 시민사회 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및 공개 토론회 진행, 특히 공개 토론회는 6월부터 격 달로 총 4회를 진행. 6월 민주노총 관련 토론회, 8월 역사정체성 회복 관련 토론회, 10월 민생경제 문제점 관련 토론회, 12월 한반도정세 전망 토론회 등 개최
정의정책연구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여의도연구원-바른미래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 등 원내정당 정책연구소간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 수차례 간담회 및 논의 진행, 이외에도 타 정당 정책연구소와 교류 추진하지만 보수정당 정책연구소의 소극적 태도로 원만히 성사되지 않음, 2019년 말부터 독일 사민당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의 한국사무소 소장 및 연구원들과의 초동 모임 기획	정당 정책연구소들과의 공동연구용역 최종 연구결과물로서 정의정책연구소는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분야’로 회계감가사 기능 강화,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 개선 및 입법지원기구 확대, 정당 정책연구소와 국회 기능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안

	네트워킹 및 교류 목적	성과
혁신과미래 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제안으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정의연구원 등 5당 정책연구원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수시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활동 진행, 2019.9.18.(수)~2019.9.24.(수) 워싱턴으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자 등(각 연구소에 1명)이 해외출장 다녀옴	정책연구 활동 진행으로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을 주제로 최종보고서를 제출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없음, 특히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적극적 교류가 필요	없음
진보정책 연구원	노동, 농민, 청년, 대학생 단체들과 정책교류,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단체들과 정책 간담회, 인터뷰를 일상적으로 진행	주요 사회단체들과 일상적 정책 교류를 통해 그 성과를 연구용역 협업 및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을 협업하거나 정책토론회 개최

IV. 정책연구소 운영 총평과 발전방안

1)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총평

2019년에는 전국적 선거가 없었고 2018년에 재편된 정당 체제가 불안한 가운데 지속되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정책연구소들도 7개 정당의 연구소로 2018년과 같게 유지되었다. 이 연구는 7개 정당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소의 조직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1) 연구와 정책개발, 2)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실적, 3) 교육 및 연수활동, 4) 정책홍보, 5) 간행물 발간 등 5가지 항목에서 정책연구소들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7개 연구소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인력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민주연구원이 박사급 인력을 늘리고, 신생 연구소들이 연구인력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신생정당의 탄생으로 연구소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연구환경이 향상되었는가는 향후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 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정책연구소 설립의 의무가 있는 7개 정당들은 대체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상술한 5개 영역에서 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7개 연구소의 업적을 종합해 보면 2019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실적이 생산되었고, 토론회 등 행사개최, 정책홍보, 자료발간, 교육 및 연수 활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적생산을 양적 지표의 기준에서 본다면 연구소들은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더 많은 업적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연구의 연구 기간 등을 살펴보면 여전히 단기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사급 인력이 급속히 줄어든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99%가 3개월 이내의 단기연구라는 점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에 더해 중장기 연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9년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예년보다 연구소의 교육 및 연수 활동실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연구원이 정당연구소 기능의 또 다른 핵심축인 정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이다. 다만, 민주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당원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정책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한 계층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 등은 최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웹페이지나 SNS를 통해 실적을 공유하고 연구소를 홍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정당 정책연구서의 2019년도 실적 보고 내용과 정당과의 관계, 목표와 역할, 의사결정구조, 주요 사업, 정기/비정기적 사업 등 서면 인터뷰의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할 때, 정책연구소의 위상 및 역할, 운영, 정당과의 관계 면에서는 이전 년도와 당해 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당파적 속성이 강한 싱크탱크로서 유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이념 및 비전, 목표를 연구하고 정당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며 네트워킹, 출판 활동을 통해 성과를 발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계획, 성과확산 방법, 연구인력 채용 등과 관련해 정당과의 긴밀한 연계와 의사소통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정당의 당면한 필요에 따라 현안 분석을 제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에 의한 장기적 비전 및 목표, 정책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직전 대선 및 총선에서 소속 정당의 집권 여부와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규모 및 역할, 기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자원의 보유 측면에서 소수 정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더욱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당파형 싱크탱크이나, 국고보조를 주요 재원으로 하므로 소속 정당의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2019년도에는 국회 미래연구원 주최로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공동연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시도를 활성화하여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는 정당 정책연구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하향식으로 부과된 형식적 협력이 아니라 정당 정책연구소 간 비공식적 협의에 의해 정치적 신뢰와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제언

한국의 정책연구소가 재정적 독립성이 약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 및 교육의 역할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원인은 한국정치사의 특수성과 정치관계법에서 기인한 구조적, 제도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법상의 한계는 매년 실시되는 정책연구소 실적분석 평가 보고서와 그에 기초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

2019년도 정책연구소 실적분석 평가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다수의 정책연구소 응답자들이 직급과 무관하게 재정 독립성과 인사권 등의 문제를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손꼽았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보조금으로서 정당에 일괄 지급되고, 따라서 정당의 필요성에 따라 정당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유용되거나 연구원으로 자금 전달이 지연되는 등 편법과 관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당면한 정책과제 혹은 선거 공약 개발 등 선거 지원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독립적인 민주주의 확산 준 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이 지속해서 제안해온 바와 같이 현행 의석수 기준 정당보조금 지급 규정을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 직접 지급하고, 정책연구소가 독자적 후원금 모집, 시민교육, 출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

3) 정책연구소 역할과 정당의 선거 기능에 관한 제언

선거 시기 정책연구소는 정당과 더불어 선거체제로 전환해 선거 전략 및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각 당의 정책연구소는 선거 전 당 안팎 의견 청취 및 정책/연구 개발 작업부터 선거 시 선거 공약 수립 및 공약집 발간 등에 이르기까지 선거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각 정책연구원은 선거 시 연구원 조직을 정책·공약 개발 등 총선과제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정당의 규모,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선거지원 범위 및 역할에 차이가 나타난다. 소수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경우 적은 인원이 선거법 교육부터 공약 개발, 교육 등을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인력의 상시적 부족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의 어려움이 선거 시에도 정책연구소 간 역량의 편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소수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이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자구 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 직전부터 선거체제로 전환되는 정책연구소가 당파적 싱크탱크로서는 정당의 정책 개발 거점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및 정책 설계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로서, 또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물적, 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이중적 위치, 즉, 당파적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왔다는 점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양 측면을 고려해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1>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에 관한 서면 인터뷰

- 대상: 정책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 기간: 2020년 9월 3일~10월 7일 (약 1개월)
- 응답자 수: 총 9명

<표 1> 서면인터뷰 응답자 현황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합계
민주연구원	-	-	1	1
여의도연구원	-	-	1*	1
정의정책연구소	-	1	1	2
혁신과미래연구원	-	-	1*	1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	-	1
진보정책연구원	1	-	2**	3
합 계	2	1	6	9

- * 직책 미기재
- * 직책 미기재
- ** 1명은 정책실장

※ 다음 내용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앞의 <표>에서
게시된 정책연구소 순서로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서면 인터뷰 질문지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를 위한 조사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
에 대한 답변은 「201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3일

* 다음의 10개 항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뷰 답변 (연구소별)

○ 민주연구원

• 연구위원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방향 혹은 정책입안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정책연구소의 위상으로 볼 때, 정당 정책산출의 핵심기관은 아님. 당의 노선과 이념, 중장기적 정책연구라는 목적에 비춰 본다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정 및 인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수준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을 연구하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며 새로운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가지 모두 중요하며 굳이 시급성을 따지자면, 재정 자립성,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순서로 볼 수 있음.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도 가능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 선거시기: 선거공약 수립, 정책수요 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각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등
- 비선거 시기: 각 분야별 정책보고서 작성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실시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 정기사업: 정책보고서 작성, 세미나(혁신경제 세미나, 공정경제 세미나 등)
- 비정기사업: 현안 및 중요 사안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 - 새 100년의 꿈, 진정한 광복 2045> 발간(5월)
- 21대 총선 대비 정책 및 공약 연구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연구원 사업결정에 중앙당과의 특정한 소통절차는 없음. 각 실별 연구 및 사업계획 작성 후 원장단 회의에서 결정
- 모든 사업의 최종결정은 원장단 회의에서 이뤄지며, 성과물 활용 역시 마찬가지임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최종 사업결정은 원장단 회의에서 이뤄지며, 집행은 각 사업주체 혹은 실별 협업을 통해 이뤄짐. 성과 확산 방식 역시 사업결정과정에서 이뤄짐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top-down과 bottom-up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특정한 방식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연구원 운영의 측면에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분야에 대한 연구위원 의견수렴(당의 노선 및 정책수립에 있어 보강필요 및 취약부분 우선)

☞ 연구인력 충원은 궁극적으로 재정문제와 직결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위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항목별 지출-결제보다는 월단위별 지출-경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과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정책협약
국내 지자체 연구소 및 정출연과 정책협의를 위한 MOU체결
국내 대기업연구소와 정책협의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 2020년도에서 노동, 중소기업정책 관련 주요 해외 싱크탱크(독일 AiF, 이탈리아 ART-ER/c.MET05 등)와의 정책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위해 정책네트워크실 주관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 여의도연구원

- 직책 미기재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보수든 진보든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공통적으로 당과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 운영 및 활동에 있어서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 ☞ 이에 선거법을 개정하든 정당법 및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확보·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모두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하여 독자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민주시민 정치교육(당원 교육은 제외)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할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 이에 선거법 내지는 정당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은 상기 제시한 점들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함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 여의도연구원이 정당정책연구소로서 지향하는 목표 및 역할에는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먼저, 단기적으로 여연은 당의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와 제3조(연구소의 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책연구소는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존립 목적
- ①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②당의 이념과 가치정립, ③정책 현안연구, ④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⑤청년지도자 양성, ⑥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지식네트워크 구축, ⑦각 위원회 활동 지원, ⑧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등의 주요 사업들을 수행

☞ 다음, 여의도연구원의 ‘장기 목표와 역할’은 5대 사명과 기능 등으로 압축해 설명해 볼 수 있음

- 첫째, 당 정책기구 및 특별기구들이 현안과 상임위 중심의 정책적 대응에 중점을 둔다면, 여의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작업을 진행
- 둘째, 여론조사, 뉴미디어 분석, 빅데이터 등을 통해 파악된 국민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여 당의 민주성과 반응성을 제고하고, 당이 민심과 괴리될 경우 알람기능 수행 및 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를 선도
- 셋째, 국내외 정책연구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및 활성화된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생태계의 백가쟁명을 정치권으로 수렴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연구에 대한 품질 향상을 도모
-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과 여성 정치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해 ‘교육정당’의 이상을 실현
- 보수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힘을 ‘이념·가치 정당’으로 견인하는 지적 토대를 제공

☞ 이렇게 볼 때, 여의도연구원의 당면 목표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책혁신 선도: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확립하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연구원이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

- 둘째, 연구원 변화 주도: 여의도연구원의 현재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 국내외 정책연구소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원의 혁신과제와 방안 등을 도출하고, 동시에 연구 외적인 인력 확충·직제 개편·운영 혁신 등 전방위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
- 셋째, 당의 변화 지원: 당이 과거의 낡은 이미지와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당의 각오로 새롭게 '국민의 힘'으로 재탄생한 바, 정책과 노선을 재정립하고, 구습과의 단절을 통한 혁신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총력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정책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연구/전문성의 강화,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 등이며, 이중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항을 꼽으라면 '재정 자립성 확립'이라고 판단

- 우선, '재정 자립성만 확보'된다면,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아울러,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성 문제도 정당보조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를 연구소의 연구와 운영을 위해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 정책연구소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재정이 100% 연구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전용되고 있어서, 정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연구역량 강화도 한계가 있는 실정

☞ 그런데, 연구소의 재정 자립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현재 정책연구소는 여타의 수익 사업 없이 운영의 100%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이것이 바로 연구소의 재정 자립도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임.

- 독일과 미국 사례를 보면, 독일 정당연구소의 경우 1년 예산이

1500억원에 가깝고(90%가 국고보조), 미국의 헤리티지나 브루킹스는 정당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독지가들의 출연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재정으로 운영

- 하지만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독일 및 미국의 정책연구소의 정책생산능력과 탄탄한 인력구조와 동일한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다만, 상기 문제점 완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국고보조금을 당을 거치지 않고 정당연구소로 직접 주거나, 또는 선거법을 개정해 정당연구소도 수익사업(fund raising)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줘야 함
- 예를 들면, 제한적 형태이나마 수입 사업(출판물 유상 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을 허용하는 것이 재정 자립을 위해 필수적일 것임. 단, 수익사업의 항목을 당원교육 및 시민교육 등 아카데미와 정책연구개발 및 출판(책자 판매) 등으로만 한정해 관리한다면, 정책연구소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연구소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가 있는 시기'의 업무/사업은 다음과 같음.

- 통상 선거 3~4개월 전 여의도연구원은 선도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 즉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운동가 등을 망라해 연구원 산하에 특별 조직인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국회의원과 당의 기구를 참여시켜 정책/연구개발 작업을 수행
- <비전위원회>를 통한 연구성과는 분야별(경제, 산업통상, 정치행정, 교육, 과학기술, 소상공인, 보건복지, 통일외교, 환경노동, 에너지, 문화체육관광, 여성청소년)로 집대성하고, 추후 출판하여 당 정책위의 정책과 공약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
- 특히,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 전 여의도연구원에서 <비전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로 정책 개발 작업을 진행. 동시에 당 정책위가 주도하여 <공약개발단> 출범시켰고, 여연 연구원들이 각 분야별로 참여해 소속 국회의원, 당의 정책기구 등과 함께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협업을 진행(단, 2020년 총선에서는 여연 차원의

- <비전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당 정책위와 협의해 선거공약을 개발함)
- 한편, 선거가 임박하면 주요 업무와 활동의 초점이 정책이슈별로 당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포지션페이퍼’ 등을 발행하는 것에 맞춰지고, 또한 개별 후보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각종 정책 참고자료들을 작성하는 등 선거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집중

☞ ‘선거가 없는 시기’의 업무/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선거가 없는 시기의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음. 연구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와 연구원별로 독자 추진하는 개별연구로 구분
- 연구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정부정책 평가’와 ‘여연정책연구’, ‘이슈브리프’, ‘현안 보고(daily, weekly, monthly)’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이와 함께 연구원 개인별로 세미나 및 비공개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정부정책의 적실성과 공과를 평가하고 관련 결과를 자료집(공개 or 비공개)으로 제작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서 작성 및 책자 발간과 △공개 토론회 및 비공개 전문가간담회 개최 등이 있음

- 여의도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성과는 종류별로 정기간행물 형식의 <이슈브리프>, 보고서 양식의 <현안보고> 및 <주간동향>, 소책자 형식의 <여연정책연구> 등 총 4종으로 구별 가능
- 이와 함께, 외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개최되는 토론회 형식에는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정책간담회와 좀더 큰 규모의 공개 국민대토론회 등이 있음. 토론회 후 관련 내용들인 발제문과 토론문 등을 엮어 자료집 형태로 <토론회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재

☞ 정기적 사업에는 여연의 대표적 간행물인 <이슈브리프> 발간이 있음

- <이슈브리프>는 여의도연구원의 대표적인 정기적 간행물로 격주 간격으로 발행되며, 통상 현안 이슈(current issue) 중심의 주제를 싣고 외부 기고자와 소속 연구원들을 잘 믹싱해 배분
- 매호마다 7~8 페이지 내외로 작성된 브리프(brief)가 3~4편 수록되고, 당 지도부부터 소속 국회의원, 당원들에게까지 배포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일반인에게도 공개

☞ 부정기적 사업에는 <현안보고>, <여연정책연구> 발간 등이 있음

- 우선 <현안보고>는 각 실별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daily, weekly, monthly 등 부정기적으로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및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 분량은 차이가 있으나, 통상 daily는 1~2 페이지, weekly는 4~5페이지, 그리고 monthly는 10페이지 내외
- <여연정책연구>는 외부 용역, 내부 집필, 연구원 내외 정책전문가의 협업 등 다양한 집필진에 의한 심층연구로 장기간의 연구성과를 도서 형태로 발행하며 페이지 수에 제한이 없음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2019년도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었던 해로 여의도연구원은 통상업무인 정책연구 개발에 집중했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연구와 정책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문정부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정을 비판적으로 평가. 특히,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그리고 좌편향되고 중복화된 이념과 노선 등에 대한 정책을 비판
- ② 수권정당으로서 대안 마련: 문정권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등)의 비판적 평가를 기반으로 “징비록”과 “민부론”라는 당의 경제정책을 구상했고, 대북통일(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기반으로 “안보실정백서: 안보가 안보이다”, “민평론” 등의 안보통일정책을 당과의 협의 하에 개발, 발표
- ③ 분야별 포지션 페이퍼 및 현안보고서 작성: 경제, 통상, 외교안보,

대북통일,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립하고 민주당과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 ④ 21대 총선 대비 정책공약 개발: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총선 대비한 분야별(경제/산업통상, 통일/외교/국방, 정치행정/지방자치,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청년, 과학기술, 방송통신/SNS, 환경/노동, 탈원전, 중소기업인 정책) 정책을 개발하고, 이후 당 정책위와 협력 하에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
- ⑤ 보수정권 9년의 재평가를 통한 대안 모색: 지난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정권의 집권기간을 회고하며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시사점 발견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간

☞ 우리당은 야당이라 정부와 국책연구소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해 여의도연구원의 연구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한 입법활동의 연계비율도 여당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

- 2017년 19대 대선 패배 이후 우리는 야당이 되면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 지원이 전면 사라짐에 따라, 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의존도와 수요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음
- 연구원의 정책연구개발 활동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비중이 큰 분야는 2019년 기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경제지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제 분야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북한이 도발한 핵위기로 긴장도가 커진 대북 및 남북관계 등임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여의도연구원은 당 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등) 직보 내지는 현안 보고, 정책위와의 정책 협의, 소속 국회의원과의 협의 등 중앙당과 당소속 의원과의 다양한 소통 및 채널을 유지·활용하고 있음

- 다양한 소통 채널 가운데 당지도부, 즉 최고위원회의 보고는 최고위원회의가 주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됨으로 정기적 성격을 갖는 소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의 현안보고서나 이슈브리프 배부, 원장 발언 등을 통해 정책사안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의 분석결과와 대응방안을 보고
- 연구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당 대표 보고는 우리 연구원에게 있어 중앙당과의 가장 핵심적인 소통채널이며, 현안보고의 가장 비중있는 독자 역시 '당 대표'임. 이에 당 대표 보고는 보고서와 서면 형태로 이뤄짐
- 정책위와의 정책 협의는 비정기적 분야별 정책개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양자간 건의와 소통 및 업무 조율 등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관계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소 내 의사결정은 주별 전체회의, 실별 통상회의, 정기 실장단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소 내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통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장 이하 지도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주례회의가 있고, 주별 2회 이상의 정기적 실장단회의가 있으며, 실별 통상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여러 회의체를 통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모아진 다양한 의견들을 원장님 이하 지도부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고, 연구원 외적으로는 이사회가 있어 이사장 이하 이사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핵심 사안을 결정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9년 기준 여의도연구원은 이사장님과 원장님 이하 6실 2센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6실에는 경제정책실, 사회정책실, 전략기획실, 연구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그리고 여론조사실 등이 있고, 2센터에는 안보통일센터, 청년정책센터 등이 있으며, 각 실과 센터별로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등의 직급이 있고,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①수석연구위원은 박사취득 후 연구경력 10년 이상 및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 ②연구위원은 박사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 및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 ③선임연구위원은 석사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및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 ④연구원은 석사취득 및 취득 예정자 등의 경력 소유자 등
- 업무는 각각의 직급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구 및 사업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

☞ 연구인력의 고용 및 충원의 방식은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등이고, 관련 기준은 채용 시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그 속에서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음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의도연구원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이 전부이므로, 기타수입이 따라 존재하지 않음.

- 즉, 통상적인 입출금 통장과 은행 이자 외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연구원 이전으로 회계상 발생) 등 회계상 기입을 위한 항목으로 활동경비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수입은 없음. 따라서 별도의 지출방식이나 항목도 존재하지 않음.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과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에는 여의도연구원과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자유우파 시민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킹에 집중

- 비공개 간담회 및 공개 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특히 공개 토론회는 6월부터 격달로 정기적으로 총 4회를 진행. 6월 민주노총 관련 토론회, 8월 역사정체성 회복 관련 토론회, 10월 민생경제 문제점 관련 토론회, 12월 한반도정세 전망 토론회 등을 진행
- 동시에 연구원 원장이 한반도선진화재단 및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등 주요 싱크탱크 및 정책연구기관을 방문해 변화된 정치상황 하에서 여의도연구원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
- 이와 함께 정당학회 및 국제정치학회 등 학술단체의 세미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최근 학술 이슈들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음

○ 정의정책연구소

• 연구원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04년 3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 우선 배분 등 설립 및 활동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정책정당화를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서 설립됨.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경쟁이 만발하는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정책연구소 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1)정의당의 정치이념 확립과 중장기 정책개발이라는 씽크탱크의 역할, 2)새로운 정치의 기반인 정치인력 풀 형성이라는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3)당원 교육연수의 장이라는 정책공동체(최근, 교육연수기능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맡고 있음) 등 3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각 정당에서 정책연구소 몫의 국고보조금을 당직자 급여 등 당 운영경비에 차용해서 쓰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당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 독립 차원에서,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총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 전문성을 갖춘 분을 당 대표가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출절차를 밟아 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독립 차원에서, 중앙당을 거친 정당교부금 배부가 아닌 정책연구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소 독립 후원회 도입(총액 상한선 설정, 기업/법인/단체 기부 엄격 금지, 소액다수 한해 허용)을 통해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대폭 허용 및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정의정책연구소는 궁극적으로 정의당의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진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인당GDP 3만달러 달성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위상 뒷 편에 소득 및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적 약자는 삶의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경제성장 이면에 극심한 탄소배출에 기인한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신장과 더불어 탈탄소 그린뉴딜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중산층 등 대중을 위한 각종 사회경제 및 그린뉴딜 이슈 및 법안에 심층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으로써 가치 및 비전, 아젠다 및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사업으로 진보적 국가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 정책연구와 개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련 토론회, 정책교육 및 정책자료 출판, 정보화 사업,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합니다.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정적 독립 및 인사의 독립성, 17개 상임위 대응 최소(17명) 정책연구인력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귀속되지만, 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당 배정 국고보조금의 30%가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소 인력과 중앙당 정책인력 간 공동운영 보다는 충분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 및 정책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록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이지만, 정당비례득표율 10% 가까이 받은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보조금 배분체계 하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상임위별 적어도 1인, 총17인의 정책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역량 유지,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각종 당원·유권자 대상 정책 및 정치의식 관련 여론조사, 중앙당 공약개발 지원,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및 시도당·지역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외 시기에는 여론조사 분석 및 종합, 중장기 의제 사업 및 전략개발, 분야별 연구 및 이슈·동향보고서 작성 및 토론회 추진, 각종 포럼 운영,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으로 첫째,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대중, 중산층 회복을 위한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대기업 규제 등 각종 갑질 근절 등 사회경제적 민생의제 및 담론 제시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사업 및 토론회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추진합니다. 둘째, 큰그림 작업반'을 운영하여, 당내외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조금 더 긴 안목과 한국사회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당의 향후 전략 마련과 장기전망, 성장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내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 전략적 판단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원·유권자 정책수요·정치의식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넷째, 일상적으로 월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여론동향 리포트, 연구위원 분야별 이슈브리핑 및 연구보고서, 칼럼 등을 작성합니다. 다섯째, 분야별 포럼 및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기자단 및 청년포럼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역량 강화 및 청년과의 직간접적 소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및 산업계 연구소와 연계하여 총선 정책 생산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기적 사업으로, 각종 정책수요 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당원·유권자 정책선호 및 수요 조사, 20대 청년 및 여성 등 대상그룹별 심층인터뷰(FGI)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21대 총선 등 각종 선거대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각 지역출마자 후보적합도 조사, 전국여론조사, 정당지지도 편성전략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치인식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정의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핵심사업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1대 총선의 기초 대비 차원에서 대안사회 경제정책 개발 및 확대재정 구상이 담긴 정의당 재정비전2020, 21대 총선거치와 비전, ‘수권정당의 길’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둘째, 국민 살림살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경제 담론과 정책의 제시입니다. 셋째, 당의 정치개입력과 실천력,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사업의 수행입니다. 특히, 당 지지확대의 원인 분석과 향후 21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당원대상 정치의식조사 및 FGI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정책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포럼, 청년포럼, 경제포럼 등을 운영했습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정의정책연구소는 각 업무 및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무적 특성에 따라 중앙당과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해 당의 정치 전략과 과제, 지방의정 전략 등 중장기 연구사업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합니다. 당이 시급하게 내놓은 전략과 같은 굵직하고 긴요한 거시적 결정사안은 당대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합니다. 그 외 기본적인 사안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 간 정기적·상시적 조율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실무적인 사안은 각 연구위원과 중앙당의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 간 비정기적 회의를 진행합니다.
- ☞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조율이나 협조는 중앙당 사무총장 주재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하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시기별 이슈 및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중앙당의 요청을 접수하고, 연구소의 입장과 상황,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등 중앙당이 전략적인 정치적 판단과 메시지 생산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이슈에 따라 직접 상무위원회에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연구소에서 생산된 전략과 입장을 보고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연구소와 중앙당과 회의 빈도는 기본적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되는 정기 업무조정회의가 있으며, 그 외 상시적으로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과 연구소 소장 간 협의회가 진행됩니다. 연 2회 이상 연구소(연구위원)와 중앙당 정책위원회(정책연구위원) 간 소통 및 정책토론을 진행합니다.
- ☞ 최종성과물의 활용방식은 기본적으로 당대표·부대표 등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 (상무위), 광역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요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최종성과물이 당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단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정책이슈 및 의제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의 각종 언론 및 SNS 등 메시지를 통해 언론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정의정책연구소는 반기별로 이사장과 이사진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1월)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하고, 하반기(7월)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합니다.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취임 및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사진 및 부소장(소장 추천) 임명은 이사장(소장과 논의)이 결정하고 이사회 선출 절차를 밟습니다.

☞ 정의정책연구소는 매주 월요일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및 배분, 연구위원별 주단위 업무보고 및 계획 공유, 일정 공유 등을 합니다. 또한 격주 목요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 논의 및 결정 등을 진행합니다.

☞ 격주 운영위원회와 매주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담당 연구위원들이 맡은 업무(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간담회·토론회 추진 및 진행)를 배분해서 진행하고 연구기획실장 총괄 관리하며, 소장님이 최종 확인, 결제합니다.

☞ 최종성과물의 확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당대표·부대표 등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 (상무위), 광역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요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최종성과물이 당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단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정책이슈 및 의제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의 각종 언론 및 SNS 등 메시지를 통해 언론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우선, 공통적으로 각 분야별 의제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역량, 진보정당 및 정치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분야별 의제개발 및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정의당 강령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등 분야로 더욱 폭넓게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을 발굴(서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턴 및 연구원 직제를 두어 연구인력을 교육·훈련시켜 당의 의제 및 정책 개발인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없음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여의도연구원-바른미래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 등 원내정당 정책연구소간 ‘국회 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수차례 간담회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연구결과물로서 정의정책연구소는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분야’로 회계감가사기능 강화,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 개선 및 입법지원기구 확대, 정당 정책연구소와 국회 기능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 2019년 말부터 독일 사민당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의 한국사무소 소장 및 연구원들과의 초동 모임을 기획하고, 2020년 1월, 1차 상견례 및 공동연구 기획 회의, 2차 총선 평가 및 정의당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충격과 한국의 녹색회복정책 공동연구’를 주제로 공동 정책연구 개발 및 심포지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소장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 활동이 정당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를 보면, 정책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의제들, 가령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제, 현대통화이론(MMT)에 바탕을 둔 확장재정정책 등이 당의 공약이나 정책에 일정하게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소가 더욱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출판 활동, 교육 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전 인류가 기후 급변이라는 초유의 문명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생태 전환의 급박한 요청에 정의당의 전통적인 목표였던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 노동 존중 사회, 한반도 평화 등을 결합시켜 종합적인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답했듯이 국고보조금 30%를 당을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여론조사, 담론 및 의제 개발, 정책자문단 조직 등에 주력합니다. 선거 없는 시기에는 당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조사에 치중하며, 그밖에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등을 수행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으로는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발간, 주례 및 월례 여론조사 정리, 연구과제 수행 등이 있습니다. 부정기적 사업으로는 각종 부정기 여론조사, 토론회, 연구보고서 발간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2019년에는 2020년 총선 준비를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면서,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확장재정 기초 2020년 예산(안), 기후 급변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입안했습니다. 또한 당의 총선 대응에 기초 자료가 될, 정세 분석 및 정치 전략, 정책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주간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소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획회의나 간담회도 실시합니다. 연구소 성과의 주된 활용

방식은 각종 연구보고서를 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방식이 적절합니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채용하려는 분야의 연구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연구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학위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혹은 정당 활동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 사업, 교육 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정당 정책연구소들과 교류를 추진했으나 정치 상황의 급변과

보수정당 정책연구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의 경우,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코로나19
충격과 한국의 녹색회복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에 그 결과를 외화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혁신과미래연구원

- 직위 미기재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정당법에 따른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는 연구원이 정당의 생산적·실용적 정책개발에 기여하게 하였으나, 연구소가 중앙당에 부속된 하위 부서처럼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 정책연구소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의 독립성·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요건을 시정해야 함.
- ☞ 현행법상 정책연구소가 외부로부터의 후원금 모집이 불가한데 이 또한 개정이 요구됨.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당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입법과제와 현안에 관한 연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대안 제시 및 당론 수립
- ☞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정책 기초자료 생성 및 검증
- ☞ 당의 이념, 가치 및 비전 정립에 관한 연구

☞ 각종 선거 핵심공약 수립 및 선거 공약집 설계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를 통해 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첫째 충분한 자체 연구인력 확보, 둘째 외부 정책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킹 형성, 셋째 타 정당 연구소와 정책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중앙당 조직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도 동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

- 연구원 조직을 정책·공약 개발 등 핵심역량과 총선과제 중심으로 재편
- 당의 선거전략 및 선거공약 개발
- 유권자 지형분석 및 데이터 선거시스템 구축
- 정세분석 및 전략과제 기획
- 정책전문가들에게 정책자문과 정책제언을 받아 선거 공약화
- 각 지역별 선거환경 분석 및 예비후보자용 선거 기초데이터 정비 작업 수행

☞ 선거 없는 시기

-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슈페이퍼' 작성 및 발송
- 주요하고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중·장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당의 정책 개발 진행
- 외부 전문가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킹 구축
- 정책전문가 대상 각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

- 정책 콘텐츠(정책 마케팅 및 대응논리) 개발 및 당 활용 지원
- 이슈페이퍼 발행(현안과 이슈 분석과 대응)
- 정책간담회(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 및 활동성 배양)
- 홈페이지 운영
- 반년간지 발간 등

☞ 비정기적 사업

- 각종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 토론회 등
- 당 지도부의 요구에 의한 메시지 또는 자료 작성 등
-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진행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21대 총선 관련 당 선거전략 및 선거공약 개발

- 연구원 조직을 정책·공약 개발 등 핵심역량과 총선과제 중심으로 재편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구
- 유권자 지형 분석 및 데이터 선거시스템 구축
- 각 지역별 선거환경 분석 및 예비후보자용 선거 기초데이터 정비 작업 수행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연구보고서 등을 공보실과 조직국을 통해 이메일·카톡 등으로 배포

-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문을 통해 상호간 업무 진행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 연구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협의
- 협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한 기안서·품의서 작성
- 결재 후 집행
- 사업 진행 회의 및 토론
- 연구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각 사안에 대해 관련된 연구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연구원 업무 및 사업에 인력 충원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원 인원 및 기준 결정
-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모두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력별로 업무/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부서별 역할, 연구 방향성 등에 따라 정책개발사업 및 연구에 적절한 인력 배치에 보완이 필요함.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정책연구소는 정당지원금(경상보조금) 계정과목 중 '정책개발비'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중 정책연구소 직원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제수당 등은 정책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기본경비(인건비)와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함.

-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모든 채용을 연구원으로 하고 있기에 사무직과 연구직 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원 또한 간담회, 토론, 발제 등 연구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직 또한 서류작성, 관리 및 행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사무직과 연구직을 구분하여 기본경비(인건비), 정책개발비 계정분류는 회계처리에 모호한 부분이 많음. 정책연구소 인건비 계정과목을 동일하게 통일 할 필요 있음.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의 제안으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등 5당 정책연구원과의 정책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수시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활동을 진행하였음.
- 2019.9.18.(수)~2019.9.24.(수) 워싱턴으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자 등(각 연구소에 1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옴.
- 정책연구 활동 진행으로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을 주제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연구원장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아무리 법적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정책연구소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당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보다 개혁된 별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 또 아무리 좋은 연구보고서를 내어도 당의 수뇌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 정책연구는 중장기로 이루어져야지 선거철을 앞두고 급조되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정당 수뇌부는 이점을 유념해야한다.
- ☞ 독자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정책연구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일반 당원 및 더 나아가 국민들을 훈련, 교육하는 점에 역할을 두고 있다. 또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당원들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당원들이 우선 당원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시민의식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전문 역량이 강화되어야하고, 당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인사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을 확보해야하므로 당과 연구소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재정적 차원에서도 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원이나, 국민들의 직접 성금에 의존해야 독자적 발언권을 가진다고 본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선거법에 대한 숙지를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 없는 시기에는 선거 없는 시기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현안이니 각종 이슈에 대한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한 국민계몽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나아가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계몽 및 당원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정치아카데미를 개설, 지역을 이동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고, 비정기적인 것은 당 사무처의 전략회의에서 필요한 안건을 분석, 토의하는 일이다.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첫째로,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시절에 대한 정책비교였다. 둘째로, 4.15총선에 대비한 정책개발의 연구였었다. 셋째로, 문재인 좌파정권의 비판과 실정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최선을 다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중앙당과 긴밀한 소통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나, 만족스럽게 결과적으로 마무리짓지는 못했다. 워낙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과물도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출간이 지체되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대국민 홍보효과라는 결과가 반감되었고, 자체의 독자적 운영 시스템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사업 결정은 최고회의와 당대표(연구소 이사장)의 최종적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사업 결정에 대해 좀 더 최고회의와 긴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좀 더 사업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토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중앙당의 지침이나 방향에 따른 실행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개선되어야한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력과 경력이 우선시 되고, 응모자의 정체성이 당의 정강정책에 합당하여 당의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응해야한다.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에 대한 활동비가 더욱 확장되어야한다.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의 소속의 연구원으로써 우리연구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소연구원은 중앙당이 편성한 예산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어렵고 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 수립과 기타수입으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후원금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과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없었다. 이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적극적 교류가 필요하다.

○ 진보정책연구원

• 원장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9년 민중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중정책연구원’은 민중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표적으로 민중정책연구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자료집’을 발간함. 민중정책연구원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은 그 자체로 민중당의 당론이자 대표적 정책이 되었음.

☞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보장’이 중요. 이는 예산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정책연구소는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원내교섭단체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정책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등 변화가 필요.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지향 - 진보집권의 청사진 제시

☞ 목표 - 미래 사회의 대안 의제 개발 및 당면 선거에서 정책 공약 개발

☞ 역할 - 1)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2)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대안 의제 개발 3) 주요 선거 정책 공약 개발 4) 주요 정책 교육 5) 주요 단체외 정책네트워크 구성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가 시급한 사항임. 이것은 연구원의 재정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들을 선발하려면 그에 맞는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고보조금 지급이 교섭단체 위주인 탓에 결과적으로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소는 재정이 미흡하며 사실상 정책연구 강화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어려움.
- ☞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지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하거나,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거나,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 <선거 시기>에는 정책공약의 개발, 교육, 발표 및 선거 지원업무를 함.
- ☞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간 ‘정책과 논점’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당내 조직 및 외부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을 진행함. 또한 ‘정책연구용역’,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의 정책교류, 정책에 대한 교육 사업도 ‘정책아카데미’ ‘광역 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책교육’ 등 수시로 진행함.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 <정기적 사업>은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총선정책공약 수립’, ‘비교섭단체 상하반기 정책연구용역 집행’ ‘정책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음.
- ☞ <부정기적 사업>은 ‘2019정책당대회’ 의제 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급계층 의제 확대 회의 운영’, 강령제정을 위한 ‘강령제정위 참여’, 주거권 마련을 위한 ‘주거권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팀 운영’ 등을 진행하였음.

특히 새로운 노동정책 - 공동사용자책임 · 노동자개념확대 · 노동보험 도입-을 연구개발해

전체 당원 교육을 진행하고, 2020년 총선에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바가 있음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 재벌개혁 -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연구
- ☞ 청년 -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분석 및 민중당 대응방향 연구
- ☞ 고용보험 개혁-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방안
- ☞ 노동기본권 강화 -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 ☞ 농업개혁- 농지법 개정(안)
- ☞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 ☞ 대학-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 ☞ 보건의료 - 민중당 보건의료_건강권 공약 개발
- ☞ 재벌개혁 세부방안 -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 ☞ 평화군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당의 대표단 중심으로 연구원 이사회를 구성해 당과 연구원이 일체성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원장, 부원장, 정책실장 등이 당 대표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보고와 의결을 통해 사업에 대해 당적 결의를 확보함. 특히 연구소 사무실이 중앙당 내에 설치됨으로써 중앙당 각 부서와 일상적인 업무조율이 가능함.
- ☞ 제도적으로 당 정책연구소는 정책위를 겸하고 있으며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이 참석해 정기 업무보고를 하고, 당 기획조정회의에 정책실장이, 당직자회의에 연구원 전원이 참석해 업무를 보고하며 기획 조정을 하고 있음.
- ☞ 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주간 정책과 논점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당 대표단 교육부터 광역시도당으로 체계적으로 전파 활용되고 있음.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원회의에서 사업 입안- 대표단 보고 및 의결- 당무위원회 보고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걸쳐 전 당적으로 주요 정책을 확산함

☞ 의사 결정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당원으로서 당의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함.

☞ 연구소 재정이 부족하여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분야의 정책 연구를 해야 하는 제한성이 있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당지원금/전년 이월금 외에 별도의 기타수입이 없습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단체, 농민단체 등 주요 사회 단체와 정책 교류 진행함. 당의 주요 정책 개발에서 해당 단체의 요구 사항 및 정책 반영 목적

○ 정책실장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에서 당해 정당의 주요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있음. 정책연구 인력 확대, 정책 홍보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예산 지원 필요.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당해 정당의 주요 활동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한국 사회 진보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 개발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전문성 강화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일상적인 정책 개발이 선거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의 본질적 측면에는 차이가 없음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책당대회를 정기적(격년)으로 개최 / 정책 개발 및 홍보는 수시 진행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노동 및 외교통일 분야 정책 개발, 정책당대회 준비, 20대 총선 공약 개발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연구소 대표자가 중앙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상시적으로 열리는 대표단 회의에 참여해 의견 개진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분야 활동 경험 및 전문성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과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위원

<정당 정책 결정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

1. 「정당법」 제29조의3 제 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을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요건과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수정당의 중앙당의 경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인력도 부족함. 따라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존재하여 최소한 정책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정책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정도 형성되긴 함.

- 민중정책연구원의 경우 당의 대부분의 주요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고 있음.
- 정책연구 인력 확대, 정책 홍보 기능 강화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2.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우리당에서 과거 진보정당을 시작하며 주장해온 무상급식, 무상의료, 부유세 등의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편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향후에도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미전과 대안의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할 예정임.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원의 선발이 중요한데 그만큼의 인건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비교섭단체 연구용역 역시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 1개를 하기에 부족한 예산임. 원외 정당의 경우는 아예 지원이 없다는 것도 아쉬움.
- 오히려 재정이 부족한 소수정당, 원외정당(기준마련)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연구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시기 : 주요 정책공약 연구, 해설 교육, 기획팀과 협업

- 선거 없는 시기 : 정책현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담은 해설서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연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등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사업 : 정책해설서 발행, 선거정책공약 수립, 정책토론회 및 강좌 개최

- 비정기사업 : 2년에 한번씩 정책당대회 개최(참가규모 약1만), 연구용역

<2019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재벌개혁- 재벌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연구

- 청년-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분석 및 민중당 대응방향 연구
- 고용보험 개혁-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방안
- 노동기본권 강화 -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 농업개혁- 농지법 개정(안)

-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 대학-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 보건의료 - 민주당 보건의료_건강권 공약 개발
- 재벌개혁 세부방안 -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 평화군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6. 귀 정책연구소가 2019년 사업을 계획·결정하는데 있어 중앙당과 특정한 소통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혹은 의견조율 및 협조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사업결정 : 정책연구원의 주요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단위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중앙당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의방식 :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사업을 논의결정함.
- 성과물활용 : 중앙당과 소통하여 필요한 연구과제를 정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정책결과물은 중앙당이 시도당과 소통하여 전국적인 홍보 및 기타 기획사업이 진행됨.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사업결정 : 정책연구원의 주요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단위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중앙당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의방식 :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사업을 논의결정함. 일상적으로는 연구원 간의 정기회의가 진행됨.

-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준 : 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방향에 동의하는 당원

- 보완 :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9. 2019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없음.

10. 2019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 농민, 청년, 대학생 단체들과의 정책교류는 잘 되고 있는 편임.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단체들과 정책 간담회, 인터뷰는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물로 연구요역을 협업하거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정형임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박경미·임유진·박진수. 2019.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중앙선관위.

박지영, 박경미, 한정훈. 2017. “정당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정당 활동가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7(2): 43-64.

서현진. 2012.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21(1): 101-130.

서현진·임유진. 2016.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정치연구』 6(1): 27-46.

이재철·당위남. 2018.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과제: 여의도연구원, 미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분석.” 사회과학연구 25(3): 57-76.

조진만. 2014.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실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의정논총』 9(1): 113-142.

한의석. 2015.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모색: 외국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미래정치연구』 5(1): 49-68.

신두철. 2007.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 정당재단의 역할과 특징: 2005년 한국정당정책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157-178.

Allern, Sogurd and Ester Pollack. 2020. “The Role of Think Tanks in the Swedish Political Landscap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0(0), 1-25.

Mair, Peter. 1994. “Party Organizations: From Civil Society To The State.” in Richard Katz and Peter Mair eds.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Western Democracies*, 1-22. London: Sage.

McGann, James G. 2019.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cGann, James G. 2020. *2019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hink Tanks & Civil Societies Program, the Lauder institute and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rmar, I. 2004.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ir Roles in

Foreign Policy Making, Opinion Mobilization and Unofficial Diplomacy', In Stone, D. & Denham, A., eds,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Research and the Politics of Id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33.

Thunert, M. 2004. "Think Tanks in Germany." In Stone, D. & Denham, A., eds,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Research and the Politics of Id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33.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민주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8층, 10층)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29	7년 이상 : 38	자체고용: 0	
석사급: 25	2년 이상~7년 미만 : 16	외부파견: 0	
기 타: 19	2년 미만 : 19		
합 계: 73	합 계 : 73	합 계: 0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196,675,833	231,192,777	286,815,361	6,714,683,971	5,712,194,564	1,002,489,407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8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2018.12.15 ~2019.02.07	환경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법률의 의미와 후속과제	자체	11p	별첨1
01.01~01.09	산자증기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전환 제안	자체	9p	별첨2
01.01~01.29	과통위	청색경제 활성화 추진	공동	59p	비공개
01.01~04.12	경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역량중심 혁신적 포용	자체	46p	별첨3
01.01~04.24	정치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자체	43p	별첨4
01.01~04.29	정치	혁신적 포용의 비전 : 새100년의 꿈, 대한민국의 꿈, 민주당의 꿈	자체	40p	별첨5
01.02~01.07	외교통일	4차 북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자체	11p	별첨6
01.02~04.19	전체	지방정부(민선 6기) 사회적 경제 좋은정책 총람	공동	419	별첨7
01.03~04.28	환경노동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아젠다	자체	235p	별첨8
01.07~02.25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제도 개선방안	공동	47p	별첨9
01.10~01.18	정무위	왜 3.1혁명인가?	자체	8p	별첨10
01.14~01.24	산자증기	다가온 미래, 세계 최고수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	자체	8p	별첨11
01.15~01.31	산자증기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	7p	별첨12

02.01~04.30	정무 등	86세대 균열인가? 허상인가? 86세대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	자체/외부	44p	별첨13
02.02~02.12	기재위	SOC 투자의 방향전환, 생활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후 SOC 개선	자체	10p	별첨14
02.07~02.17	외교통일	김정은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자체	8p	별첨15
02.08~04.17	외교통일	‘진정한 광복 뉴비전 2045’ 포용외교 보고서	공동	18p	별첨16
02.11~03.05	행안위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단독	23p	별첨17
02.12~03.21	행안위	2019 다함께 정책엑스포 추진계획(안)	단독	22p	별첨18
02.20~02.28	정무위	왜 대한민국인가?	자체	10p	별첨19
02.25~03.06	산자중기· 환노위	‘한국형 그린 뉴딜’ 제안	자체	10p	별첨20
02.27~03.04	외교통일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자체	8p	별첨21
02.28~04.19	행안·국토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조선·관광업 기반 도시재생 추진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공동	7p	별첨22
02.28~04.25	행안·국토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스마트 산단 및 특례시 추진 (경상남도 창원시 사례)	공동	7p	별첨23
02.28~04.29	행안·국토위	경남 창원시의 지역현황과 특화정책	공동	18p	별첨24
02.28~04.29	행안·국토위	경남 통영시의 지역현황과 특화정책	공동	27p	별첨25
03.01~04.24	정무위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공동	93p	별첨26
03.01~04.29	정무위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 - 새100년의 꿈, 진정한 광복 2045 (정치)	공동	235p	별첨27

03.01~04.29	공 통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 - 새 100년의 꿈, 진정한 광복 2045	정책연구실 공동	248p	별첨28
03.02~03.11	산자증기	소상공인 실태를 통한 정책 방향 모색	자체	9p	별첨29
03.02~03.21	산자증기	부산 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	8p	별첨30
03.11~04.12	교문위	혁신적 포용노선~역량중심 프레임(평생학습 사회구상)	자체	40p	별첨31
03.13~05.02	행안·국토위	울산광역시의 지역현황과 특화정책	공동	24p	별첨32
03.20~04.04	산자증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방향,	자체	5p	별첨33
03.28~05.02	행안·국토위	부산광역시의 지역현황과 특화정책	공동	24p	별첨34
03.28~05.07	행안·국토위	부산광역시 동래·금정구의 지역현황과 특화정책	공동	27p	별첨35
04.01~04.10	국방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임시정부 한국군에 대한 정신적 및 실체적 정통성 논증	자 체	10p	별첨36
04.01~05.16	법제사법위원회	검·경 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	자체	18p	별첨37
04.02~04.10	정무위	혁신성장의 혈관, 혁신금융 확대 방안	자체	8p	별첨38
04.11~04.17	문체위	사람이 성장하는 어울림의 문화를 위해 - 혁신적 포용국가 향한 포용적 문화역량 담론정립	자 체	8p	별첨39
04.29~05.29	행안위	2020총선의 변수와 지형변화, 그리고 총선준비전략	단독	20p	별첨40
04.30~05.09	경제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가속화	자체	8p	별첨41
05.01~05.08	국방위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 - 더욱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자 체	7p	별첨42

05.01~05.10	기재위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가속화, 한국경제의 현주소 및 혁신성장 중점과제	공동	8p	별첨43
05.14~05.22	교문위	핵심공약 검토	자체	6p	별첨44
05.17~08.16	법제사법위원회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즉각 시행해야	자체	17p	별첨45
05.21~05.29	교문위	핵심공약 제안	자체	4p	별첨46
05.27~06.14	교육위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기본교육 계획(안)	단독	10p	별첨47
06.03~06.20	교문위	핵심공약 심화	자체	46p	별첨48
06.03~07.26	행안위	광주지역 핵심정책(안)	단독	20p	별첨49
06.13~06.26	정무위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	자체	4p	별첨50
06.15~12.09	교육위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실행계획(안)	단독	7p	별첨52
06.19~06.26	교문위	신산업 인재 육성 방안	자체	3p	별첨53
06.26~11.20	정무 (국회개혁)	투명한 국회, 열린 국회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 연구	자체+외부 전문가	226p	별첨54
07.01~07.18	교문위	지역거점대 경쟁력 강화 방안	자체	8p	별첨55
07.01~07.26	교문위	지역정책(경기도)	자체	26p	별첨56
07.01~08.16	행안·국토위	지역별 주요 공약(안)	공동	263p	비공개
07.05	법사위	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자체	3p	별첨51

07.08~07.12	교문위	고교무상교육 실행 방안	자체	2p	별첨57
07.08~08.13	행안위	전남지역 핵심정책(안)	단독	23p	별첨58
07.10~07.19	정무위	막말정치 막을 제도적 장치 선진국 비해 매우 퇴행적	자체	4p	별첨59
07.25~08.07	외교통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과제	자체	7p	별첨60
08.09~ 08.20	외교통일	외교안보 분야 비전 보고서	자체	10p	별첨61
08.17~10.08	법제사법위원회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자체	8p	별첨62
08.23~09.22	외교통일	평화경제 10대 과제	자체	17p	별첨63
09.01~10.10	행안·국토위	초광역지역 핵심정책(안)	단독	11p	비공개
09.01~11.31	전체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작성	공동	417p	별첨64
10.01~10.08	교문위	직업훈련 정책 제안	자체	21p	별첨65
10.4~10.16	외교통일	평화경제 3대 핵심정책	자체	13p	별첨71
10.10~10.25	정무위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	자체	8p	별첨66
10.15~10.22	산자위	일본의 경제침략, 소재부품 脫 일본화 호기	자체	4p	별첨67
10.15~10.23	산자위	한일 무역 갈등 100일 '일본의 관정패'	자체	5p	별첨68
10.20~10.30	산자위	'미래차 전략' 이 대한민국 제조업 명운 가른다	자체	5p	별첨69

10.24~10.28	기재위	내년 예산안,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잠재력 높인다	자체	5p	별첨70
11.01~11.07	국방위	분단 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자체	5p	별첨72
11.01~11.08	행안위	총선승리정당에는 3대 법칙이 있다	자체	8p	별첨73
11.06~11.14	교문위	고교체제 개편	자체	7p	별첨74
11.10~11.20	기재위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견실한 한국 경제	자체	7p	별첨75
11.28~12.14	외교통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대한민국 대도약의 新성장동력	자체	8p	별첨76
12.09~12.31	교문위	뉴트렌드 정책	자체	21p	별첨77

나. 토론회 등 개최(35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연속토론회	01.29 07: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2회)	바이오경제와 규제: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토론회	01.30	민주연구원 대회 의실	포용국가 비전	포용국가 의미와 보완 방향	
정책간담회	02.08	민주연구원 대회 의실	혁신적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 한 정책과제 발굴	
연속세미나	02.15 14:00	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2회)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속토론회	02.21 07: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3회)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	
민주자치 발전포럼③	02.26	경남 창원시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 추 진사업 현황과 과제	창원시의 주요사업과 현황 그리고 과제	
민주자치 발전포럼④	02.27	경남 통영시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 추 진사업 현황과 과제	통영시의 주요사업과 현황 그리고 과제	
대토론회	03.05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방분권·균형발전실현 대토론회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치분권·균 형발전 대토론회 I	03.05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 발전정책의 역할, 재정 분권과 재정조정 실현 방안 모색	

제2회 민생 경제포럼	03.11	부산	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부산 지역 소공인 경쟁 력 강화 방안 모색	
민주자치발 전포럼⑤	03.12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	울산광역시의 핵심정책 ; 현황 과 과제	울산의 수소경제, 신성 장동력의 과거와 대응 전략 모색	
연속토론회	03.21 07: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4회)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민주자치발 전포럼⑥	03.26	부산광역시의회 이음홀	부산광역시의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부산광역시의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모색	
민주자치발 전포럼⑦	03.27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산 금정·동래구의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부산금정·동래구의 2019년 핵심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모색	
연속세미나	04.10 14:00	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3회)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①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및 과제 도출(자활기업) / 사회적 기업 정책진단	
대한민국임시 정부, 대한민 국 100년을 그리다	04.10	국회의원회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평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 00년의 의의	
제3회 민생 경제포럼	04.11	울산	울산지역 자원순환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울산 지역 자원순환 소 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04.17	국회도서관	사립대 회계감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제4회 민생 경제포럼	04.2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 론회	세종 지역 소상인 경쟁 력 강화 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04.25 07: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5회)	5G 상용화 시대: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	
연속세미나	04.29 14:00	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4회) 사회적경제 문제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②	마을기업기본법 / 년 협동조합 관련 주요 이슈와 제안	
토론회	05.13	민주연구원	역량개발계좌제 전문가토론회		
공개토론회	05.21 14:00	국회 입법조사처 421호	사회적경제, 문제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③(종합토론회)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해 포용국가 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	05.23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고용평등주간 토론회 (민주연구원·민주당 서울시당 공동)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6.7%) 원인과 해결방안	공동주최
자치분권· 균형발전대 토론회Ⅱ	06.0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자치분권시대 지역혁신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제5회 민생 경제포럼	06.10	광주	광주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광주 지역 소공인 경쟁 력 강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08.13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 (민주연구원·정책위원회 공동)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인한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수출규제 대한 지원 정책	공동주최
토론회	06.14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 토론회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 자치경찰제및검·경 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	
일본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	7월~8월	각 기관별 순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향 모색	

정책페스티벌 토론회	09.2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	주요 광역지자체와 함께하는 평화경제 대토론회	
정책페스티벌 토론회	09.20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토론회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평화경제 실현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09.23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국회신뢰회복방안	국회신뢰도 불신의 주요원인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포럼	10.04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5당 정책연구원 · 국회미래연구원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공동포럼
국제 심포지엄	12.17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유관국 전문가들을 초청한 국제심포지엄	
토론회	12.17 10:20	국회의원회관 306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다. 교육 · 연수활동(73회)

교육 · 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신입당직자 교육연수	01.03	중앙당사 2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강원도당 광역의원 교육연수	01.29	춘천 스카이 컨벤션웨딩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충북도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01.10	괴산 자연드림파크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기초	

민주시민학교 '외교안보 아카데미'	02.16~02.24	당사 3층 회의실	주한 중국대사, 조현 외교부차관 등 외교안보전문가들의 강연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05	하이서울유스호텔 B1층 다이아몬드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07	하이서울유스호텔 B1층 다이아몬드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중앙당 신입당직자 교육연수	03.11	중앙당사 2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12	하이서울유스호텔 B1층 다이아몬드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14	하이서울유스호텔 B1층 다이아몬드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19	하이서울유스호텔 B1층 다이아몬드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울산광역시당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	03.22	국회 고성연수원 강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경기도 구리지역위원회 당원 워크숍	03.22	국회 고성연수원 소강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25	서울 도봉구민회관 2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3.29	서울 중랑구민회관 대극장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교육연수	03.30	경기도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4.02	서울 노원구청 6층 소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서울특별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4.12	서울 강동 호원아트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인천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4.15	인천 카리스호텔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인천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4.22	인천 로얄호텔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서울 송파(병)지역위원회 교육연수	04.22	송파(병) 지역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인천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4.23	인천 하나금융그룹 인재개발원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제주특별자치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09	제주 한화리조트 도두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14	수원컨벤션센터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16	수원컨벤션센터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21	안양 더그레이스퀘리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23	화성 푸르미르호텔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28	성남 메종 드 베르(4층)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5.30	성남 메종 드 베르(4층)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04	의정부 낙원웨딩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11	안산 상록 청소년수련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13	부천 시민회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18	고양 롯데백화점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20	고양 롯데백화점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전남도당 2019 민주정치아카데미	06.2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25	남양주 웨딩 러포엠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6.27	부천 시민회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경북도당 선출직공직자 및 핵 심당원 워크숍	07.19	대구 금오산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정책	
전북도당 부위원장단 워크숍 (간담회)	08.26	전북도당 대회의실	2020 총선의 변수와 지형변화 그리고 제언	
선관위 정당연수	08.27-09.05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각국 정당 및 선거기관 방문	
2019 전라북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8.28	전주역사박물관 강연장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전라북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8.29	익산 솔미예술회관 소공연장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전라북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8.30	장수군 한누리전당 3층 소공연장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광주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19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광주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20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대전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24	대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2층 연봉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대전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25	대전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충청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26	충남 당진 송악 농협 하나로마트 3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세종특별자치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27	세종 정부세종컨벤션 센터 1층 중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전라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09.30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채석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전라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01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채석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울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10	울산광역시당 민주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울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11	울산광역시당 민주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대구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22	대구달서구청 2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대구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23	대구남구청 드림피아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대구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24	대구 엑스코 본관 국제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부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28	부산동구청 1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부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29	부산남구청 1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부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30	부산연제구청 구민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부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0.31	부산 북구청 지하1층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10.31~11.1	속초 롯데리조트	정책개발 사례 발표	
2019 부산광역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01	부산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상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05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상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06	창원시청 2층 시민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상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07	진주 한국남동발전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상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08	거제시청 별관1동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양성평등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당직자교육	11.12	민주당 대강당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인식 교육 괴롭힘 예방 교육	
2019 강원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13	양양 솔비치리조트 B1 피카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강원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14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 4층 컨벤션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강원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15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전라남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19	목포 에메랄드웨딩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신입당 직자 교육연수	11.21	중앙당 2층 대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2019 경상북도당 지역위원회 순회 교육연수	11.28	대구 엑스코 본관 국제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12.17~12.18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국정목표와 과제부터 선거여론조사까지	

라. 정책홍보(14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1.18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왜 3.1혁명인가?	
01.31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02.28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의미	
03.11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소상공인 실태를 통한 정책 방향 모색	
03.21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부산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04.04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방향	
04.12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혁신적 포용노선-역량중심 프레임(평생학습 사회구상)	
04.24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04.29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	
06.26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국회 장기과행을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	
07.19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막말정치 막을 제도적 장치	
10.25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	
11.08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총선승리를 위한 정당혁신 방안	
11월	책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45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1.22	토론회자료	대구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자체발간		

01.29	토론회 자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2회) -바이오경제와 규제: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02.08	연구논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의 의미와 후속과제	자체발간	인터넷 공개 / 의원실 및 지역 위원회 알림	
02.15	보고서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1월, 2월 여론조사 활용	
02.15	세미나 자료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2회)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자체발간	30부 / 현장배포	
02.21	토론회 자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3회)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02.26	토론회자료	경상남도 창원시 :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자체발간	150부	
02.27	토론회자료	경상남도 통영시 :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자체발간	150부	
03.05	토론회자료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체발간	200부	
03.11	토론회자료	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방안 마련 토론회	자체발간		
03.12	토론회자료	2019 울산광역시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자체발간	200부	
03.21	토론회 자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4회)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03.26	토론회자료	부산광역시의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자체발간	150부	
03.27	토론회자료	부산광역시 금정·동래구 핵심사업 추진현 황과 향후 과제	자체발간	200부	

04.10	세미나 자료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3회)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①	자체발간	30부 / 현장배포	
04.10	총람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	자체발간	200부 /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배포	
04.11	토론회자료	울산지역 자원순화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체발간		
04.12	보고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역량중심 혁신적 포용	자체발간	300부 배포	
04.18	연구보고서	‘진정한 광복 뉴비전 2045’	연구실 공동	유관 기관 배포	
04.19	보고서	지방정부(민선 6기)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	자체발간		
04.24	보고서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자체발간	300부 배포	
04.24	토론회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자체발간		
04.25	토론회 자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5회) ‘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04.29	보고서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	공동연구	300부 배포	
04.29	세미나 자료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4회)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②	자체발간	30부 / 현장배포	
04.30	연구논문	86세대 균열인가? 허상인가? 86세대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	KCI 등재지 평화연구 27권 1호에 게재	연구 자료 활용	
05.21	세미나 자료	종합토론회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③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05.27	보고서	현안 보고서 “여론동향 및 총선 정당지지 변화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5.31	보고서	현안보고서 “세부집단별 유권자지형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05	토론회자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자치단체의 역할	자체발간	200부	
06.05	보고서	현안 보고서 “여론동향 및 문화변동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10	토론회자료	광주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자체발간		
06.12	보고서	유권자 지형분석 보고서 “2030세대 지지변동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14	보고서	유권자 지형분석 보고서 “가구소득별 지지율 차이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18	보고서	유권자 지형분석 보고서 “충청지역 여론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21	보고서	“상반기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검토”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25	보고서	현안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26	보고서	유권자 지형 보고서 “50대의 정치지향과 정책적 대응”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6.26	연구논문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	자체	인터넷 공개/ 의원실 및 지역 위원회 알림	
07.03	보고서	유권자 지형분석 보고서 “1인 가구 증가 분석”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07.05	연구논문	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자체	인터넷 공개 / 의원실 및 지역 위원회 알림	
07.30	보고서	현안 보고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자체발간	연구 자료 활용	
11월	보고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평가보고서	공동		
11.26	연구논문	투명한 국회, 열린 국회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 연구	자체+ 외부용역	20부 (국회미래연구원 제출)	
12.23	교육자료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자체발간	200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116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월~4월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작성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1월~5월	정책기획위원회	연구보고서 작성	혁신적 포용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	
01.04 07:30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길 16)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운영기획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담론 논의	
01.07 10: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부울경) 운영 방향(안)	
01.08 07:30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길 16)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운영기획회의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2회)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	

01.14 09:3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부울경) 운영 방향(안)	
01.17 15: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담> 발간 실무기획회의	총담발간 진행상황 점검 지방정부 정책자료 분류	
01.23 14:00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 및 사회적금융 비전포럼 참석	사회적경제센터장 및 실무자 참석	
01.23 14: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부울경) 운영 방향 논의	
01.25 10:00	서울 강남 M스퀘어 세미나실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3차)운영기획회의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3회) 추진 계획 논의	
01.28 09:3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부울경) 운영 방향 논의	
01.29 17:00	경기도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경기·인천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 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모색 (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1.30 17:00	대전시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 모색(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1.31 15: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담' 발간 실무기획회의	총담발간 진행상황 점검 정책 자료 카테고리 분류 작업	
02.11 09:3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부울경) 운영 방향(안)	
02.11~02.12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주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인문사회경제 분야 정책 제안 및 교류	
02.12 17:00	광주시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권역별(광주·전남)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 모색(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2.13 17:00	전북도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권역별(전북)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 모색(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2.14 15: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 발간 실무기획회의	총람발간 진행 상황 점검 정책자료 카테고리 분류 작업	
02.14 17:00	충북도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권역별(충북)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 모색(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2.18 09:3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등	
02.18 17:00	강원도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권역별(강원)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 모색(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2.20 17:00	인천시당 회의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권역별(인천) 순회 간담회’	사회적경제 지역 조직 실태조사, 조직정비 및 당원 활동 활성화 모색(사회적경제센터장 강연)	
02.25 09:3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민주자치발전센터 실무 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3,4회) 및 자치 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02.25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민주당 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	<사회적경제센터>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전 작성 지원	
02.26 15:00	국회의원회관 841호 (이원욱 의원실)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운영기획회의	에너지 분야(4회) 패널 구성 등	
02.27 14:00	경남 통영시청 대강당(2.27)	자치발전연구센터 민주자치발전포럼 지원(출장)	민주자치발전포럼 (부울경) 실무 지원	
02.28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 발간 실무기획회의	총람발간 진행상황 점검 정책 자료 카테고리 분류 작업	
03.04 09:3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민주자치발전포럼 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5회) 및 자치분권 권·균형발전실현 대토론회	

03.11 10: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민주자치발전포럼 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5회) 및 자치분권 권·균형발전실현 대토론회	
03.11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 발간 실무기획회의	총람발간 진행상황 점검 정책 자료 카테고리 분류 작업	
03.11 17: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좋은정책 총람’ 발간 실무기획회의	총람발간 진행상황 점검 정책 자료 카테고리 분류 작업	
03.12 14:00	울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민주자치발전포럼(5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울산 현장 실무 지원	
03.12 16:30	민주연구원 원장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본부 아시아담당 부서장 방문 간담회	상호 협력 및 스마트시티 세미나(6.17~21) 참여 방안 논의 찰스 드 비나쥬/나우만재단 아시아담당 부서장), 크리스티안 탁스(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등 참석	
03.14	백범기념관	기획, 실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 년위원회 출범식	
03.22 07:30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운영기획회의	제5회 포럼 주제 및 패널 구성, 포럼 운영방안	
03.25 09:4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민주자치발전포럼 점검회의	부산광역시 및 금정구, 동래구, 민주자치발전포럼 개최	
04.01 09:4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민주자치발전포럼 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보고서 작성	
04.25	경기도	2019년 춘계 경기도 정 책토론회	경기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05.14 09:15	민주연구원 원장실	신임 연구원장 업무보고	정책네트워크실 신임원장 업무보고	
05.21~05.23	화의도 및 봉화마을	故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청년단 활동	민주화 순례길 답사	
05.28	충북예술의전당 대회의실	충북도당, 제6차 정책콘서트	토론자	
05월	국가교육회의,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문	평생학습체제수립을 위한 법령 개선안 연구	
06.1~09.30	각 연구소 회의실	대기업 및 경제전문 싱크탱크 경정간담회 추진	일본 경제보복 대응	
06.03 14:00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서울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03 17:30	경기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경기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03	국회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원산지표시위반 근절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토론회 토론자 참석	
06.10 11:00	경남발전연구 원장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경남발전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11 10:00	부산시청(7층) 영상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부산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11 16:00	울산발전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울산발전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17 14:30	주한 일본 대사관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 (나가미네 야스미사) 면담	일본 싱크탱크 (인구문제연구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정책협약 체결 및 협력 방안 협의	
06.19 10:00	충북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충북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20 11:20	전북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전북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21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중국대사 간담회	주한 중국대사관, 민주연구원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논의	
06.24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 발표	
06.24 10:00	강원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강원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25 14: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국회미래연구원, 여야 5당 정당연구원 간담회	여야 5당연구원 업무 협력 논의	
06.27 11:20	대전세종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대전세종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28 10:00	충남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충남연구원	국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6.28	부산 경성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패널 토론자참여	『에너지 혁신정책의 분권화』 패널 토론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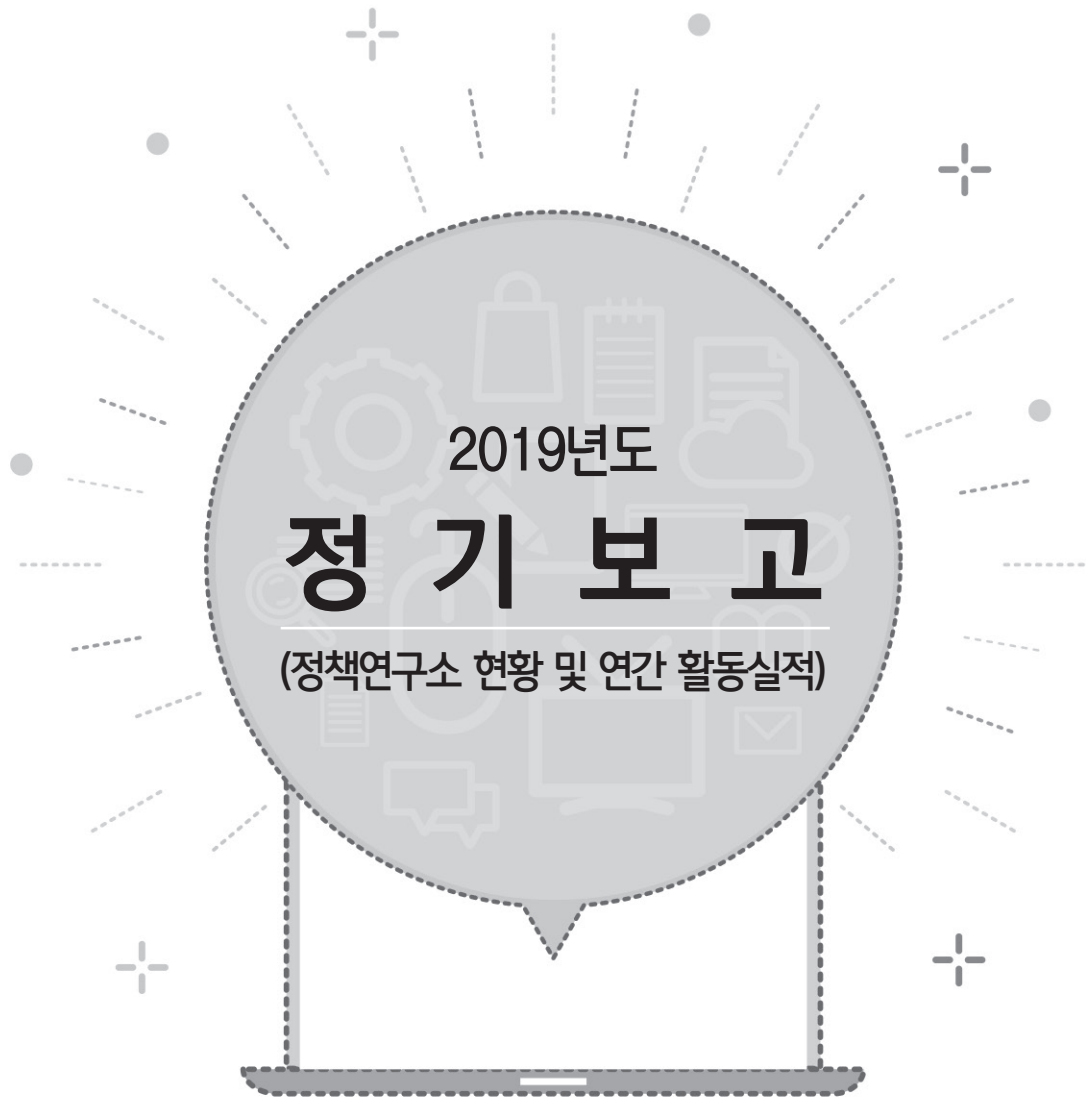
07.02	민주연구원	주한 호주대사 간담회	주한 호주대사관, 민주연구원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논의	
07.02 12:00	여의도	여야 5당 연구원장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오찬 간담회	여야 5당 연구원 실무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간 다자간 협력 체계구축 등 합의	
07.04~12.31	민주연구원	해외 주요 국가 싱크탱크 정책협약(MOU) 체결 추진	노동, 고령화, 중소기업 등 해외 주요 싱크탱크에 정책협약(MOU) 체결 제안 (7개국 9개 싱크탱크) 독일(AiF), 이스라엘(IPPI), 이탈리아(ART-ER/c.METO 5), 일본 등	
07.08 11:00	광주전남연구원 회의실	전국 광역 시도연구원 정책협약식- 광주전남연구원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 연구 협력 체결	
07.9~07.12	중국 베이징	민주연구원 대표단 중국 방문	중국 중앙당교와 정책협약 체결	
7월~현재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정책개발 파견	
7월~현재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정책개발 파견	
07.12 13: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여야 5당 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실무협의회의(제1회)	여야 5당 정당연구소 및 국회미래연구원 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방향 하반기 공동연구 과제 및 사업	
07.19 15: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여야 5당 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실무협의회의(제2회)	여야 5당 정당연구소 및 국회미래연구원 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방향 하반기 공동연구 과제 및 사업	
07.22 16:00	중소기업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7.23 10:00	LG경제연구원 회의실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LG경제연구원)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7.23 16:00	중견기업연구원 회의실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중견기업연구원)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7.25 15:00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회의실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7.26 15: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여야 5당 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실무협의회의(제2회)	여야 5당 정당연구원 및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네트워크 구축 방향, 하반기 공동연구 과제 및 사업	
07.29 16:00	삼성경제연구소 회의실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삼성경제연구소)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7.30 15:00	소상공인연구원 회의실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소상공인 연구원)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8.02 10:00	SK경영경제연구소	국내 대기업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 경청간담회 (SK경영경제연구소)	기업·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08.12 14:00	민주당 중앙당사 5층 제2소회의실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정책대회 준비TF 실무 점검회의	홍보방안(웹포스터, 라이브방송), 정책의제 확정, 정책제안 공간 제공 등 실무 점검	
08.14	주한 인도대사관	주한 인도대사 간담회	주한 인도대사관과 민주연구원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논의	
08.20 14:00	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정책대회 준비TF 실무 점검회의	대회 주제(포용국가와 평화경제), 중앙 의제(토론) 선정, 국정과제 선정, 대회 홍보 등 실무 점검	
09.1~12.30	K호텔 외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활동	부처실적설명회 참석 및 국정과제 이행상황 정책평가	
09.02 14:00	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정책대회 준비TF 실무 점검회의	토론 대회 진행, 포스터 제작, 내외빈 초청장 발송, 정책심사단 모집, 포상 등 실무 점검	

09.03 15:00	국회의원회관 302호 (정책위 회의실)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정책대회 준비TF 실무 점검회의	대행사 점검, 의제 선정 등 실무 점검	
09.05 12:00	여의도	정책 컨벤션 &페스티벌 실무자 회의	정책 컨벤션(11.1~2) 개최 관련 여야 정당연구원 참여 프로그램 논의	
09.09 15:30	민주당 중앙당사 6층 제3회의실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정책대회 실무 점검회의	정책심사단 선정, 진행사회 섭외, 초청장 발송, 포스터/현수막 제작	
09.19 09:30	국회의원회관 533호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위원회(제2차)회 의	교육연수 실행계획 논의 및 확정, 실무 당직자 파견 요청안	
09.20 10:00~17:00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제2세미나실)	더불어 정책페스티벌 개최(경연대회 정책심사단 참석)	평화경제 대토론회, 9.19평양 공동 선언 1주년 기념 세미나	
09.24 11:00	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더불어 정책페스티벌 지원TF 실무진 회의	정책페스티벌 평가보고서 발간 등 후속조치 논의	
09.24	민주연구원	국제교류재단 해외 의회 인사 연구원 예방	해외 10여 개국 의회 관계자 들의 민주연구원 방문 및 간 담회	
09.26~09.27	순천 정원박람회장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균형발전 관련정책 제안 및 교류	
10.04	국회의원회관	발제/토론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 과제 5당연구소 공동포럼	
10.11 09:00	국회의원회관 533호(박광온 의원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위원회 (제3차)회의	실행계획 및 실무TF 구성방안 논의	
10.14 14: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1차)실무회의	업무분장,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0.15	민주연구원	국제교류재단 인도 유력인사 연구원 예방	인도 집권여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10.17	서울 프레스센터	여심위 주최 『선거여론조사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토론자 참여	『선거여론조사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및 제도 개선방안』 패널 토론 참여	
10.21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2차)실무회의	실무기획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0.22	민주연구원	중국 라오닝 성 대표단 민주연구원 예방	중국 라오닝 성, 민주연구원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논의	
10.22 16: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총선 관련 대책 TF회의	21대 총선 대비 사업계획 논의	
10.23 16:0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총선 관련 대책 TF회의	21대 총선 대비 사업계획 논의	
10.28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복지대타협토론회	토론자	
11.1	일산 컨벤션센터	2019 대한민국 정책컨 벤션&페스티벌	‘국가정책경쟁력과 정당연구 소 역할’ 토론자 참석	
11.4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3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1.05 15:30	정책위원회 정책실	국가균형발전 정책간담회 개최 준비 관련 실무회의	일정협의, 참석자 및 발표자 섭외	
11.07 16:00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용산구 한남동)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대사 (페데리코 파일라) 면담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ART-ER, c.MET05) 및 협력 방안 협의	
11.11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4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1.14 16: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총선 공약 관련 기획 회의(1차)	총선 공약 관련 이벤트(프로모션) 계획 논의	
11.18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5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1.20 17: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총선 공약 관련 기획 회의(2차)	총선 공약 관련 이벤트(프로모션) 계획 논의	
11.25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6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2.02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7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2.09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8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2.16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9차)실무회의	실무기획,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12.19 15:30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종로구 서린동)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공관 차석 (라샤 아탐니) 면담	민주연구원-이스라엘 공공정책연구소(IPPI) 정책협약(MOU) 체결 등 한-이스라엘 협력 방안 협의	
12.20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10차)실무회의	1차 교육 연수 최종 점검 및 보완 사항 논의	
12.22~12.24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 육연수 현장 실무 지원	1차 교육 연수 현장 강연 및 연수 참석자 지원	
12.30 15:00	민주연구원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제11차)실무회의	1차 교육 연수 평가, 2차 교육 연수 점검 및 보완사항 등 논의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

여의도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6명	7년 이상 : 47	자체고용: 1명	
석사급: 21명	2년 이상~7년 미만 : 2	외부파견:	
기 타: 29명	2년 미만 : 7		
합 계: 56명	합계 : 56	합 계: 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4,492,854,078	40,004,361	3,055,974,391	7,588,832,830	5,870,566,455	1,718,266,375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264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1-1.10	기재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자체	6	이슈브리프
1.1-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대통령 공식 일정 빅데이터 분석	공동	25	현안보고
1.1-1.2	외교 통일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전망	자체	5	현안보고
1.2-1.10	교육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자체	8	이슈브리프
1.2-1.10	보건복지, 여성가족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 전환	자체	6	이슈브리프
1.2-1.12	정무	정당개혁방안 연구	자체	8	
1.2-1.19	정무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방안 제안	자체	3	
1.2-1.10	외교 통일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자체	19	이슈브리프
1.3-1.24	국토	주택공시가격 급속인상의 문제점	자체	7	현안보고 이슈브리프
1.8-1.24	문화체육관광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자체	6	이슈브리프
1.10-1.11	기재	신설법인 10만개 증가 ?	자체	3	현안보고
1.10-1.24	교육	2018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자체	7	이슈브리프
1.15-1.24	기획재정, 행정안전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부과기준 개편 필요	자체	7	이슈브리프
1.24-2.14	교육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공동	7	이슈브리프
1.28-2.1	외교 통일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과 향후 개선책	자체	3	현안보고
1.30-2.14	보건복지, 환경노동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자체	5	이슈브리프
2.1-2.4	산중	신한올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자체	8	이슈브리프
2.1-2.14	기재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자체	12	현안보고
2.8-2.20	정무	정책연구원 총선 정책 방향 연구	자체	21	
2.8	외교 통일	김정은 답방의 조건과 당의 대응책	자체	4	현안보고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2.15- 2.28	기재	퀘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자체	6	이슈브리프
2.15- 3.6	여성가족	2020총선승리를 위한 20대 여성의 마음을 얻는 법	자체	5	현안보고
2.19- 2.28	행정안전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부작용 우려	자체	7	이슈브리프
2.21- 2.25	외교 통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자체	13	현안보고
2.25- 3.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포털의 여론조작 방지 위한 법적 방안·개정 발의안 검토	자체	6	현안보고
2.25- 3.8	정부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군함의 레이더照射 갈등 분석 및 전망	외부 공동	13	
2.28- 3.1	외교 통일	‘하노이 회담’ 결렬 : 미 조야 및 국제사회 반응	자체	6	현안보고
3.2- 3.14	교육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자체	7	이슈브리프
3.5- 3.1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유튜브 활용과 정치자금법의 한계 및 시사점	자체	4	이슈브리프
3.8- 3.14	외교 통일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 원인, 평가, 전망	자체	17	이슈브리프
3.10- 3.2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종합편성방송 보도 팩트체크 공정성 및 중립성 분석	자체	16	현안보고
3.12- 4.22	외교 통일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 플랜 수립	외부	123	용역보고서
3.14- 3.14	외교 통일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한국에 ‘속도조절’ 경고 메시지?	자체	3	일일동향
3.15- 3.15	외교 통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文정부 탈북자 인권실태 에 문제 제기	자체	3	일일동향
3.18- 3.18	외교 통일	北 비핵화 방침에 한미 엇박자 논란	자체	3	일일동향
3.19- 3.19	외교 통일	靑 ‘긋 이너프 딜’ 제안… 미국의 ‘빅딜’ 과 정면 배치	자체	3	일일동향
3.20- 3.20	외교 통일	정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안, 미국은 거부	자체	3	일일동향
3.21- 3.21	외교 통일	美 ‘비핵화 빅딜’ 성사위해 남북한 동시 압박?	자체	3	일일동향
3.22- 3.22	외교 통일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문제 관련 한미 이견 증폭	자체	3	일일동향
3.24- 3.28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언론브리핑(3.24)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체	5	현안보고
3.25- 3.25	외교 통일	트럼프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북한 달래기 나서	자체	3	일일동향
3.26- 3.26	외교 통일	한미간 누적된 불신이 이상기류로 표출	자체	4	일일동향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3.26- 5.10	외교 통일	문재인정부 失政과 黨의 대응 : 대북통일·안보외교 분야	외부	116	용역보고서
3.27- 3.27	외교 통일	미북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치열한 살바 싸움	자체	3	일일동향
3.28- 3.28	외교 통일	포스트 하노이 대비... 김정은의 분주한 독자적 움직임	자체	3	일일동향
3.29- 5.9	기재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공동	193	보고서
3.29- 3.29	외교 통일	美, 김정은식 ‘비핵화’ 거짓 쇼 인식	자체	3	일일동향
3.30- 4.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ICT 포털 정책 분석	자체	5	현안보고
4.1- 11.30	법사	국회신뢰도 제고방안 -국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체	210	보고서
4.1- 11.30	법사	의원입법의 국회기능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자체	57	보고서
4.1- 4.1	외교 통일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위해 4.11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자체	3	일일동향
4.2- 4.2	외교 통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임박 징후	자체	3	일일동향
4.3- 4.3	외교 통일	美 ‘한미일 3각 공조 동참’ 입장 표명	자체	3	일일동향
4.4- 4.4	외교 통일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프레임 확산	자체	3	일일동향
4.4- 4.10	외교 통일	北의 우리당에 대한 정치공작과 대책	자체	3	현안보고
4.5- 4.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영방송의 국가재난보도 시스템 정책 및 문제점	자체	6	현안보고
4.5- 4.5	외교 통일	“비핵화 관련? 내부단속?” ... 김정은 모종의 결단 임박	자체	3	일일동향
4.8- 4.8	외교 통일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자체	3	일일동향
4.9- 4.9	외교 통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남북미 ‘동상삼뿔’	자체	2	일일동향
4.10- 4.10	외교 통일	한미 정상회담 D-1, 문재인과 트럼프 2시간 회담	자체	3	일일동향
4.11- 4.12	외교 통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및 대응방안	자체	6	현안보고
4.12- 4.12	외교 통일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제안 트럼프 공식 거부	자체	3	일일동향
4.16- 4.16	외교 통일	北 “오지랴 중재자” 발언에도 文 “‘장소·형식에 구애없이 4차 남북회담 열자’ 제안	자체	4	일일동향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4.17- 4.17	외교 통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비핵화 협상... 차질 불가피	자체	3	일일동향
4.19- 4.19	외교 통일	北, 미국에 ‘빅딜’ 아닌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 내놔라” 동시다발 압박	자체	4	일일동향
4.20- 5.2	정무	한일 단교 시뮬레이션 분석 및 전망	외부 공동	11	
4.22- 4.22	외교 통일	미·일, 북·러, 중·러 ‘동북아 외교’ 슈퍼워크 ... 韓 외교적 고립	자체	4	일일동향
4.23- 4.23	외교 통일	韓美공조 균열 및 韓日갈등 심화	자체	3	일일동향
4.24- 5.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반려동물 지원방안	자체	4	현안보고
4.24- 5.8	환경노동	밀레니얼 세대가 본 자유한국당	자체	4	현안보고
4.24- 4.24	외교 통일	가속화되는 동북아 합종연횡... 한국만 외톨이?	자체	2	일일동향
4.25- 4.25	외교 통일	김정은-푸틴 오늘 8년만에 북·러 정상회담	자체	3	일일동향
4.26- 4.26	외교 통일	러, 한반도 비핵화 개입 공식화	자체	3	일일동향
4.29- 4.29	외교 통일	판문점선언 1년... 한국의 ‘외교 고립’ 만 심화	자체	4	일일동향
4.30- 4.30	외교 통일	美北 비핵화 협상... 美, ‘빅딜’ 이 대안임을 재확인	자체	4	일일동향
5.1- 5.1	외교 통일	폼페이오, ‘제재 유지’ 강조 vs. 최선희, ‘강경 선회’ 시사	자체	3	일일동향
5.2- 5.2	외교 통일	비핵화 협상 관련 미국의 강온양면	자체	3	일일동향
5.2- 5.2	외교 통일	북핵폐기 로드맵, 어떻게 해야 하나	자체	3	결과보고
5.3- 5.3	외교 통일	日, 한국 대신 ‘새로운 비핵화 중재자(?)’	자체	3	일일동향
5.4- 5.7	국방	北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응방안	자체	5	현안보고
5.7- 5.7	외교 통일	韓美, 비핵화 협상 판 깨질까 전전공공	자체	3	일일동향
5.7- 5.7	국방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자체	9	결과보고
5.7- 5.8	외교 통일	<북한 체제전환 ①> 주요국 사례연구와 시사점	자체	5	결과보고
5.8- 5.10	외교 통일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미 조야의 평가와 전망	자체	6	현안보고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5.8- 5.10	환경 노동	그 많은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자체	3	결과보고
5.10- 5.10	외교 통일	文정부 출범 2주년, 북한의 미사일 2발 축포	자체	4	일일동향
5.10- 5.13	외교 통일	문재인 정부 2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	자체	7	결과보고
5.13- 5.23	정부	총선 아젠다 세팅 방안 연구	자체	10	
5.13- 5.13	외교 통일	北 미사일 도발 및 美中 무역갈등의 후폭풍	자체	4	일일동향
5.13- 5.14	외교 통일	<북한 체제전환 ②> 체제전환 개념과 유사시 북한의 필요성	자체	4	결과보고
5.14- 5.14	외교 통일	美北 교착 장기화... ‘북한궤 환흔들기’ 지속 전망	자체	4	일일동향
5.14- 5.15	외교 통일	<북한 체제전환 ③> 북한체제의 위기발생 가능성 및 촉발·억제요인	자체	6	결과보고
5.15- 5.30	정부	김원봉 서훈 타당성 분석	자체	15	
5.15- 5.15	외교 통일	압류된 北 화물선... 美北관계 쟁점으로 급부상	자체	4	일일동향
5.16- 5.16	외교 통일	對北 식량지원 딜레마... 韓美간 온도차 뚜렷	자체	3	일일동향
5.17- 5.17	외교 통일	트럼프 訪韓... 靑 관심, ‘北과 대화 재개 뿐’	자체	4	일일동향
5.20- 5.20	외교 통일	북한, 對美·對南 비난공세 본격 재개	자체	4	일일동향
5.21- 5.21	외교 통일	정부, 나흘째 침묵 중인 ‘북한 달래기’에 적극적	자체	3	일일동향
5.22- 5.22	외교 통일	文대통령의 현실부정 失言, ‘단도 미사일’ 해프닝	자체	4	일일동향
5.22- 5.23	외교 통일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영향과 전망	자체	4	결과보고
5.23- 5.23	외교 통일	美, ‘反화웨이 캠페인’ 시작 ... 美中 사이에 낀 한 국	자체	4	일일동향
5.24- 5.24	외교 통일	멀어지는 南北, 장기교착 美北, 일촉즉발 美中	자체	2	일일동향
5.27- 5.27	외교 통일	美日 밀착, 北 외면, 中 압박... 韓 외교고립 심화	자체	4	일일동향
5.28- 5.28	외교 통일	美日 정상, 북핵 입장 일치... ‘중재자 文 → 아베’	자체	4	일일동향
5.28- 5.29	기타	Young Conservative : 日 자민당 홍보/전략 사례	자체	13	현안보고
5.29- 5.29	외교 통일	승승장구 美日동맹, 곤두박질 韓美동맹	자체	4	일일동향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6.1- 6.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발의안 비교분석	자체	8	현안보고
6.3- 6.15	정무	최근 5년간 정당 지지율 분석	자체	7	
6.3- 6.3	외교 통일	점입가경 美中 갈등… 아시안안보회의(상그릴라)서 정면 충돌	자체	4	일일동향
6.3- 6.7	외교 통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참여방안	자체	3	결과보고
6.4- 6.4	외교 통일	韓美연합사 ‘평택 이전’ … 군사동맹 역량 분산(?)	자체	4	일일동향
6.5- 6.5	외교 통일	韓, 美中 사이 ‘선택의 기로’ 에 직면	자체	4	일일동향
6.7- 6.17	정무	정당 지지도 관리 방안 연구	자체	4	
6.7- 6.7	외교 통일	‘테크發 신냉전’ … 韓, 새우 등티질 위기	자체	4	일일동향
6.10- 6.24	정무	유권자 성향 분석 및 지역 발전 전략 연구- 충청권	자체	8	
6.10- 6.10	외교 통일	中, 한국기업 협박 vs. 美, 청와대 압박… 靑 “기업들이 알아서”	자체	5	일일동향
6.11- 6.11	외교 통일	美中 갈등의 새로운 뇌관… 홍콩 반환시위 점점 더 과열	자체	5	일일동향
6.13- 6.27	정무	선출된 독재 해외사례 연구	자체	16	
6.13- 6.13	외교 통일	김정은 ‘친서 외교’ … 비핵화 협상 재개 실마리(?)	자체	4	일일동향
6.14- 6.14	외교 통일	金, ‘친서 외교’ … 美, ‘대화·압박’ 강온전략 응수	자체	4	일일동향
6.14- 6.17	외교 통일	태영호의 북 비핵화 해법 관련 제언	자체	3	결과보고
6.17- 6.17	외교 통일	文, 대북정책 근본 변화냐? 일시 후퇴냐?	자체	4	일일동향
6.17- 6.21	외교 통일	미중 패권시대 대중국 외교전략 관련	자체	4	결과보고
6.18- 6.18	외교 통일	시진핑 訪北, 새로운 ‘對美 레버리지’ 확보 차원	자체	3	일일동향
6.19- 6.19	외교 통일	트럼프 ‘홍콩 카드’ … 시진핑 ‘평양 카드’ 로 맞대응	자체	3	일일동향
6.24- 6.24	외교 통일	美 조야에서 한미동맹 관련 인식과 한국당에 대한 제언	자체	4	결과보고
6.26- 6.26	외교 통일	G20 한일 정상회담 무산, 양국의 책임 떠넘기기	자체	3	일일동향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6.26- 6.27	외교 통일	北선박 귀순사건 관련 향후 대책 마련	자체	2	결과보고
6.27- 6.27	외교 통일	문 대통령 대북메세지, 한미간 시각차 우려	자체	3	일일동향
7.1- 7.15	정무	미중 기술패권 경쟁 분석 및 전망	외부 공동	13	
7.1- 7.1	외교 통일	트럼프, 정전 66년만에 북한 땅 밟은 첫 미국대통령	자체	5	일일동향
7.1- 7.10	법제 사법	난민정책 기본원칙	자체	6	포지셔닝 페이퍼
7.2- 7.2	외교 통일	미북 관문점 회동 덮은 '한일 경제전쟁'	자체	5	일일동향
7.2- 7.2	외교 통일	북한 선박 입항 관련 당의 대응책 모색	자체	4	결과보고
7.3- 7.3	외교 통일	일본의 추가보복 우려 속 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자체	5	일일동향
7.4- 7.4	외교 통일	급소만 노린 치밀한 일본, 별거 있겠나... 허찔린 한국	자체	5	일일동향
7.5- 7.5	외교 통일	한일 대결 본격화, 일본 경제보복 vs. 청, 정면대응	자체	5	일일동향
7.9- 7.9	외교 통일	문 대통령 일본 무역제한 철회해야, 첫 입장 표명	자체	4	일일동향
7.10- 7.10	외교 통일	정부, 日중재위 요구 거부, 한일 정면 충돌	자체	5	일일동향
7.11- 7.12	외교 통일	한일 경제갈등 진단과 대책	자체	3	결과보고
7.12- 7.22	정무	포퓰리즘에 위협받는 글로벌 자유민주주의체제 분석	외부 공동	11	
7.13- 7.31	정무	대한민국 근현대사 사례 연구- 이승만 대통령편	자체	14	
7.15- 7.15	외교 통일	한일 통상갈등, 경제전쟁 전면전으로 확대	자체	4	일일동향
7.16- 7.16	외교 통일	文,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수출 규제' 해결 불가	자체	6	일일동향
7.16- 7.22	법제 사법	난민정책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자체	5	포지셔닝 페이퍼
7.17- 7.17	외교 통일	靑, 일본 제안 수용 불가, 하루만에 강경 선회	자체	4	일일동향
7.17- 7.17	외교 통일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	3	결과보고
7.18- 7.18	외교 통일	한일, 강경 여론전 진행 하 미묘한 기류 변화	자체	5	일일동향
7.19- 7.19	외교 통일	文대통령-5당 대표, 일본 규제 철회 요구	자체	4	일일동향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7.19- 7.19	외교 통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	자체	4	결과보고
7.22- 7.22	외교 통일	아베, 이변없는 승리… 추가보복 압박	자체	2	일일동향
7.22- 7.26	외교 통일	평화 vs. 전쟁 프레임 대응논리 개발	자체	6	현안보고
7.23- 8.7	환경노동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본 자유한국당 1, 2, 3차 결 과보고서	자체	10	현안보고
7.23- 7.23	외교 통일	아베, ‘한국 약속위반’, 이틀 연속 강공	자체	2	일일동향
7.23- 8.1	법제 사법	난민(refugee) 바로 알기	자체	7	이슈리포트
7.24- 7.24	외교 통일	중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노골적 견제	자체	2	일일동향
7.25- 7.25	외교 통일	중러, 21세기 함포외교, 한미일 중심의 동북아질 서 파괴	자체	2	일일동향
7.26- 7.26	외교 통일	북만 보며 4강외교 손놓은 사이, 동해는 화약고	자체	2	일일동향
8.5- 8.5	외교 통일	한일 경제전쟁, 초기 산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자체	6	일일동향
8.6- 8.6	외교 통일	미중·한일 복합 악재, 증시 시총 49조 증발	자체	6	일일동향
8.7- 8.21	정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례 연구	자체	11	
8.7- 8.7	외교 통일	美中 전면전 사이에 낀 한국의 운명	자체	6	일일동향
8.9- 8.9	외교 통일	일본의 수출규제, 수도권지 전략	자체	5	일일동향
8.13- 8.2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영방송과 신문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자체	8	현안보고
8.14- 8.14	외교 통일	한국 향해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중세트 완성	자체	5	일일동향
8.14- 8.23	법제 사법	난민 관련 사회적 논란	자체	10	이슈리포트
8.16- 8.29	보건복지, 여성가족	확대되는 1인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자체	8	이슈브리프
8.16- 8.16	외교 통일	비판수위 낮춘 한일, GSOMIA 연장 1차 분수령	자체	2	일일동향
8.19- 8.27	기타	관점을 바꾸면, 표(票)가 보인다	자체	41	연찬회자료
8.20- 8.20	외교 통일	북한, 핵있는 경제강국이 최종 목표	자체	5	일일동향
8.21- 8.21	외교 통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GSOMIA 중대 분수령	자체	4	일일동향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8.22- 8.22	외교 통일	지소미아의 운명 이르면 오늘 NSC 결정	자체	3	일일동향
8.23- 8.29	외교 통일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배경, 의도, 파장	자체	8	이슈브리프
8.25- 9.10	정무	대한민국 근현대사 사례 연구- 김구 선생	자체	17	
8.26- 8.26	외교 통일	文대통령 국정운영 환경 대내외적 악화 일로	자체	5	일일동향
8.27- 8.27	외교 통일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미국 방위비 압박	자체	3	일일동향
8.28- 8.28	외교 통일	일본,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자체	4	일일동향
8.30- 8.30	외교 통일	美 지소미아 파기 불만 점점 더 격화	자체	3	일일동향
9.1- 9.1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포털 실시간검색어 정책 분석	자체	6	현안보고
9.1- 9.19	보건복지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외부 전문 가	8	이슈브리프
9.2- 9.2	외교 통일	70년 한미동맹 위기, 냉기류 급속 확산	자체	4	일일동향
9.2- 9.11	법제 사법	독일·미국의 난민정책과 시사점	자체	11	이슈리포트
9.3- 9.3	외교 통일	北, 지소미아 파기 후 본격 선전전 돌입	자체	4	일일동향
9.5- 9.5	외교 통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망, 김현종의 작품	자체	3	일일동향
9.6- 9.19	기재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자체	6	이슈브리프
9.6- 9.17	정무	월남전 참전수당 현황 및 분석	자체	13	
9.9- 9.2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문재인 정부 정책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공동	17	현안보고
9.9- 9.9	외교 통일	美, 비핵화 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	자체	4	일일동향
9.10- 9.19	외교 통일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 쟁점과 대책	자체	11	이슈브리프
9.11- 9.11	외교 통일	미국엔 손 내밀고, 한국엔 무력도발	자체	3	일일동향
9.15- 10.2	보건복지, 문 화체육관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평가와 대응방향	자체	10	현안보고
9.16- 10.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영방송 프로그램 패널 및 주제 전수조사 분석 보고서	공동	11	현안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9.16-9.16	외교 통일	트럼프 대북 강온정책,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자체	4	일일동향
9.17-9.17	외교 통일	미국엔 손 내밀고, 한국엔 무력도발	자체	4	일일동향
9.18-9.18	외교 통일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마이웨이’ 행보 확실히	자체	3	일일동향
9.19	교육	대입제도 현안조사 분석 리포트	자체	6	현안보고
9.19-9.19	외교 통일	트럼프, 여론 의식 ‘방북 준비 안돼, FFVD 유지’	자체	3	일일동향
9.20-9.20	외교 통일	폼페이오 ‘대북 원톱’, 튀는 볼턴 빼고 팀 플레이어 투입	자체	2	일일동향
9.20-9.26	법제 사법	난민과 탈북민 : 국제사회에서 탈북민의 지위	자체	6	이슈리포트
9.23-9.23	외교 통일	北과 대화 앞둔 美, 단계적 비핵화 검토	자체	3	일일동향
9.24-9.24	외교 통일	文 대통령, 트럼프에 北 안정보장 구상 제안	자체	3	일일동향
9.26-10.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자체	6	이슈브리프
9.26-9.26	외교 통일	트럼프 탄핵절차 돌입, 북핵협상 영향 불가피	자체	4	일일동향
9.27-10.10	기재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자체	6	이슈브리프
9.27-9.27	외교 통일	미북 핵협상에 돌출한 ‘트럼프 탄핵 리스크’	자체	3	일일동향
9.30-11.2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국민 생활 정책 개발 연구	외부 전문가	200	
9.30-9.30	외교 통일	‘서로 양보’, ‘빨리 개선’ ... 한일관계 전환 싹트나	자체	2	일일동향
10.1-10.15		생활의 변화를 알아야 표가 보인다	자체	8	현안보고
10.1-10.28	기재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 최근 경제 위기상황 진단 및 시사점	자체	9	현안보고 이슈브리프
10.1-10.1	외교 통일	美, 협상 앞둔 북 보란듯 ICBM 발사 예고	자체	2	일일동향
10.2-10.2	외교 통일	미북 실무협상 재개, 하노이 노딜 이후 8개월만	자체	2	일일동향
10.3-10.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영방송 프로그램 가짜뉴스 팩트체크 분석 보고서	공동	8	현안보고
10.4-10.4	외교 통일	北, 레드라인 밟았는데, 트럼프 ‘SLBM 침묵’	자체	2	일일동향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0.4-10.10	국방	북한 SLBM 발사 : 의도, 평가, 전망	자체	11	이슈브리프
10.5-10.24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자체	13	현안보고
10.7-10.7	외교 통일	미북 스톡홀름 노딜, 북 ICBM 거론하며 업포	자체	3	일일동향
10.8-10.8	외교 통일	北, ‘안전하고 불가역적인 적대철회(CIWH)’ 요구	자체	3	일일동향
10.10-10.2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영방송 보도의 중립성에 관한 연구	자체	11	현안보고
10.10-10.31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주요 국가별 게임정책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입장 비교	자체	15	현안보고
10.10-10.10	외교 통일	한미 뒷집에 안보리 차원 ‘북 SLBM 규탄 성명’ 불발	자체	3	일일동향
10.11-10.11	외교 통일	트럼프의 급소 찌르려는 北, ICBM 발사재개 위협	자체	3	일일동향
10.14-10.14	외교 통일	李 총리 22일 방일, 문 대통령 메세지 들고 아베 면담	자체	3	일일동향
10.15-11.19	산중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자체	9	현안보고 이슈브리프
10.15-10.15	외교 통일	스톡홀름 ‘노딜’ 전망, 비건 ‘정례 협의기구’ 제안	자체	3	일일동향
10.16-10.16	외교 통일	해병대, ‘함박도 초토화 계획’ ... 가공할 화력전 전개	자체	2	일일동향
10.17-10.31	법사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외부	8	이슈브리프
10.17-10.17	외교 통일	김정은 ‘백두산 등정쇼’ ... 세상이 놀랄 작전 펼것	자체	3	일일동향
10.18-10.18	외교 통일	김연철 장관 ‘무관중 경기 북한 공정한 조치’ 발언 논란	자체	3	일일동향
10.21-10.21	외교 통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	자체	3	일일동향
10.22-10.22	외교 통일	李 총리, ‘지소미아 종료 전 정상회담’ 제안 가능성	자체	2	일일동향
10.22-10.31	국방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외부	13	이슈브리프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0.23-10.23	외교 통일	러시아 군용기 6시간 동안 KADIZ 유린	자체	3	일일동향
10.24-10.24	외교 통일	김정은 금강산 청산 “기분 나쁘고 너절하다”	자체	4	일일동향
10.28-10.28	외교 통일	백악관이 기피하는 김영철 내세운 북한	자체	3	일일동향
10.29-10.29	외교 통일	한일정부, 징용 보상 아닌 경험 기금안 논의	자체	2	일일동향
11.8-11.12	국방	여권발 모병제 논란과 우리의 대응	자체	6	현안보고
11.10-11.2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영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연구	공동	21	현안보고
11.10-11.19	교육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자체	9	이슈브리프
11.11-11.11	외교 통일	北주민 비밀리에 복송한 청와대	자체	2	일일동향
11.12-11.12	외교 통일	홍콩 경찰 맨손 시위대에 실탄 사격, 최악의 홍콩 사태	자체	2	일일동향
11.12-11.21	외교 통일	탈북자 강제복송 :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	외부	10	이슈브리프
11.13-11.13	외교 통일	방위비 증액 몰아치는 美	자체	2	일일동향
11.14-11.14	외교 통일	北 주민 송환, 헌법, 국제법, 인권 위반 행위	자체	2	일일동향
11.18-11.18	외교 통일	북한이 시비하자 한미 공중훈련 연기	자체	2	일일동향
11.19-11.19	외교 통일	트럼프까지 대북 조급증, 비핵화 사라지고 김정은 기고만장	자체	2	일일동향
11.20-11.20	외교 통일	한미 방위비 협상, 미 대표단 협상장 박차고 나갔다	자체	2	일일동향
11.21-12.31	아동복지	뉴스 연령 제한 도입	공동	10	정책제안서
11.21-11.29	국토교통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정책 비전과 기본 방향	자체	5	현안보고

연구 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11.21- 11.21	외교 통일	美,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검토… 파장과 대안	자체	2	일일동향
11.25- 11.25	외교 통일	지소미아 살렸지만, 66년 다져온 ‘한미동맹 곤경’	자체	2	일일동향
11.26- 11.26	외교 통일	연평도 도발 9년 되는 날, 金 포격지시 대놓고 합의 위반	자체	2	일일동향
11.28- 11.28	외교 통일	北의 잇단 도발·말폭탄에도 굴하지 않는 ‘對北 바라기’	자체	2	일일동향
11.29- 11.29	외교 통일	北, 초대형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자체	2	일일동향
12.2- 12.2	외교 통일	‘3대 난제’, 방위비협상·북핵문제·한일갈등	자체	2	일일동향
12.4- 12.4	외교 통일	미북 기싸움 재개, 강경 대치국면으로 회귀	자체	2	일일동향
12.5- 12.16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쟁점과 대응방향	자체	9	이슈브리프
12.6- 12.19	기재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자체	6	이슈브리프
12.9- 12.9	외교 통일	기로에 선 북한의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자체	2	일일동향
12.10- 12.10	외교 통일	트럼프는 온니 ‘재선’, 문재인은 오직 ‘평화’	자체	2	일일동향
12.11- 12.11	외교 통일	美, 2년만의 안보리 소집, 北도발 압박만 부를 것	자체	2	일일동향
12.12- 12.12	외교 통일	北, ‘연말 도발’ 임박한 가운데… 美, 안보리 소집 이은 대북정찰 강화	자체	2	일일동향
12.13- 12.13	외교 통일	北의 ICBM 위협에 ICBM 맞불카드 꺼내든 美	자체	2	일일동향
12.16- 12.16	외교 통일	핵폭주 北, ICBM·SLBM 동시위협 vs. 美, 레드라인 넘지마라	자체	2	일일동향
12.18- 12.22	외교 통일	美 트럼프 탄핵안 하원통과 관련 평가와 파장	자체	6	현안보고

나. 토론회 등 개최(83건)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공개 토론회	1.31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북전략	대북 관계 현주소를 점검, 향후 대응방안 마련	공동주최(국 가안보특위)
공개 토론회	2.11	국회의원 회관	한미동맹 진단과 제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한미동맹 향방 및 미북정상 회담 전후 상황 분석 및 향 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정 책과제를 마련	공동주최(정 중섭의원실)
정책 세미나	2.18	여의도 연구원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과 전 망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시 나리오별로 분석·전망, 당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자체
정책 세미나	2.21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 나실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최저임금과 가계경제 탈원전 에너지가격과 소 비자경제	여연 공동주최 이종인 지 정토론
정책 세미나	3.1	여의도 연구원	‘2.28 하노이선언’ 결과: 평가 및 전망	2차 미북회담 공동성명 (〈하노이선언〉)의 주요내 용 분석, 핵심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자체
정책 세미나	4.1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 나실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고용통계, 현장목소리 진단	文정권백서 특위 공동주최
세미나	4.3	당사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랙 투쟁평가 좌담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2차 회의	
간담회	4.5	시민 정치원	빅데이터로 본 밀레니얼세대 의 특성	빅데이터로 본 밀레니얼세대의 특성	
전문가 간담회	4.16	위워크 여의도점	전문가 Meetup : 안보통일분야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의 견 공유를 통한 외교안보 통일 구상안 마련	자체
간담회	4.23	가락시장 역 인근 카페	수도권(서울) 1차 간담회	서울 거주 청년 대상 자유한국당 인식 및 정책니즈 파악	
공개 토론회	4.27	국회의원 회관	(판문점 선언 1년) 한국군 전력 약화의 심각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너지가는 한국군 전력 약화의 심각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	공동주최 (바른사회 시민회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공개 토론회	4.29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 회실	그 많은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현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 립	자체
간담회	5.2	시민정치원	제2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트 파악	
간담회	5.7	위워크 여의도점	수도권(서울) 2차 간담회	서울 거주 청년 대상 자유한국당 인식 및 정책니즈 파악	
세미나	5.14	당사	당원과 인재의 유입, 교육, 육성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3차 회의	
간담회	5.22	한남동 다음소프 트	제3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트 파악	
간담회	5.23	외계인 방앗간	하마터면 꼰대가 될 뻔했다 1차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및 당 발전방안 청취	
공개 토론회	6.2	서울지방 변호사회 관 대회 의실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	민노총의 귀족노조화로 인해 왜곡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 대한민국 발 전을 위한 해결책 모색	공동주최(대 한민국 시 민사회단체)
국제 세미나	6.3	국회	청년의 정치참여 방법과 독일 기민당(CDU) 청년 정치 인의 역할	독일 시민정치교육의 효 과, 독일 청년 정치인의 정당 내 활동상	
세미나	6.3	연남동 잠깐	총선 및 지방선거의 공천, 지방조직(시도당 및 당협)의 운영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4차 회의	
간담회	6.7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글로벌 코리아 초청강연 PART1 DATA is BLOOD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의 중요성에대한 지역석 Elsevier(엘스비어) 회장 강연	
간담회	6.7	김세연 의원실	게임중독 질병코드 관련 간 담회	게임중독 질병코드 반대 입장 파악 및 토론	
간담회	6.11	국회 의원회관	2020경제대전환 지속가능복 지분과 1차 회의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및 분과 운영방안 논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6.13	시민 정치원	제4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트 파악	
토론회	6.18	국회 의원회관	2020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2020경제대전환 출범 취 지 및 5개 분과 주제 발 표.토론	
간담회	6.2	우남관	이승만 대통령 바로알기	근현대사 재조명	
세미나	6.25	여의도 연구원	정당 의사결정의 구조 & 온 라인 정당화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5차 회의	
토론회	6.26	판교 글 로벌게임 허브센터	게임, 취미인가? 질병인가? 토론회	게임중독 질병코드 반대입장 및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논의	
간담회	6.26	국회 의원회관	2020경제대전환 지속가능복지분과 2차 회의	지속가능한 복지 비전 및 정책과제 논의	
간담회	6.27	외계인 방앗간	하마터면 폰대가 될 뻔했다 2차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및 당 발전방안 청취	
세미나	7.1	여의도 연구원	선거여론조사의 A to Z	선거대비 전문가 세미나 1차	
정책 간담회	7.2	국회 의 원회관 제10간담 회의실	미디어 정책 현안과 대응과제	글로벌 미디어에 대응한 공영 미디어 경영구조 문 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 미디어 정책 현안 점검	자체
간담회	7.2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 회의실	예술청년반상회 1차	클래식음악계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시간강사법)	
세미나	7.2	당사	당의 이념, 철학, 가치, 강령, 문화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6차 회의	
세미나	7.9	여의도 연구원	당의 전략, 마케팅, 재정,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7차 회의	
간담회	7.12	시민 정치원	제5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트 파악	
세미나	7.16	당사	보수정당의 핵심가치와 행동 강령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8차 회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7.18	국회의원 회관 김세연의 원실	예술청년반상회 2차 간담회	공연, 대중문화분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7.18	외계인 방앗간	하마터면 끈대가 될 뻔했다 3차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및 당 발전방안 청취	
공모전	7.23-8 .23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단편시 공모전	우리에게 정치란? 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단편시 공모전 개최	
세미나	7.23	당사	핵심가치별로 슬로건과 액션플랜	미래정당 설계도 구상을 위한 9차 회의	
토론회	7.23	국회 의원회관	2020경제대전환 지속가능복지분과 토론회	지속가능한 복지 비전 발 표 및 토론	
세미나	8.2	여의도 연구원	선거대비 슬로건	정국전망 2차 세미나	
간담회	8.5	여의도 연구원	주거정책 1차 간담회	주거권 보장 논의	
공개 토론회	8.5	국회 헌정기념 관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文정권의 역사 왜곡 상황을 점 검, 올바른 역사 정체성 수립 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	공동주최(대 한민국 시 민사회단체)
간담회	8.7	팔레토	예술청년반상회 3차간담회	공연, 대중문화분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8.9	시민 정치원	제6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드 파악	
세미나	8.13	여의도 연구원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조국 5대 불가론	정국전망 1차 세미나	
세미나	8.14	여의도 연구원	선거 메시지의 A to Z	선거대비 전문가 세미나 2차	
세미나	8.26	신촌 토즈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국제정세를 전망했던 위인들의 통찰력에 대한 학습	
세미나	9.3	여의도 연구원	정국현안에 대한 2030의 반응	정국전망 3차 세미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9.5	국회의원 회관 제7간담 회실	예술청년반상회 4차 간담회	클래식음악계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표준근로계약서)	
간담회	9.6	시민 정치원	제7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트 파악	
세미나	9.9	신촌 토즈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9.18	여의도 연구원	동영상 촬영과 편집의 모든 것	선거대비 전문가 세미나 3차	
공개 토론회	9.23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 회실	반려동물 진료비합리화를 위 한 토론회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표준진료제, 진료비 사전 공시제 관련 논의	공동주 최강석진 의원
세미나	9.23	신촌 토즈	한미 관계	한미 관계의 현재와 미래	
간담회	9.23	국회 보 건복지위 원장실	리빙랩 전문가 간담회	리빙랩 개념 및 국내외 사례 논의	
정책 토론회	9.24	국회 의 원회관 제1세미 나실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 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 유 침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	공동 (국회의원 최연혜)
세미나	9.24	여의도연 구원	제3지대 민심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	정국전망 4차 세미나	
간담회	9.24	여의도연 구원	주거정책 2차 간담회	현장건축가 관점에서 본 주거정책 논의	
긴급 간담회	10.1	국회 의 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	집회 참가 인원의 올바른 추계를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사회적 논란이 되는 집회 참가 인원 추계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보도 기 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	자체
세미나	10.1	여의도 연구원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대응방안	정국전망 5차 세미나	
세미나	10.7	신촌 토즈	한중 관계	한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10.8	여의도 연구원	광장의 세대결, 실종된 대의정치	정국전망 6차 세미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10.11	시민 정치원	제8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드 파악	
세미나	10.21	신촌 토즈	미래의 젊은 그들	국제 정세를 전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통찰	
세미나	10.23	여의도 연구원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기다움 & 자기소개 비법	선거대비 전문가 세미나 4차	
긴급 간담회	10.24	국회 의 원회관 제1세미 나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정책 간담회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공동(당 미 디어특위, 국회의원 정태옥)
정책 세미나	10.27	국회 헌 정기념관 앞 잔디 마당	미디어정책 평가 타운미팅	미디어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 소통의 장 마련, OTT 및 미디어 산업 정 책 현장 목소리 청취	자체
세미나	11.2	당사	당의 변화·전진·재건을 위한 젊은 정치인 세미나	보수통합 전망	
공개 토론회	11.4	국회의원 회관 제2 소회의실	대중문화산업의 평가와 발전 을 위한 대토론회	문재인정권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공동주최 박인숙 의원
공개 토론회	11.5	국회 의 원회관 제2소회 의실	소상공인정책평가 대토론회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전 문가 평가 및 전망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논의	공동(당 소 상공인특위, 국회의원 김규환)
간담회	11.8	시민 정치원	제9차 생활변화관측담 간담회	소셜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트렌트 파악	
정책 세미나	11.11	국회 본관	소상공인 정책 토크콘서트	민생 경제 정책 평가 및 민생 현장 전문가 및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자체
공개 토론회	11.13	국회의원 회관 제7 간담회의 실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 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공유 플랫폼 상생 모델 모색위한 업계, 학계, 정 부부처 간담회	자체
세미나	11.13	여의도 연구원	달인에게 듣는 지역구 관리의 비법	선거대비 전문가 세미나 5차	
공개 토론회	11.13	한국프레 스센터 프레스클 럽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 탄, 문제점과 대안	최근 민생경제 파탄 현실 을 진단, 한국 경제를 살 릴 정책대안 구축	공동주최(대 한민국 시 민사회단체)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공개 토론회	11.15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반려동물장묘, 펫테크, 펫 TV 등 반려동물 전반적 인 산업관련 규제 혁신 논의	공동주 최 경대수 의원
공개 토론회	11.18	국회의원 회관 제1 소회의실	미디어정책평가 및 발전 방 향 모색 토론회	미디어정책 신문·방송· 통신·OTT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공동주최(당 미디어특위)
간담회	11.21	여의도 연구원	주거정책 3차 간담회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12.6	국회 본 관	민부론 후속입법 세미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입법 조치사항 논의	
공개 토론회	12.23	한국프레 스센터 매화홀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文정부 출범 이후 초래된 안보위기 및 외교실패 현 황을 파악, 향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시	공동주최(대 한민국 시 민사회단체)

다. 교육·연수활동(6건)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우아한형제들 기업 방문	4.18, 6.1	송파 우아한형제들 본사	배달의민족 업무환경 및 업무방식 파악	
역사 특강	4.19	여의도연구원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 국가 흥망성쇠 와 부활의 21세기 나 침반	김경준 딜 로이트컨 설팅 부회 장
MS오피스365 워크샵 참석	6.11	MS오피스	MS오피스 업무환경 및 업무방식 파악	
배민다움 저자 특강	6.27	시민정치원	배달의민족 브랜딩 논의	홍성태 교수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10.31-11.1	속초 롯데리조트	정당정책연구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논의	중앙선관 위 주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핵심당직자 당원교육 강의	11.28	아트센터고마	문화속에 숨겨진 좌파 전략 -공수처에도 드리 운 문화선동	

라. 정책홍보(118건)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5.12-5.29	인터넷	카드뉴스 제작	<친절한 여연氏> 일일안보통일 브리핑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총 13회
6.5	인터넷	sns 게재	<DATA is BLOOD>	세미나
6.19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여의도연구원 연구인턴 채용모집 공고	모집 공고
6.25	인터넷	sns 게재	< ‘게임, 취미인가? 질병인가?’ 토론회 개최>	소식
6.27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제1회 선거대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선거여론조사 A to Z”	소식
7.2	인터넷	sns 게재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모집	모집 공고
7.23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여의도연구원 단편시 공모전	공모전 공고
7.26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제2회 선거대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선거 메시지의 A to Z”	소식
8.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9년 8월 7일] 여의도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언론보도/ 보도자료
8.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9년 8월 8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대학생 정책연구 연합동아리 ‘더 무브먼트’ 업무협약 체결	언론보도/ 보도자료
8.13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청년 변호사들과 함께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말한다	토론회/ 보도자료
8.1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단편시 공모전	보도자료
8.19-8.28	인터넷	설명회	여연설명회 ppt 제작	설명회
8.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단편시 공모전 당선자 발표	소식
8.3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제3회 선거대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동영상 촬영과 편집의 모든 것”	소식
8.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언론보도
9.16	인터넷	sns 게재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소식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9.17	인터넷	sns 게재	여의도연구원·최연혜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 인 가?’ 토론회 개최	소식
9.18	인터넷	sns 게재	여연용어대사전_정치특강#1. 사모펀드	카드뉴스
9.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재인 대통령·조국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보도자료
9.2	인터넷	sns 게재	여연용어대사전_정치특강#2. 공상(feat. 보훈처)	카드뉴스
9.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9.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최연혜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 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 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10.2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제4회 선거대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기다움 & 자기소개 비법“	소식
10.7	인터넷	sns 게재	여연용어대사전_정치특강#3. 리빙랩	카드뉴스
10.1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이슈브리프 2019-08]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보고서 발간
10.17	인터넷	sns 게재	민부론_#1.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카드뉴스
10.29	인터넷	sns 게재	민부론_#2. 살맛나는 국민	카드뉴스
10.3	인터넷	sns 게재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팩트 체크 5	카드뉴스
10.31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이슈브리프 2019-09]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 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 입의 필요성과 과제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보고서 발간
10.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제5회 선거대비 전문가 초청 세미나 “ 달인에게 듣는 지역구 관리의 비법“	소식
10.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 안내	소식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9년 11월 1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아전인수” ... 팩트체크로 반격 나선 한국당 싱크탱크	언론보도
11.6	인터넷	sns 게재	민부론_#3. 신바람 나는 기업	카드뉴스
11.15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 어정책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소식/ 보도자료
11.1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탐사보도 콘텐츠 수상작 모음집	자료집 발간
11.18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축적 없이 혁신 없다	세미나
11.1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정책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보도자료
11.1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 단 탐사보도 콘텐츠 시상식	보도자료
11.21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이슈브리프 2019-10]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 받은 국격(國格) / 공유모빌리티 ‘타 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헌 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보고서 발간
11.21	인터넷	sns 게재	민부론_#4. 희망찬 4차 산업	카드뉴스
12.2	인터넷	sns 게재	민부론_#5. 시장존중, 국민신뢰, 부동산 정책	카드뉴스
12.19	인터넷	홈페이지 /sns 게재	[이슈브리프 2019-11]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팽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 훈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보고서 발간
4.11-12.31			@ydi_unofficial 비정책홍보 63회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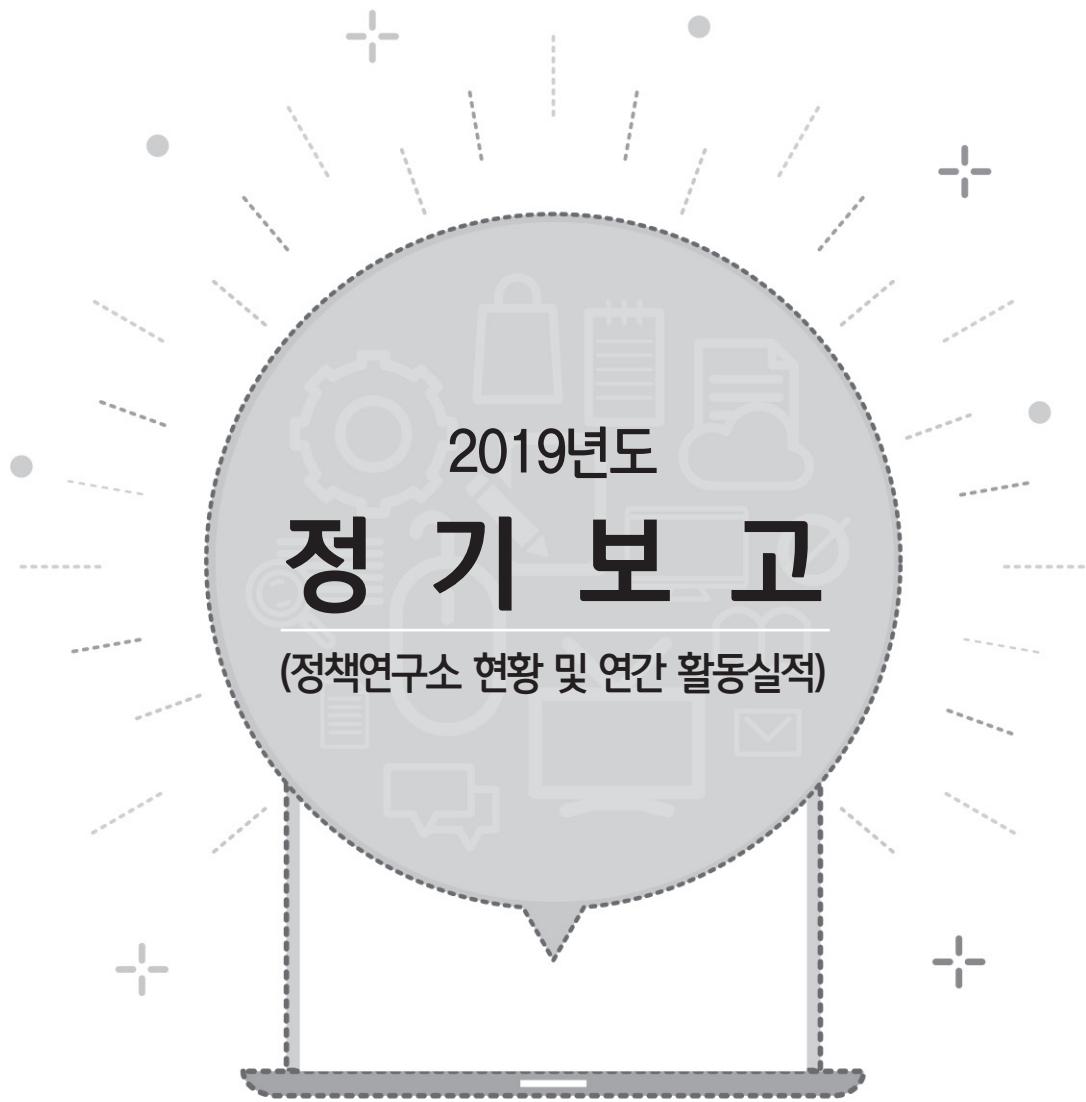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10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1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4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2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31	토론회 자료집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북전략	자체	10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2.14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3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2.2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4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3.14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5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4.27	토론회 자료집	한국군 전력 약화의 심각성	자체	10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5.9	정책보고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한국 경제	자체발간	300부	
6.28	정책 자료집	안보실정백서(초판) “안보가 안 보인다”	공동 (당 북핵특위)	50부, 주요 당직자 배포	
8.2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6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9.19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7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9.23	토론회 자료집	반려동물 진료비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10.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8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31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09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1.4	토론회 자료집	대중문화산업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 료로 활용	
11.15	토론회 자료집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체발간	20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 료로 활용	
11.18	토론회 자료집	미디어정책평가 및 발전 방향 토론회	자체발간	20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21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10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19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9-11	자체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25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18	여의도연구원	동향보고	체육계 성폭력	
1.21	여의도연구원	비대위원장 말씀자 료 작성	체육계 성폭력	
1.25-1.26	양평 대명리조트 백합홀	한국평화연구학회 워크숍 및 학술대회 참석	2018년 남북관계 개선 관 련 교류협력의 장애요인 및 기회요인 분석	
2.2	여의도연구원	원내 워크숍 발표	2019사회전망	
3.7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	대진대 DMZ연구원 학술회의	제2차 베트남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3.11	여의도연구원	동향보고	타깃 2030, 대표 이미지 관 리를 위한 PI 보고서 작성	
3.14	여의도연구원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료 작성 발표	고용/일자리, 자영업 분야	
3.25-5.10		자유한국당 경제실정 백서위원회	집필 및 발간 실무지원단으로 참여	징비록
4.3	여의도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북핵폐기 협상 실패원인 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5.15	여의도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심상찮은 美軍 움직임 등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 상황 점검	
5.17	국회 의원회관	전문가 인터뷰	국정원법 개정 관련 심의 과정의 문제점 파악	
5.21	여의도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前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과 정치적 합의 분석	
5.31	선문대학교	선문대 주최 학술세미나	“지자체의 남북경협 참여 방안” 세미나 패널로 참석/ 발표	
6.4-9.1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집필 및 발간에 참여	민부론
7.1~	미디어특위 위원장실(국회의 원 박성중)	당 미디어특위	미디어정책 및 현안대응	
7.8	여의도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김여정 권력서열 상승의 합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7.17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심재철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구멍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 패널로 참석/발표	
7.23	국회 의원회관	2020경제대전환위 원회, 노사분과 3차 공개토론회	노동의식과 관행 대전환	토론자
10.22	자유한국당 당사	여성아카데미 특강	“최근 외교안보 현실과 우리의 선택” 주제로 안보특강 진행	
10.24	여의도연구원	日 방위연구소 인터뷰	방위비 협상, 한일관계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인터뷰 진행	
10.28	국회 의원회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주최 ‘복지 대타협’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10.31-11.1	속초 롯데리조트	중앙선관위 주관 <2019 정당정책연 구소 워크숍>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 및 연구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11.12	헤럴드경제	칼럼 기고	점증하는 장기복합불황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언론 기고
11.13	한국 프레스센터	대한민국시민사회단 체, 여의도연구원	문재인정부의 민생파탄 문제점과 대안	토론자
11.26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	“비핵화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 방안 ” 세미나 패널로 참석/발표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

바른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11	7년 이상 : 3	자체고용:	
석사급: 6	2년 이상~7년 미만 : 12	외부파견:	
기 타: 2	2년 미만 : 4		
합 계: 19	합 계 : 19	합 계: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978,028,735	32,995,144	3,112,703,190	6,123,727,069	1,826,244,347	4,297,482,722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34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14~2.28	정치	바른미래당 신뢰도 제고 및 혁신 방안	외부용역	30p	별첨1
1.14~3.13	정치	2019 현 정세분석과 향후 바른미래당 대응전략	외부용역	104p	별첨2
1.15~2.28	정치	바른미래당 진로모색과 지지율 제고 방안	외부용역	106p	별첨3
1.16~4.15	정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공천시스템 연구	외부용역	97p	별첨4
3.21~3.25	외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토론회 쟁점 분석	자체	16p	별첨5
3.27~4.1	정치	추첨민주주의	자체	15p	별첨6
3.31~4.3	행안	군 복무 보상에 관한 쟁점	자체	6p	별첨7
4.1~4.7	외교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정책적 대응	자체	19p	별첨8
4.15~4.17	외교	4.10 한미정상회담의 평가와 남북관계 교훈	자체	12p	별첨9
4.15~4.19	행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정책적 대응	자체	12p	별첨10
4.26~11.26	정치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136p	별첨11
5.3~5.10	외교	문재인정부 집권 2주년,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나	자체	6p	별첨12
5.18~5.22	보건복지	협동조합유치원 안착 방안	자체	5p	별첨13

5.20~5.24	보건 복지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지원방안	자체	9p	별첨14
5.25~5.29	보건 복지	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방향	자체	9p	별첨15
6.7~6.12	정치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자체	8p	별첨16
6.8~6.13	정치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공천 개혁의 방향과 제언	자체	11p	별첨17
7.5~7.10	행안/ 외교	신냉전 시대의 기술안보	자체	8p	별첨18
7.10~7.15	정치	기술민족주의시대의 수구민족주의전쟁	자체	8p	별첨19
7.12~7.17	외교	북미 비핵화 교착국면에서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	자체	4p	별첨20
7.15~9.8	정치	바른미래당 개혁방안 개발 (Conversion of Ideas) 보고서	외부 용역	94p	별첨21
7.17~7.22	교육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본질과 대안	자체	4p	별첨22
7.19~7.23	외교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주고받기 가능한가	자체	6p	별첨23
7.30~10.29	정치	주요 국가의 정당 가치 비교와 한국 유권자 인식에 관한 연구	외부 용역	100p	별첨24
8.4~8.8	행안	지자체의 기본소득제 도입확산에 따른 문제점 비판	자체	7p	별첨25
8.20~8.26	정치	중도개혁노선의 제논리 비판	자체	16p	별첨26
8.23~8.27	보건 복지	가정양육수당 조정방안	자체	4p	별첨27
8.26~8.30	보건 복지	참여소득 관점 정리	자체	6p	별첨28

8.26~10.25	정치	21대 총선과 제3당의 정책 의제 연구	외부 용역	141p	별첨29
10.21~10.27	외교	한미동맹과 비핵화 협상의 함수관계 : 분석과 전망	자체	7p	별첨30
10.23~10.31	정치	20대 남자 보고서	자체	6p	별첨31
10.24~11.4	정치	올해의 단어 ‘조커’와 ‘내전’	자체	5p	별첨32
12.4~12.11	정치	여론조사에 응하는 유권자 태도	자체	12p	별첨33
12.4~12.12	정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현주소와 현실적 대안	자체	6p	별첨34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34부.

나. 토론회 등 개최(95회)

개최명	일 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여론조사	1.1~1.31	전국	바른미래당 정체성 관련 버즈분석조사	바른미래당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 조사	
여론조사	1.5~ 1.6	전국	정당지지도 및 정치현안에 대한 전국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및 정치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토론회	1.8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치 평가 및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는 선거제도 개혁 모색	
포럼	1.9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결 방안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결 방안	바른미래 포럼
여론조사	1.1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당 청년지지율 제고를 위한 FGI 1차	바른미래당 청년지지율 제고 방안 모색	

여론조사	1.1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당 청년지지율 제고를 위한 FGI 2차	바른미래당 청년지지율 제고 방안 모색	
여론조사	1.14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당 청년지지율 제고를 위한 FGI 3차	바른미래당 청년지지율 제고 방안 모색	
여론조사	1.17~1.18	전국	탈원전 정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파악	
포럼	1.23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화주의의 중도적 해석	극단적인 좌우 진영을 넘어 중산층·중도층을 강화하는 통합의 논리로 공화주의 해석	바른미래 포럼
여론조사	1.28~28	전국	바른미래당 지지층 및 무당층 대상 정치인식조사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점 및 인식 분석	
토론회	1.24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스카이 캐슬을 넘어서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위한 성찰과 모색	우리나라 입시체제의 미래지향적 청사진 고찰	
토론회	2.11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창당 1주년 기념 - 대한민국 새판짜기 :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진로	바른미래당의 비전과 전략 마련	
포럼	2.13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탈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 : 진단 및 정책적 대응	탈원전 문제를 경제성과 안정성 진단	
학술회의	2.18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당 신뢰도 제고와 혁신방안	바른미래당 신뢰도 제고와 혁신방안	
토론회	2.19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여론조사	2.21	전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전국 여론조사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전국 여론조사	
토론회	2.25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3·1운동은 청년운동이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21세기 청년들의 역사인식 고찰	
포럼	2.27	중앙당 대회의실	빅데이터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치활용 방안 모색	바른미래 포럼
여론조사	33~ 34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판세점검 전략수집 여론조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판세점검 전략수집 여론조사	
토론회	3.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여론조사	38~ 39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1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39~ 310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2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포럼	3.13	중앙당 대회의실	21대 총선 선거예측을 위한 읍면동레벨 DB구축	사회, 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21대 총선 선거예측 DB 구축	바른미래 포럼
공청회	3.14	바른미래당 창원성산 선거사무소	민생이 우선인 정치 - 창원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창원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여론조사	315~316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3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포럼	3.2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2020년 총선대비 : 새판짜기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응전략	2020년 총선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주도적 역할과 향후 대응전략 모색	바른미래 포럼
여론조사	323~324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4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326~327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5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론조사	
학술회의	3.27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천 시스템 개선방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공천제도 개선방안 모색	
여론조사	330~331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판세점검 전략수집 여론조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판세점검 전략수집 여론조사	
토론회	4.3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군 복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방안 모색	
세미나	4.5	서울 마포 꾸머 스페이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전문가 초빙 정책세미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전문가 초청 세미나	
토론회	4.9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승리를 위한 과제	정치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역할	
포럼	4.1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택일'논쟁을 통해 본 역사전쟁의 정치학	남한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 북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학문적 미래 지평을 열고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 모색	바른미래 포럼
간담회	4.11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세미나	4.19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1차 세미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개혁과제 모색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포럼	4.24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화주의Ⅱ : 중도정당의 지방분권화-읍면동 마을공화국 실현의 제도와 방안	3,500여개의 읍면동 마을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실천방안 모색	바른미래 포럼
간담회	4.25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세미나	5.3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세미나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포럼	5.9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세계 경제패턴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계의 새판짜기에 대비하고, 새로운 선도모델로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의 과제 검토	바른미래 포럼
간담회	5.1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여론조사	5.10~5.11	전국	대북 식량지원관련 전국 여론조사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세미나	5.2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세미나	한국인의 복지인식 구조탐색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간담회	5.3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여론조사	5.31~6.1	전국	게임중독 및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게임중독 및 현 정치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세미나	6.7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세미나	사회보장정책 발전방향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간담회	6.7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포럼	6.1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대통령제가 헌법 원리에 따라 작동하기 위한 과제 탐색	바른미래 포럼
좌담회	6.1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연구원 반연간지 편집 1차 기획회의	연구원 반연간지 편찬을 위한 구성 및 콘텐츠 모색	편집위원회 제1차 회의

간담회	6.18	국회의원회관	청년정책연구위원회 현장 간담회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세미나	6.19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세미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연속 토론회	6.26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신냉전과 기술안보 I - 화웨이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비전과 전략 마련	
간담회	6.26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6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여론조사	6.28~6.30	제주	제주 제2공항 관련 제주도민 여론조사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 조사	
세미나	7.1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적연금 전문가 제1차 세미나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 연구	
학술회의	7.5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총선 핵심공약 아젠다 개발을 위한 1차 학술회의	총선 핵심공약 아젠다 개발	
연속 토론회	7.8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신냉전과 기술안보 II -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새로운 냉전체제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인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	7.8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6차 세미나	기본소득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포럼	7.1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신냉전 기술 안보시대의 민족주의와 역사전쟁	강대국 사이의 기술분쟁에서 '기술이 곧 안보'라는 인식 속에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담론 모색	
간담회	7.1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7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학술회의	7.15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총선 핵심공약 아젠다 개발을 위한 2차 학술회의	총선 핵심공약 아젠다 개발	
세미나	7.15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적연금 전문가 제2차 세미나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 연구	
토론회	7.1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노회찬과 한국정치,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	故 노회찬 의원 추모 1주년을 맞아 한국 정치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	

여론조사	7.18	글로벌리서치 본사	바른미래당 지지층 및 잠재지지층 FGI 1차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향후 미래 전략 모색	
여론조사	7.22	글로벌리서치 본사	바른미래당 지지층 및 잠재지지층 FGI 2차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향후 미래 전략 모색	
토론회	7.22	마산 합포구청 중회의실	창원 마·창·진 자치구 추진 정책토론회	창원 마·창·진 자치구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세미나	7.2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7차 세미나	미래학교 특징과 교육의 방향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여론조사	7.22~7.23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전북도민 여론조사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전북도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7.23	글로벌리서치 본사	바른미래당 지지층 및 잠재지지층 FGI 3차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향후 미래 전략 모색	
여론조사	7.23	글로벌리서치 본사	바른미래당 지지층 및 잠재지지층 FGI 4차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향후 미래 전략 모색	
간담회	7.25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8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좌담회	7.3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연구원 반년간지 편집 2차 기획회의	연구원 반년간지 편찬을 위한 구성 및 콘텐츠 모색	편집위원회 제2차 회의
세미나	8.5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적연금 전문가 제3차 세미나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 연구	
연속 토론회	8.9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제1차 연속토론회 - 바른미래당 사회개혁 아젠다 선정, 당원 토론회	당원들의 현장 의견 청취·수렴을 통해 당의 사회개혁 과제 우선순위 선정	
좌담회	8.1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당 어디로 가야 하나, 총선 승리전략	연구원 반년간지 편찬을 위한 특별 좌담회	편집위원회 제3차 회의
간담회	8.14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8차 세미나	한국 사회보장 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래복지 구상 작업 계획	사회정책 연구위원회
세미나	8.19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적연금 전문가 제4차 세미나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 연구	

연속 토론회	8.22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2차 연속토론회 - 바른미래당 어디로 가야 하나?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정계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간담회	8.22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9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연속 토론회	8.27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3차 연속토론회 - 공적연금 통합방안	직업별로 분리해 있는 제도간 격차를 시정하고 연금제도 개혁방안 모색	
여론조사	93~ 94	전국	정당지지도 관련 전국국민 대상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관련 전국국민 대상 여론조사	
간담회	9.6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0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토론회	9.1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전망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모색	
간담회	9.19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1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학술회의	9.23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주요국가 정당 특성 및 가치 비교와 한국유권자 인식 연구	주요국가 정당 특성 및 가치 비교와 한국유권자 인식 연구	
세미나	9.23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적연금 전문가 제5차 세미나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 연구	
토론회	10.4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과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	10.1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2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간담회	10.26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3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간담회	1026~27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바미제라블을 위한 6대 불공정타파 플리마켓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토론회	10.28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체계의 근본적인 혁신과 사회적 공론화 형성	

여론조사	11.1~11.15	전국	안철수·유승민 투표자 스윙행태 분석 여론조사	안철수·유승민 투표자 스윙행태 분석	
포럼	11.13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공간 빅데이터의 선거활용 가능성	공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11.14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4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간담회	11.28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5차 회의	청년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청년정책 연구위원회

다. 교육·연수활동(4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ARS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통계분석 기법 강의	5.17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ARS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통계분석 기법 강의	연구소 집합교육
사무처 당직자 직무교육	4.11	중앙당 대회의실	성희룡 예방교육	집합교육
바른미래당 2019 인권교육	9.2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성인지 교육	집합교육
2019년도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10.31 ~ 11.1	강원 속초 소재 롯데 리조트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촉진 및 기능강화	

라. 정책홍보(85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결 방안	포럼
1.2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공화주의의 중도적 해석	포럼
1.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스카이 캐슬을 넘어서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회
2.1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창당 1주년 기념 - 대한민국 새판짜기 :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진로	토론회

2.1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탈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 : 진단 및 정책적 대응	포럼
2.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2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3·1운동은 청년운동이었다	토론회
2.2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빅데이터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포럼
3.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토론회
3.1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21대 총선 선거예측을 위한 읍면동레벨 DB구축	포럼
3.1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민생이 우선인 정치 - 창원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공청회
3.2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2020년 총선대비 : 새관짜기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응전략	포럼
3.2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토론회 분석	이슈페이퍼
4.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추첨민주주의	이슈페이퍼
4.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
4.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군 복무 보상에 관한 쟁점	이슈페이퍼
4.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정책적 대응	이슈페이퍼

4.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승리를 위한 과제	토론회
4.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택일'논쟁을 통해 본 역사전쟁의 정치학	포럼
4.11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차 회의	간담회
4.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정책적 대응	이슈페이퍼
4.19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1차 세미나	세미나
4.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공화주의 II : 중도정당의 지방분권화-읍면동 마을공화국 실현의 제도와 방안	포럼
4.25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회의	간담회
5.3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세미나	세미나
5.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세계 경제패턴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포럼
5.1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문재인정부 집권 2주년,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나	이슈페이퍼
5.10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회의	간담회
5.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협동조합유치원 안착 방안	이슈페이퍼
5.22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3차 세미나	세미나
5.2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지원방안	이슈페이퍼
5.2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방향	이슈페이퍼

5.30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회의	간담회
6.7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세미나	세미나
6.7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회의	간담회
6.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포럼
6.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이슈페이퍼
6.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공천개혁의 방향과 제언	이슈페이퍼
6.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세미나	세미나
6.2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신냉전과 기술안보 I - 화웨이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연속 토론회
6.26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6차 회의	간담회
7.1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공적연금 전문가 제1차 세미나	세미나
7.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신냉전과 기술안보 II -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연속 토론회
7.8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6차 세미나	세미나
7.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신냉전 기술 안보시대의 민족주의와 역사전쟁	포럼
7.1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신냉전 시대의 기술안보	이슈페이퍼
7.12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7차 회의	간담회

7.1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기술민족주의시대의 수구민족주의전쟁	이슈페이퍼
7.15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공적연금 전문가 제2차 세미나	세미나
7.16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노회찬과 한국정치,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	토론회
7.1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북미 비핵화 교착국면에서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	이슈페이퍼
7.22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창원 마·창·진 자치구 추진 정책토론회	토론회
7.22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7차 세미나	세미나
7.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본질과 대안	이슈페이퍼
7.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주고받기 가능한가	이슈페이퍼
7.25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8차 회의	간담회
8.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공적연금 전문가 제3차 세미나	세미나
8.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지자체의 기본소득제 도입확산에 따른 문제점 비판	이슈페이퍼
8.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제1차 연속토론회 - 바른미래당 사회개혁 아젠다 선정, 당원 토론회	연속 토론회
8.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바른미래당 어디로 가야 하나, 총선 승리전략	좌담회
8.14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제8차 세미나	간담회
8.19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공적연금 전문가 제4차 세미나	세미나
8.2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제2차 연속토론회 - 바른미래당 어디로 가야 하나?	연속 토론회

8.22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9차 회의	간담회
8.2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중도개혁노선의 제논리 비판	이슈페이퍼
8.2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제3차 연속토론회 - 공적연금 통합방안	연속 토론회
8.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가정양육수당 조정방안	이슈페이퍼
8.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참여소득 관점 정리	이슈페이퍼
9.6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0차 회의	간담회
9.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전망	토론회
9.19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1차 회의	간담회
9.23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공적연금 전문가 제5차 세미나	세미나
10.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보도자료 배포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과제	토론회
10.10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2차 회의	간담회
10.26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3차 회의	간담회
10.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한미동맹과 비핵화 협상의 함수관계 : 분석과 전망	이슈페이퍼
10.28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토론회

10.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20대 남자 보고서	이슈페이퍼
11.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올해의 단어 '조커'와 '내전'	이슈페이퍼
11.13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공간 빅데이터의 선거활용 가능성	포럼
11.14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4차 회의	간담회
11.28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재	청년정책연구위원회 제15차 회의	간담회
12.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여론조사에 응하는 유권자 태도	이슈페이퍼
12.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현주소와 현실적 대안	이슈페이퍼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55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8	토론회 자료집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1.24	토론회 자료집	스카이 캐슬을 넘어서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위한 성찰과 모색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2.11	토론회 자료집	창당 1주년 기념 - 대한민국 새판짜기 :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진로	자체발간	200부 현장 배부	
2.19	토론회 자료집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2.25	토론회 자료집	3·1운동은 청년운동이었다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2.28	연구 보고서	바른미래당 신뢰도 제고 및 혁신방안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3.7	토론회 자료집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3.15	연구 보고서	바른미래당 진로모색과 지지율 제고 방안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3.25	연구 보고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토론회 분석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4.1	연구 보고서	추첨민주주의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4.3	토론회 자료집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4.3	연구 보고서	군 복무 보상에 관한 쟁점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4.7	연구 보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정책적 대응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4.9	토론회 자료집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승리를 위한 과제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4.10	칼럼	4.3 재보선의 교훈	자체발간	홈페이지 게재	
4.17	칼럼	2020년 총선을 위한 재정비 방향 및 전략	자체발간	홈페이지 게재	
4.17	연구 보고서	4.10 한미정상회담의 평가와 남북관계 교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4.17	연구 보고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공천시스템 연구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4.19	연구 보고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정책적 대응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4.24	칼럼	바른미래당의 발전 방향	자체발간	홈페이지 게재	
4.25	연구 보고서	2019 현 정세분석과 바른미래당 대응전략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5.8	칼럼	낙태죄와 보수정당	자체발간	홈페이지 게재	
5.15	칼럼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	자체발간	홈페이지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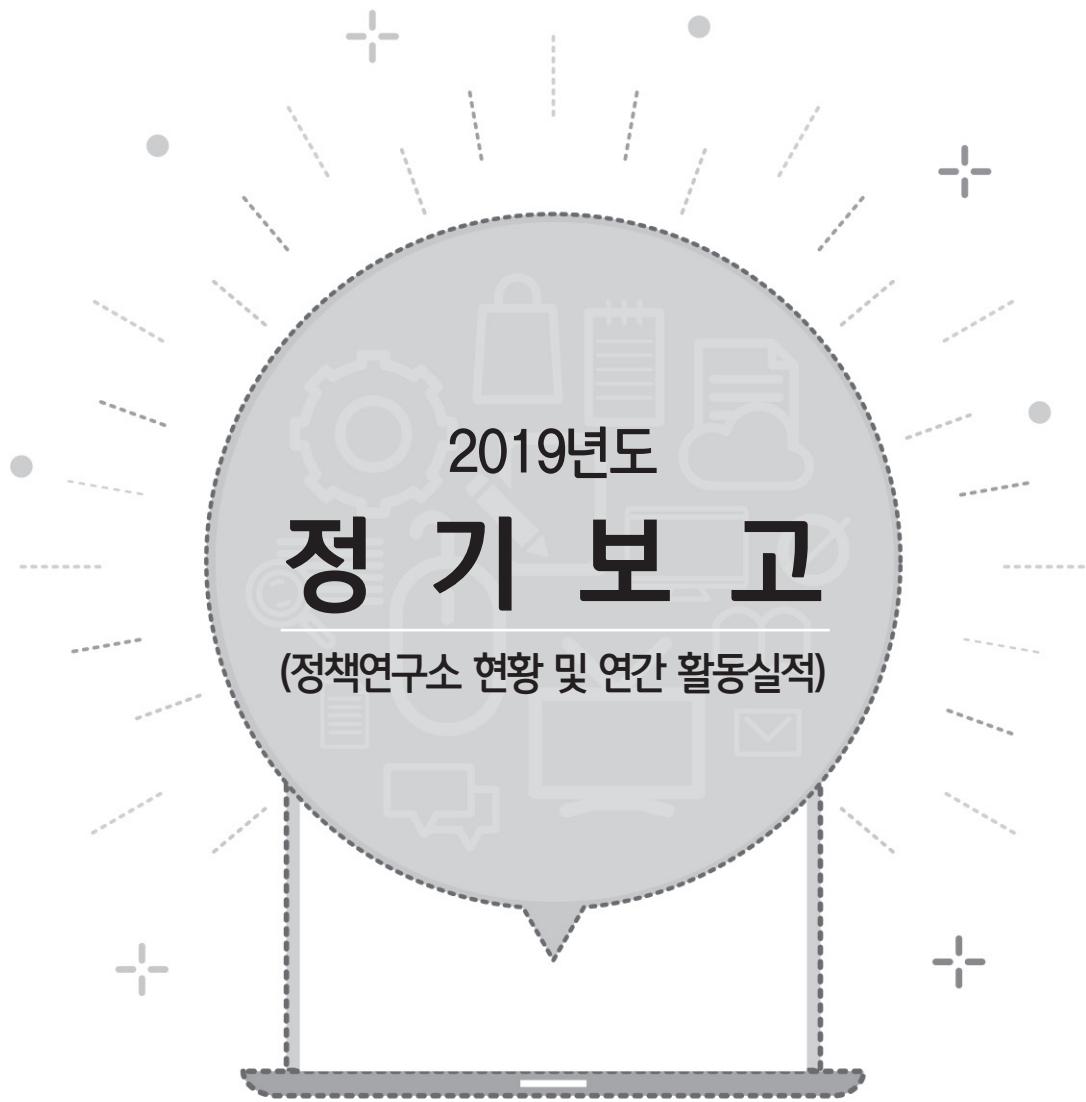
5.19	연구 보고서	문재인정부 집권 2주년,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나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5.22	연구 보고서	협동조합유치원 안착 방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5.22	칼럼	어째서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는가?	자체발간	홈페이지 게재	
5.24	연구 보고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지원방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5.29	연구 보고서	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방향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6.12	연구 보고서	'제왕'에서 대통령으로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6.13	연구 보고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공천개혁의 방향과 제언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6.26	토론회 자료집	신냉전과 기술안보 I - 화웨이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7.8	토론회 자료집	신냉전과 기술안보 II -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7.10	연구 보고서	신냉전 시대의 기술안보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7.15	연구 보고서	기술민족주의시대의 수구민족주의 전쟁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7.17	연구 보고서	북미 비핵화 교착국면에서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7.22	연구 보고서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본질과 대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7.23	연구 보고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주고받기 가능한가?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8.8	연구 보고서	지자체의 기본소득제 도입확산에 따른 문제점 비판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8.22	토론회 자료집	바른미래당 어디로 가야 하나?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8.27	토론회 자료집	공적연금 통합방안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8.27	연구 보고서	가정양육수당 조정방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8.30	연구 보고서	참여소득 관점 정리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9.8	연구 보고서	바른미래당 개혁방안 개발 (Conversion of Ideas) 보고서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9.10	토론회 자료집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전망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9.14	반연간지	《바른미래》 창간호	자체발간	50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및 시도당 배포	
10.25	연구 보고서	21대 총선과 제3당 정책 의제 연구	자체발간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10.27	연구 보고서	한미동맹과 비핵화 협상의 함수관계 : 분석과 전망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10.31	연구 보고서	20대 남자 보고서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11.1	백서	《청년정책, WHY》 청년정책연구위원회 활동자료집	자체발간	50부 당 지도부 전달 정책 자료 활용	
11.4	연구 보고서	올해의 단어 ‘조커’와 ‘내전’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11.26	연구 보고서	국회의원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국회미래 연구원 공동	국회미래연구원 전달, 연구자료 활용	
11.22	연구 보고서	주요 국가의 정당 가치 비교와 한국 유권자 인식에 관한 연구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12.11	연구 보고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유권자 태도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12.12	연구 보고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현주소와 현실적 대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12.18	연구 보고서	21대 총선과 제3당의 정책 의제 연구	외부용역	50부 당 지도부 배포 연구자료 활용	

바. 그 밖의 주요활동(7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23	현정기념관	창당 1주년 기념식	창당 1주년 축하 및 연구원 비전 발표	
3.1	서울 종로 소재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9.17~10.28	광화문 광장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광화문 촛불 집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광화문 촛불 집회	
10.4	국회의원회관	지방을 살리는 자치분권 실현과제 토론회	토론자 참석	
10.25~26	중앙선관위 선거연구원	2019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2019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참석	
10.31~11.1	강원 속초 소재 롯데 리조트	2019년도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주요 정당·정책연구원 교류협력 방안 논의	
11.4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언론사 인터뷰	최근 국회 정황에 대한 연구원 인터뷰	



2019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 -

민주평화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0층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2	7년 이상 :	자체고용: 3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2		
합 계: 2	합 계 : 2	합 계: 3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50,755,494	12,213,733	261,450,197	924,419,424	696,307,486	228,111,938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분량	비고
2019.4.26. ~ 2019.11.26.	정치	국회의 예산권한강화 방언연구 및 의회양원제의 탐색과 전망	P144	

나. 토론회 등 개최(3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토론회	190108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좌동
세미나	190106	전북 노블레스 웨딩홀 3층	왜 민심 그대로 선거인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세미나	190124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8차 전문가 초청 특강]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	좌동
토론회	1901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좌동
세미나	190214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9차 전문가 초청 특강]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	좌동
토론회	190214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	좌동
토론회	190219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좌동
토론회	190226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좌동
토론회	190228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좌동
세미나	190228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10차 전문가 초청 특강] 모두를 위한 소득과 모두를 위한 상속 :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좌동
토론회	190307	국회 본청 226호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	좌동
세미나	190307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11차 전문가 초청 특강]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북핵문제	좌동
토론회	190313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좌동
세미나	190321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12차 전문가 초청 특강] 재난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기	좌동
세미나	190322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특별강연]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정의	좌동
여론조사	190330	외주	ARS 여론조사	2019년 4·3보궐선거 여론조사

토론회	190401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1)	좌동
여론조사	190412	외주	ARS 여론조사	민주평화당 정치현안 당원 여론조사
토론회	190419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좌동
토론회	190422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2)	좌동
토론회	190502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좌동
토론회	190507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	좌동
토론회	190509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제주지역 미세먼지 안전한가	좌동
토론회	19052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3)	좌동
토론회	190609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좌동
토론회	19061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	좌동
토론회	190617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5)	좌동
토론회	190624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상례문화 토론회	아직도 삼베수의로 모실 생각입니까?
토론회	190624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좌동
여론조사	190628	외주	정책개발 관련 심층 여론조사	민주평화당 정책개발을 위한 광주시민 FGI 가이드라인
토론회	190708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안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안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준비 토론회	평화와 공존의 새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

다. 교육·연수활동(1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비고
2019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191031 ~ 191101	강원속초 롯데리조트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용역 결과 발표	

라. 정책홍보(16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20190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0190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왜 민심 그대로 선거인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20190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광주형 일자리 모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20190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	
20190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20190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20190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201903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모두를 위한 소득과 모두를 위한 상속 :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201903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	
201903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북핵문제	
201903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정의	
201904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201905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201905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	
201905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다시 살아나는 오월 발간	
201907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90130	토론회 자료집	광주형 일자리 모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218	세미나자료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세미나	자체발간	120부 현장배포	
190219	토론회 자료집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226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228	토론회 자료집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313	토론회 자료집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322	토론회 자료집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정의	자체발간	150부 현장배포	
190412	토론회 자료모음집	민주평화연구원 전문가 초청특강 2019년 자료모음집(2차)	자체발간	200부 전국 시도당 배포	
190419	토론회 자료집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502	토론회 자료집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507	토론회 자료집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509	토론회 자료집	제주지역 미세먼지 안전한가	자체발간	400부 현장배포	
190522	5·18 관련 자료집	다시 살아나는 오월	자체발간	3,300부 전국 시도당 배포	
190609	토론회 자료집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발간	300부 현장배포	
190624	토론회 자료집	청산해야 할 생환 속의 일제잔재-상례문화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90708	토론회 자료집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준비 토론회	자체발간	150부 현장배포	
190809	정책 자료집	희망을 열어나가는 민주정의의 약속 「5대 개혁 방안과 10대 핵심정책」	자체발간	700부 전국 시도당, 언론기관, 공공도서관 등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정의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 (여의도동, 동아빌딩)			○		

나. 인력

연구원수		직원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3명	7년 이상: 3명	자체고용: 2명	
석사급: 5명	2년 이상~7년 미만: 7명	외부파견: 0명	
기 타: 2명	2년 미만: 0명		
합 계: 10명	합계: 10명	합 계: 2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34,162,802	12,466,390	185,135,745	1,031,764,937	845,762,133	186,002,804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1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8년)10월17일 ~ (19년) 2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의원 의정활동 모범사례 및 모델 연구	외부	219P	
1월 1일 ~ 1월 31	보건복지 위원회	0명대 출산율,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검토와 평가	자체	11P	
1월 1일 ~ 1월 8일	보건복지 위원회	국내외 기본소득 동향 리포트	자체	6P	
2월 1일 ~ 2월 28일	행정안전 위원회	선거에서 신전략지역으로 수도권(경기) 신도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체	8P	
4월 1일 ~ 4월 30일	운영위원회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체	13P	
5월 1일 ~ 5월 31일	기획재정 위원회	정부·정치권 재정확대 논쟁 「(너무)높은 재정건정성=구두쇠 재정」	자체	13P	
6월 1일 ~ 6월 30일	기획재정 위원회	재정비전2020 함께 행복한 평등시대: 2020~2022 확대재정운용계획 구상	자체	14P	
5월 3일 ~ 7월 23일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에너지 전환측면 공동체 자산화 방안	외부	40P	
7월 1일 ~ 8월 1일	기획재정 위원회	정의당 재정비전2020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600조 확대예산 시대: 2020~2024 확대재정운용계획 제안	자체	11P	
6월 3일 ~ 9월 17일	보건복지 위원회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외부	65P	
7월 1일 ~ 10월 31일	정무위원회	유력정당의 길: 정의당 총선 목표와 2020총선의 정치적 의미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9월 1일 ~ 9월 30일	기획재정 위원회	문재인 정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검토 평가	자체	10P	
9월 25일 ~ 10월 4일	행정안전 위원회	세입 중심의 재정분권 제고 방안 구상	자체	4P	
10월 1일 ~ 10월 10일	행정안전 위원회	중앙·지방간 관계 모색 및 과감한 재정분권 확대 방향	자체	5P	
10월 1일 ~ 10월 29일	운영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툫아보기	자체	12P	
10월 1일~ 10월 18일	보건복지 위원회	조세+공통부 기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자체	3P	
11월 10일 ~ 11월 26일	정무위원회	영국 노동당 총선 공약(발취 번역)	자체	19P	
11월 10일 ~ 11월 28일	정무위원회	앞 다퉁 나오는 정당별 총선 청년 전략·공약·공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자체	13P	
10월 1일 ~ 12월 31일	정무위원회	2020총선 청년전략 보고서 -전략/메시지/공약을 중심으로-	자체+외부	23P	
11월 10일 ~ 11월 19일	정무위원회	청년 국회의원(지방) 선거 출마자 지원 사업	자체	2P	
12월 1일 ~ 12월 12일	행정안전 위원회	(총선용) 균형발전 추가 공약 제안	자체	2P	
1월 1일 ~ 1월 22일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지엠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新산업정책과 국민기업화	자체	13P	
1월 1일 ~ 1월 31일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창원시 산업노동 구조와 문제점	자체	16P	
2월 1일 ~ 2월 28일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원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자체	7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4월 1일 ~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모색	자체	10P	
5월 1일 ~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그린뉴딜 말고 녹색산업혁명은 어떤가	자체	11P	
6월 1일 ~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사회적 산업구조 조정정책의모색: 석탄산업합리화 정책(1988~1995)이 주는 시사점	자체	60P	
18년10월12일 ~ 1월21일	외교통일위원회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	외부	60P	
1월1일 ~ 1월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와 대안(1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핵심쟁점과 한일 갈등의 전향적 해결	자체	11P	
2월11일 ~ 3월4일	외교통일위원회	[이슈페이퍼] 하노이 선언 불발 원인과 과제	자체	7P	
3월5일 ~ 3월11일	외교통일위원회	2019년 1차 정당정책토론회(2019.03.15.) 1부 “북미정상 이후의 남북관계” 관련 자료	자체	37P	정당정 책토론 회 준비자 료
4월1일 ~ 4월12일	외교통일위원회	[이슈페이퍼]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과제	자체	4P	
4월13일 ~ 4월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와 대안(4월)] 북·러 정상회담과 남에 냉랭해진 북	자체	6P	
5월1일 ~ 5월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와 대안(5월)]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갈등 심화와 합의, 과제	자체	8P	
6월1일 ~ 6월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와 대안(6월)]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과 향후 전망, 과제	자체	8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7월1일 ~ 8월7일	외교통일 위원회	[이슈페이퍼]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압박과 대응	자체	14P	
8월8일 ~ 8월29일	외교통일 위원회	[정의와 대안(8월)] 요동치는 동아시아 질서와 대안의 모색	자체	7P	
9월1일 ~ 9월30일	외교통일 위원회	[정의와 대안(9월)] 북미협상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풀릴까?	자체	9P	
10월1일 ~ 10월 29일	외교통일 위원회	[정의와 대안(10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영향, 대안의 모색	자체	12P	
11월1일 ~ 11월7일	외교통일 위원회	[이슈페이퍼]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및 대응	자체	5P	
11월8일 ~ 11월28일	외교통일 위원회	[정의와 대안(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 문제는 무엇인가?	자체	10P	
11월29일 ~ 12월4일	외교통일 위원회	문희상 안의 내용, 반응 및 당의 대응	자체	5P	당지도 부에 참조자 료로 제출
1월 1일 ~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고용계약의 불완전성과 권력 문제_마르크스, 코우즈, 하트, 엘러만을 중심으로	자체	8p	
2월 1일 ~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밀레니얼 사회주의	자체	7p	
4월 1일 ~ 4월 30일	기획재정 위원회	현대통화이론(MMT) 논쟁	자체	10p	
5월 1일 ~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미국의 노동자 소유 지원 정책이 주는 시사점	자체	9p	
6월 1일 ~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포용적 경제를 위한 노동자 소유 기금	자체	1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6월 13일 ~ 7월 12일	기획재정 위원회	재정에 대한 대안이론 및 재정지출 확대 효과 연구	외부	47p	
8월 1일 ~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평가	자체	11p	
4월 30일 ~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개발주의 환경산업의 모순	외부	40p	
9월 1일 ~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합의	자체	6p	
4월 30일 ~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경제 권력의 동등성 실현을 위한 대안적 기업 모델	자체	45p	
9월 20일 ~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 모색에 대한 의견	자체	7p	
10월 1일 ~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버니 샌더스의 그린 뉴딜 공약	자체	11p	
5월 20일 ~ 11월 3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노동자 소유기업과 그 금융지원에 관한 연구	외부	84p	
11월 1일 ~ 11월 30일	기획재정 위원회	미국 대선후보들의 부유세 공약과 그 시사점	자체	9p	
6월 11일 ~ 12월 19일	보건복지 위원회	돌봄사회와 돌봄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좋은 돌봄 체계 구상	외부	38p	
1월 2일 ~ 1월 5일	행정안전 위원회	촛불혁명과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자체	5p	
1월 3일 ~ 1월 10일	행정안전 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의 전망과 정치개혁 핵심과제	자체	5p	
1월 23일 ~ 1월 31일	행정안전 위원회	집권세력의 지대추구정치와 제1야당 적폐의 귀환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2월 19일 ~2월 28일	행정안전 위원회	3월 정치전망	자체	5p	
4월 19일 ~4월 30일	행정안전 위원회	패스트트랙 이후 한국정치	자체	5p	
5월 13일 ~5월 30일	행정안전 위원회	6월 정치전망, 정치공전 지속	자체	5p	
6월 24일 ~7월 1일	행정안전 위원회	7월 정치전망, 성과없는 국회, 여야 대치 평행선	자체	4p	
8월 23일 ~8월 29일	행정안전 위원회	세계체제 중심부 갈등과 한국정치 전망	자체	6p	
9월 19일 ~9월 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정치 양극화와 한국정치	자체	7p	
10월 10일 ~10월 22일	행정안전 위원회	한국정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문제	자체	4p	
8월 1일 ~10월 30일	행정안전 위원회	기존 총선의 특징과 함의	자체	5p	
7월 1일 ~10월 22일	행정안전 위원회	정의당 총선 전략	자체	4p	
10월 21일 ~10월 30일	행정안전 위원회	기득권 특권 세습 양당체제와 한국정치	자체	6p	
11월 21일 ~11월 28일	행정안전 위원회	정계개편과 한국정치	자체	6p	
1월2일 ~1월31일	행정안전 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방안	자체	10p	
1월 5일 ~ 1월 30일	기획재정 위원회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검토	자체	1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월 10일 ~1월 17일	국토교통 위원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관련 검토	자체	4p	
1월16일 ~ 2월28일	국회운영 위원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개혁 방안	자체	21p	
1월 21일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검토	자체	2p	
2월 11일 ~ 2월 15일	행정안전 위원회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지급 검토	자체	5p	
3월 2일 ~3월 13일	기획재정 위원회	가업상속공제 완화의 현황과 문제점	자체	10p	
4월 10일 ~ 4월 19일	기획재정 위원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검토	자체	5p	
4월10일 ~ 5월9일	행정안전 위원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쟁점 분석	자체	9p	
4월 12일 ~ 4월 21일	국토교통 위원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인하 요구 관련 검토	자체	8p	
4월 20일 ~ 8월 2일	예산결산 위원회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자체	15p	
5월1일 ~ 5월31일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의회 제도 개선방안	자체	22p	
5월 2일 ~ 5월 7일	국토교통 위원회	3기 신도시 발표 관련 검토	자체	2p	
5월 20일 ~10월31일	예산결산 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 마련 및 대응 전략 수립	자체	20p	
6월1일 ~7월31일	행정안전 위원회	개인정보 3법 문제점과 대안	자체	19p	
6월 11일 ~ 6월 20일	예결위· 국토위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용 국비 보조 검토	자체	10p	
6월 23일 ~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검토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7월 5일 ~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양수발전소 현황과 문제점	자체	3p	
7월 25일 ~ 7월 28일	환경노동,국 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검토	자체	7p	
8월16일 ~ 9월15일	행정안전 위원회	소방공무원 특화 전문의료기관 신설 필요성과 추진방안	자체	15p	
8월16일 ~ 9월15일	행정안전 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방안	자체	12p	
8월 16일 ~ 12월15일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병영 및 관사시설 민간투자사업 분석	자체	10p	
9월1일 ~ 9월30일	정무위원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자체	14p	
9월1일 ~ 9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위 2019 국정감사 주요현안	자체	23p	
9월 1일 ~ 12월10일	예산결산 위원회	2020년 예산안 분석과 심사방안 연구	자체	15p	
9월 3일 ~ 11월10일	예산결산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핵심사업평가 및 부처 자율평가 보고서 분석	자체	10p	
9월 15일	기획재정 위원회	21대 총선 조세·재정분야 공약개발	자체	15p	
9월16일 ~ 10월15일	국회운영 위원회	국회의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방안	자체	11p	
10월 4일 ~ 11월 2일	기획재정 ·환경노동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실태 분석	자체	20p	
10월20일 ~ 11월26일	국회운영 위원회	국회개혁 5대 과제	자체	26p	
10월 25일 ~ 12월 6일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1대 총선 생태에너지분야 공약 개발	자체	34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1월1일 ~ 11월20일	행정안전 위원회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위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부	23p	
11월1일 ~ 11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어린이 생명안전법 주요쟁점과 입법 추진방안	자체	12p	
11월 1일 ~ 12월 5일	국토교통 위원회	총선 주거 공약 개발을 위한 연구방안	자체	36p	
18년10월12일 ~ 1월11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보고서	외부	144p	
1월 14일 ~ 7월 8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보고서	외부	250p	
7월 17일 ~ 10월 11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보고서	외부	161p	
18년10월02일 ~2월 27일	행정안전 위원회	탈 신자유주의 정책방향과 제안	외부	52p	
3월 7일 ~ 10월 22일	국회운영 위원회	20대 유권자의 정치성향 및 인식분석	외부	133p	
4월 18일 ~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한국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외부	34p	

나. 토론회 등 개최(46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0118	중앙당 회의실	우리나라 산업정책 고찰①	스마트공장사업단 전문가로부터 현장에서 보는 산업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정책 모색	
간담회	0122	중앙당 회의실	우리나라 산업정책 고찰②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지역산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 대입해 대안 모색	
토론회	012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한반도 비핵화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전망과 과제 및 대안에 대한 토론	
간담회	0130	중앙당 회의실	문재인 정부 국가성격	문재인 정부의 국가 성격과 정의당의 대응전략 모색	
간담회	0130	연구소 회의실	탈신자유 주의	탈신자유주의 정책방향과 정의당의 제안	
토론회	0311	국회본청 223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내용 및 제정에 대한 토론	
간담회	0318	연구소 회의실	한반도 정세와 과제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 정의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강연회	0502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혁명의 나라 쿠바	혁명의 나라 쿠바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간담회	0509	중앙당 회의실	대안사회 경제정책 개발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구성 및 토론	
간담회	0516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 담론개발①	21대 총선 가치와 비전, 프레임 구성, 의제 등 담론 발굴 및 전파 방식에 대한 검토 및 토론	
간담회	0530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 담론개발②	21대 총선 가치와 비전, 프레임 구성, 의제 등 담론 발굴 및 전파 방식에 대한 검토 및 토론	
토론회	0612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에 대한 논의	
간담회	0613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 담론개발③	21대 총선 가치와 비전, 프레임 구성, 의제 등 담론 발굴 및 전파 방식에 대한 검토 및 토론	
간담회	0618	연구소 회의실	20대 유권자 성향	20대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성향 및 인식에 대한 분석 및 정의당의 대응전략에 대한 모색	
간담회	0628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 담론개발④	21대 총선 가치와 비전, 프레임 구성, 의제 등 담론 발굴 및 전파 방식에 대한 검토 및 토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0705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 담론개발⑤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리 및 대안 모색	
간담회	0710	중앙당 회의실	확대재정 예산①	정의당 재정비전 2020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600조 확대예산 시대를 위한 전망 및 2020~2024 확대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내부 관계자 토론	
토론회	0717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확대재정 예산②	정의당 재정비전 2020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600조 확대예산 시대를 위한 전망 및 2020~2024 확대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구상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	
토론회	071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노회찬 의원 1주기 공동학술행사	노회찬과 한국정치, 현실진단과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방법을 모색	
간담회	0716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①	정의당이 최종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지향할 바에 대한 토론	
간담회	0726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②	정의당이 최종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지향할 바에 대한 토론	
간담회	0808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③	정의당이 최종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지향할 바에 대한 토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0830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④	정의당이 최종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지향할 바에 대한 토론	
토론회	0903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연금 개혁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나은 방식에 대한 모색	
간담회	0905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④	정의당이 최종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지향할 바에 대한 토론	
토론회	0917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대안사회 경제정책 개발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토론회	1002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대안사회 경제정책 개발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에 대해 토론 및 모색	
간담회	1002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⑤	‘수권정당의 길’보고서 분야별 집중 토론 및 논의	
포럼	1004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행정분권 재정분권	도연전국시협의회 및 5당 정책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공동으로 행정 및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	
간담회	1015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⑥	‘수권정당의 길’보고서 분야별 집중 토론 및 논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1016	연구소 회의실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과제	한국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당면한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에 대해 모색	
토론회	1023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한국 산업구조의 전환과 대안 모색	-성장과 고용 이데올로기에서 삶과 노동 이데올로기의 전환 -돌봄사회와 돌봄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좋은 돌봄체계 구상 -에너지 전환측면에서 공동체 자산화 방안 -환경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102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비례대표 공천제도	비례대표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방법을 모색	
간담회	1029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가치와 비전⑦	‘수권정당의 길’보고서 분야별 최종 검토	
토론회	110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미중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망,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간담회	1120	중앙당 회의실	20대 청년	20대 청년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정의당의 대응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토론회	1108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기후위기대응,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방안 -거시경제 변화와 녹색 뉴딜 정책의 필요성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1205	연구소 회의실	그린뉴딜	한국에 적합한 그린뉴딜 대안담론에 대해 토론	
간담회	1227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공약	'21대 총선 핵심공약에 대 해 토론하고 메시지화 전략 에 대한 방안을 모색	
여론조사	1226 ~1231	연구소 회의실	21대 총선 여론조사 등	-당원 정치의식 조사 -21대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 등	
토론회	0919	국회본관 223호	정의당 조세 개혁 방향	21대 총선 공약용 조세 개혁 방향 논의	
토론회	110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토론회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후 처우 차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토론회	1108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경제 비전 제시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위한 재정전략과 공공투자 방안 발표 및 토론	
토론회	1126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국회개혁 과제 제시	
세미나	1212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초부유세 도입 방안 마련 1차 세미나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초부유세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세미나	1218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초부유세 도입 방안 마련 2차 세미나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초부유세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다. 교육.연수활동(6건)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당직자 인권 감수성교육	0213	중앙당 회의실	-일터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당직자 교육	1017 ~1018	충북단양 대명리조트	-정치관계법 교육 -세대공감 up-말의 민주주의 -노동인권교육 -정의당 -2020총선전략브리핑 및 질의응답	
연구소 집합교육	0523 ~0524	강원 고성 팬션일마래	-분야별 정책 심화 토론 -연구소 사업방향 토론	
당직자 교육	1213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활동가 기본교육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당의 주요정책, 장애평등 심화교육, 성평등 심화교육)	
정예당원교육	1025	서울시립대 21세기관 라운지 스터디룸A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현지교육	0108	민주노총 교육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예산(인건비)의 이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간부

라. 정책홍보(2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731 ~0831	카드뉴스	SNS (페이스북)	[카드뉴스] 정의당 재정비전2020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600조 확대예산 시대를 열자!	
012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논평	
01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지역별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결국은 국민 피해로 “편의적 예타 면제로 지역 간 갈등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켜”	
070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평	
0712	정책논평	상동	2019년 추경심사방안 토건·선심·특혜성 예산은 삭감, 재해·실업 등 민생예산은 증액해야	
0725	정책논평	상동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 과연 적극적 재정역할 의지 있는가?” - 실효성 없는 관행적인 조세지출 확대, 발밑에서부터 세입기반 허무는 꼴	
0803	정책논평	상동	99일 간 발목 잡혔던 추경예산안, 재난지역 증액은 환영 - 조속한 집행으로 재난 지역 피해 최소화와 실업 대책에 만전 기해야 -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812	정책논평	상동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에 대한 논평	
0827	정책브리핑	상동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분석 및 논평	
0829	정책논평	상동	2020년 정부 예산안, 확장적 재정에는 미흡 - 사회복지분야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향상 필요 -	
0903	정책브리핑	상동	미세먼지 관리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에 대한 분석	
0919	정책브리핑	상동	정부·여당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에 대한 정책 분석	
0922	정책브리핑	상동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로의 전환에 대한 브리핑	
1007	정책브리핑	상동	정부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 대한 정책분석	
1022	정책브리핑	상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발전소 건설 주장에 대한 논평	
1105	정책논평	상동	RCEP은 타결이 아닌 분과별 협상 종료일 뿐 - 협정문안?협정자료 공개로 투명성 높여야 -	
1106	정책논평	상동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에 대한 논평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114	카드뉴스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게시	데이터3법 문제점 비판 및 사회적 논의 촉구	
1122	정책브리핑	상동	장거리 월경 오염물질 조사보고서 분석 및 논평	
1211	정책논평	상동	정의당, 내년 예산에 농민·여성· 상공인 예산 다수 반영 - 제2공항 등 환경 파괴 예산 존치는 아쉽다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62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103	칼럼(기사)	2019년 황금돼지해,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해가 되길	자체	홈페이지 게재	
0129	칼럼(기사)	드라마 SKY 캐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외부	홈페이지 게재	
0208	칼럼(기사)	문제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가 아니라 '객체화'이다	외부	홈페이지 게재	
0307	칼럼(기사)	파산으로 가는길	외부	홈페이지 게재	
0326	칼럼(기사)	선거법 개정을 바라보면서 -네덜란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례 소개 및 시사점-	외부	홈페이지 게재	
0328	칼럼(기사)	육아하는 청년노동자가 신보라 청년의원께 드리는 편지	자체	홈페이지 게재	
0423	기사	'스쿨 미투 법안' 통과... 학교, 아직 변하지 않았다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424	기사	시골 작은 마을 사람들, 청년기본소득을 실험하다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426	기사	대학원 잔혹사, 사회의 모든 편법 배우다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429	기사	대학과 대학생에겐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다?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513	기사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 하락 원인은?	외부	홈페이지 게재	
0514	기사	청년당원들의 소통과 정치의제 말할 공간이 필요하다!	외부	홈페이지 게재	
0515	기사	'언더도그마'에 대한 청년들의 환멸감 확산의 배경은?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515	칼럼(기사)	내 편만 있는 광장(1): 남아공 총선과 한국 정치	외부	홈페이지 게재	
0517	기사	대만의 주거.동성혼.탈핵 문제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520	기사	갈 곳 잃은 청년들과 주거 정책	외부	홈페이지 게재	
0521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진보정치" 미국의 젊은 민주사회주의자 오카시오-코르테즈 신드롬	외부	홈페이지 게재	
0522	칼럼(기사)	내 편만 있는 광장(2) 혐오.분리.배제의 정치: 남아공 국민당과 한국당	외부	홈페이지 게재	
0529	기사	빛 좋은 개살구, 해외취업의 실상은?	외부	홈페이지 게재	
0611	기사	학생부 종합전형, 믿어도 되나?	외부	홈페이지 게재	
0613	기사	일자리 엇박자... 그 원인은?	외부	홈페이지 게재	
0704	기사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복합 쇼핑몰이 부른 쟁점	외부	홈페이지 게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705	기사	개신교 청년들의 달라진 교회관	외부	홈페이지 게재	
0712	기사	"청년의 파편화", 청년 스스로 묻고 답하다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717	칼럼(기사)	나는 노회찬을 회고하고 싶지 않다	자체	프리티안 및 홈페이지 게재	
0718	칼럼(기사)	노회찬에 대한 지켜온 슬픔 -진흥당 속의 진보적 현실주의자-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719	칼럼(기사)	노회찬이 남긴 꿈, 제7공화국	외부	한겨레 및 홈페이지 게재	
0719	칼럼(기사)	도의원, 한번만 하면 안 됩니다	외부	당진신문 및 홈페이지 게재	
0719	칼럼(기사)	'호빵맨' 노회찬을 기억하며, 더 많은 '원편맨'이 등장하길	외부	프리티안 및 홈페이지[게재	
0722	칼럼(기사)	"노회찬을 닮고 싶은" 젊은 정치인의 다짐	외부	프리티안 및 홈페이지 게재	
0723	칼럼(기사)	노회찬 정신의 양 날개, 6411버스와 진보정당	외부	프리티안 및 홈페이지 게재	
0725	칼럼(기사)	청년 사회주의자들은 페미니즘을 등지지 않는다	외부	홈페이지 게재	
0725	칼럼(기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단상	자체	홈페이지 게재	
0726	칼럼(기사)	노회찬 부역에 붙은 은박지... “두 덩이 매생이가 가정을 구합니다”	외부	오마이뉴스 및 홈페이지 게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726	기사	'20대 남성' 담론은 정치의 문제인가	외부	홈페이지 게재	
0729	유튜브 영상	<쿠모 스마트 인터뷰> 인천 S버스 노동자 자살사건	외부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게재	
0812	칼럼(기사)	남아공 과거사 청산과 한일관계	외부	홈페이지 게재	
1119	칼럼(기사)	난민의 삶과 인권에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외부	레디앙 및 홈페이지 게재	
0131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1월호	자체	지도부 및 간부 공유, 홈페이지 게재	
0228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2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0304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2월호 부록	자체	홈페이지 게재	
0430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4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0531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5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0702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6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0829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8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0930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9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1029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10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1217	보고서	월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11월호	자체	홈페이지 게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029	보고서	유력 정당의 길	자체	지도부 및 간부당직자 공유	
1105	토론회자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차별해소를 위한 토론회	자체	100부, 참석자 배포	
1120	연구논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위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부	5부·당내 유관부서에 배포	
1126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정치개혁공 동행동과 공동	100부·토론회에 서 배포	
0124	토론회자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과 과제	자체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0612	토론회자료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자체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0717	토론회자료	600조 확대예산 시대를 열자	자체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0716	토론회자료	노회찬과 한국정치, 현실진단과 미래 비전	공동	100부. 토론회에서 배포	
0903	토론회자료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공동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0917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자체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1002	토론회자료	재벌개혁을 위한 당면과제와 대안적 기업모델 모색	자체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023	토론회자료	한국 산업구조의 전환과 대안모색	자체	50부. 토론회에서 배포	
1104	토론회자료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자체	100부. 토론회에서 배포	
1108	토론회자료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자체	100부. 토론회에서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19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124	중앙당 회의실	19차 이사회	-2018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18년 하반기 결산안 및 2019년 상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기타안건	
0131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1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0228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2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0309	국회본청 223호	청년기자단(6기) 발대식	-운영방향 안내 및 1차 기획회의 -현직기자 1차 교육 -위촉장 수여 등	
0430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4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0601	국회본청 223호	청년기자단(6기) 기획회의	-현직기자 2차교육 -중간평가 및 민원수렴	
0628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6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0712	중앙당 회의실	20차 이사회	-이사 선임의 건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19년 상반기 결산안 및 2019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727	국회본청 223호	청년기자단(6기) 해단식	-심상정 의원과의 만남 -장석준 부소장 진보정치 특강 -우수, 정의기자 시상식 및 해단식	
0829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8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0920	국회본청 223호	2020청년포럼 발대식 및 1차모임	-운영방향 안내 및 활동계획 논의 -정의당 청년전략 거시적 구상 토론	
0930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9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1007	국회본청 223호	2020청년포럼 2차모임	-청년 주거전략 토론	
1019	국회본청 223호	2020청년포럼 3차모임	-한국도시연구소장 초청강연회 -청년 주거전략 2차 토론	
1029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10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1106	중앙당 회의실	21차 이사회	-이사장 선출의 건 -연구소장 선출의 건 -기타안건	
1116	국회본청 223호	2020청년포럼 4차모임	-주요 정당 청년전략 및 정책 검토 -한국의 청년담론 토론	
1219	국회본청 223호	2020청년포럼 5차모임	-개별 청년전략보고서 취합 -21대 총선 청년공약 토론	
1128	연구소 회의실	월례보고서(11월) 기획회의	-분야별 쟁점사항 및 연구과제 토론	



-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

민중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한국잡지협회 빌딩 5층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2	7년 이상 : 0	자체고용: 0	정책연구원이 2018년 7월에 개원하여 경력이 모두 2년 미만임.
석사급: 2	2년 이상~7년 미만 : 0	외부파견: 0	
기 타: 3	2년 미만 : 7		
합 계: 7	합 계 : 7	합 계: 0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306,180,200	10,099,926	91,742,945	408,023,071	332,152,580	75,870,49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58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2018.12~1월	외통	2019년 정세전망	자체	3	별첨1
2018.12~1월	환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자체	5	별첨2
2018.12~1월	기재/보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체	5	별첨3
1.1~1.4	외통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분석	자체	3	별첨4
1.1~1.19	국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연구	자체	7	별첨5
1.1~1.25	외통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와 스웨덴 실무회담	자체	3	별첨6
1.1~1.31	산자	문재인 정부 수소차 육성 정책 평가	자체	10	별첨7
2018.12~1월	산자	경남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3법 탐구	자체	20	별첨8
1~2월	환노/산자	문재인정부의 수소차 육성 정책의 문제점	자체	10	별첨9
1~2월	산자	경남 공공조선 설립의 필요성	자체/외부	27	별첨10
1.20~2.28	외통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석	자체	7	별첨11
2.6~2.15	법사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자체	3	별첨12
1.23~2.23	국토	세입자 중심 임대차제도 연구	자체	11	별첨13
1~3월	법사	민중당 기본정책 해설	자체	110	별첨14
3.13~3.22	기재	정부의 조세지출 한도초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자체	9	별첨15
3.1~3.31	안행	여야4당 선거제 개혁 합의안의 내용과 과제	자체	14	별첨16
3.1~3.29	환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추정 보고서 분석	자체	7	별첨17
4.5~4.12	외통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체	5	별첨18
4.25~4.26	외통	북러 정상회담의 의의	자체	8	별첨19
3~4월	법사	이미션 현재재판관 임명 강행과 과제	자체	5	별첨20
4.30~5.4	환노	4인이하 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자체	20	별첨21
4.14~5.13	교육	사립대학 회계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자체	5	별첨22
5.8~5.17	법사	재벌총수 취업 제한 강화 방안	자체	27	별첨23
5.2~5.27	환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가와 개선방안	자체	10	별첨24
3~5월	환노/산자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자체	12	별첨25

3~5월	환노	고용보험 전면 개편 방안	자체	13	별첨26
6.5~6.14	환노/산자	노동법상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방안	자체	12	별첨27
3~6월	정무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자체	15	별첨28
3~6월	환노/산자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외부	110	별첨29
3~6월	환노/산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 방안	외부	100	별첨30
3~6월	농림	농지법 개정(안)	외부	74	별첨31
3~6월	정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분석 및 민중당 대응방향 연구	외부	89	별첨32
3~6월	정무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연구	외부	65	별첨33
6.15~6.23	외통	시진핑 방북, '중국 신시대와 북한 새로운 길'의 변증법적 결합	자체	8	별첨34
6.2~7.1	환노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노동현장, 여전히 변한게 없다	자체	9	별첨35
7.1~7.19	국방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도 하지 마시라!	자체	5	별첨36
6.29~7.28	국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체	10	별첨37
6.30~8.19	외통	한일갈등과 미국	자체	9	별첨38
8.14~8.23	기재	성인지예산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자체	8	별첨39
6.10~8.30	외통	홍콩시위에 대한 단상	자체	5	별첨40
9~10월	정무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자체	20	별첨41
9~10월	농림	동물권 정책 개발	자체	10	별첨42
9.30~10.13	국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문제점	자체	13	별첨43
9.20~10.21	국토	주요정당 및 단체 부동산정책분석	자체	13	별첨44
9.30~11.4	국방	방위비 분담금 5대 핵심 쟁점	자체	9	별첨45
11.5~11.10	정무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자체	15	별첨46
10.20~11.25	국방	내 삶을 바꾸는 평화!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	자체	10	별첨47
5~6월	외통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자체	5	별첨48
7~8월	산자	일본의 경제침략, 자립경제의 계기로	자체	5	별첨49

8~9월	안행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전망	자체	5	별첨50
9~10월	법사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	자체	9	별첨51
9~10월	안행	석패율제 이해와 과제	자체	15	별첨52
11~12월	법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및 영향	자체	15	별첨53
9~12월	환노/산자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외부	70	별첨54
9~12월	국토/교육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외부	80	별첨55
9~12월	보건	민중당 보건의료 건강권 공약	외부	60	별첨56
9~12월	정무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외부	60	별첨57
9~12월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외부	50	별첨58

나. 토론회 등 개최(33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01.30	중앙당사	한반도 대전환기 평화협정 공론화를 위한 진보진영간담회	민중당 한반도평화협정안	
간담회	02.13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정책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연구원-전교조 서울지부 간담회	2020 총선정책방향	
간담회	02.23	대전시당	민중당 지방자치위원회 주관 지역의원 간담회	지방의원 분야별 모범사례	
간담회	04.13	중앙당사	민중당 지방자치위원회 주관 지역의원 간담회	지방의원 분야별 모범사례	
간담회	04.23	중앙당사	민중당 새노동정책 연구팀, 노동자민중당, 민주노총 공동간담회	민중당 새노동정책	
간담회	04.26	중앙당사	정책당대회-노동정책 회의(정책연구원, 노동자민중당, 서비스연맹)	민중당 새노동정책 (서비스연맹 관련 정책)	
간담회	05.30	중앙당사	교육정책 관련 고등교육분야 유관기관 간담회	대학교육정책	
간담회	06.05	중앙당사	고용보험 정책 간담회	민중당 새노동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간담회	06.05	중앙당사	민중당 평화군축 정책공약 전문가 간담회	민중당 평화군축 정책공약	
간담회	06.17	중앙당사	미중무역전쟁, 홍콩시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미중무역전쟁 배경과 전망	
토론회	07.01	국회	새노동정책 토론회	민중당 새노동정책	
간담회	07.03	중앙당사	재벌개혁정책 간담회	민중당 재벌개혁정책 방향	
간담회	07.03	마이크임팩트	보건의료정책간담회	민중당 보건의료정책 방향, 내용 수립	
간담회	07.26	마이크임팩트	보건의료정책간담회	민중당 보건의료정책 방향, 내용 수립	
간담회	08.05	중앙당사	환경에너지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민중당 환경정책 방향, 내용 수립	
간담회	08.19	중앙당사	환경에너지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민중당 환경정책 방향, 내용 수립	

간담회	08.26	마이크임팩트	보건의료정책협의	민중당 보건의료정책 방향, 내용 수립	
간담회	08.27	중앙당사	청년국회의원후보-정책연구원 청년정책간담회	민중당 청년전략	
간담회	09.20	중앙당사	정책연구원-민주노동정책실 국감대응 정책간담회	국정감사 노동사안에 대한 제안	
간담회	09.20	중앙당사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협정 대응 전문가 간담회	한미방위비분담금 역사와 11차 협정 전망	
간담회	09.25	중앙당사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협정 대응 전문가 간담회	한미방위비분담금 역사와 11차 협정 전망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강령제정토론회	민중당의 성격과 이념,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과 정책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대전환기 차별화된 미래예측과 민중당의 정치전략	한반도 정세, 노동자 민중, 청년미래의제, 농민과 직접정치전략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새 세대를 준비하는 민중당 조직발전 방향과 과제	지역(현장)위원회 사업 당 조직의 발전방향과 해결해야할 과제	
강연	09.27	대구 더케이호텔	기후위기, 미세먼지 그리고 그린뉴딜	그린뉴딜 정책 해결과 민중당의 과제(정의로운 전환 등)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민중당 새 노동정책 '노동법 빈틈막기' 토론회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조국사태로 본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3년, 교육정책 평가 및 과제,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대한민국 청년들은 왜 조국에 분노했을까?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2030 인권감수성 이해하고 함께 변화하기	2030 인권의식 이해하기, 우리 안 권위주의 인식하고 바꾸기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2020총선 민중당 정책토론회_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	민중당 한반도평화협정안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도전, 주거권 골든벨	민중당 주거부동산정책 소개	

토론회	09.27	대구 더케이호텔	민중당의 1차 의료강화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의료현황과 1차 의료 강화의 필요성, 주치의제도의 중요성과 실행 현황, 성과와 과제	
토론회	12.24	국회	민중당 청년전략토론회 “민중당 총선전략, 왜 청년인가?”	청년문제 오진단, 새로운 평등의 규칙,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간담회	12.30	중앙당사	여론조사 속 민중당, 송년특강 및 간담회(한국리서치)	한국정치여론지형에 대한 이해(촛불, 세대와 젠더, 21대 총선전망)	

다. 교육·연수활동(14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서울시당 운영위 대상 새노동정책 교육	06.09	공무원노조 대회의실	민중당 새노동정책	
대구시당 새노동정책 교육	06.13	대구시당	민중당 새노동정책	
광주광산(갑)위원회 정세 강연	06.14	광주시당	정세	
경기도당 의정부 당원 새노동정책 교육	06.18	의정부 소재 모임공간(카페)	민중당 새노동정책	
대전시당 새노동정책 교육	06.20	대전시당	민중당 새노동정책	
지방의원단 워크숍 교육	06.29	대전시당	지방의회 분야별 교육	
새노동정책 전국 강사단학교	06.30	대전시당	민중당 새노동정책	
광주시당 새노동정책 강사단학교	07.19	광주시당	민중당 새노동정책	
대구시당 새노동정책 교육	08.17	대구시당	민중당 새노동정책	
평택시위원회 새노동정책 교육	09.19	경기도당	민중당 새노동정책	
광주시당 총선정책 교육	09.25	광주시당	민중당 총선정책	
지방자치분야 정책협의 (지방재정 관련 교육)	10.08	대전시당	지방의회 분야별 교육	
청년 국회의원 후보 총선정책 교육	10.10	중앙당사	민중당 총선정책	
총선 후보자 정책워크숍	11.10	대전시당	민중당 총선정책	

라. 정책홍보(59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1.1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019년 정세전망	
01.1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01.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01.0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분석	
01.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연구	
01.2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와 스웨덴 실무회담	
01.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문재인 정부 수소차 육성 정책 평가	
01.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경남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3법 탐구	
02.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문재인정부의 수소차 육성 정책의 문제점	
02.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경남 공공조선 설립의 필요성	
02.28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석	
02.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02.2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세입자 중심 임대차제도 연구	
02.17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 기본정책 해설	
03.22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부의 조세지출 한도초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03.22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여야4당 선거제 개혁 합의안의 내용과 과제	
0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추정 보고서 분석	
04.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04.26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북러 정상회담의 의의	
04.2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이미션 현재재판관 임명 강행과 과제	
05.07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4인이하 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05.1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사립대학 회계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05.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재벌총수 취업 제한 강화 방안	
05.27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가와 개선방안	
05.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06.0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05.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고용보험 전면 개편 방안	
06.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동법상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방안	
06.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06.14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06.14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 방안	
06.14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농지법 개정(안)	
06.14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분석 및 민중당 대응방향 연구	
06.14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연구	
06.2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시진핑 방북, '중국 신시대와 북한 새로운 길'의 변증법적 결합	
07.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노동현장, 여전히 변한게 없다	
07.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도 하지 마시라!	
07.28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08.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일본의 경제침략, 자립경제의 계기로	
08.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한일갈등과 미국	
08.2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성인지예산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08.3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홍콩시위에 대한 단상	
10.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10.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동물권 정책 개발	
10.1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문제점	
10.2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주요정당 및 단체 부동산정책분석	
11.0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방위비 분담금 5대 핵심 쟁점	
11.1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11.2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내 삶을 바꾸는 평화!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	
12.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건강권 분야 정책 개발	
09.3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전망	
10.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	
10.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석패율제 이해와 과제	
12.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및 영향	
12.10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12.10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12.10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 보건의료_건강권 공약	
12.10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12.10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7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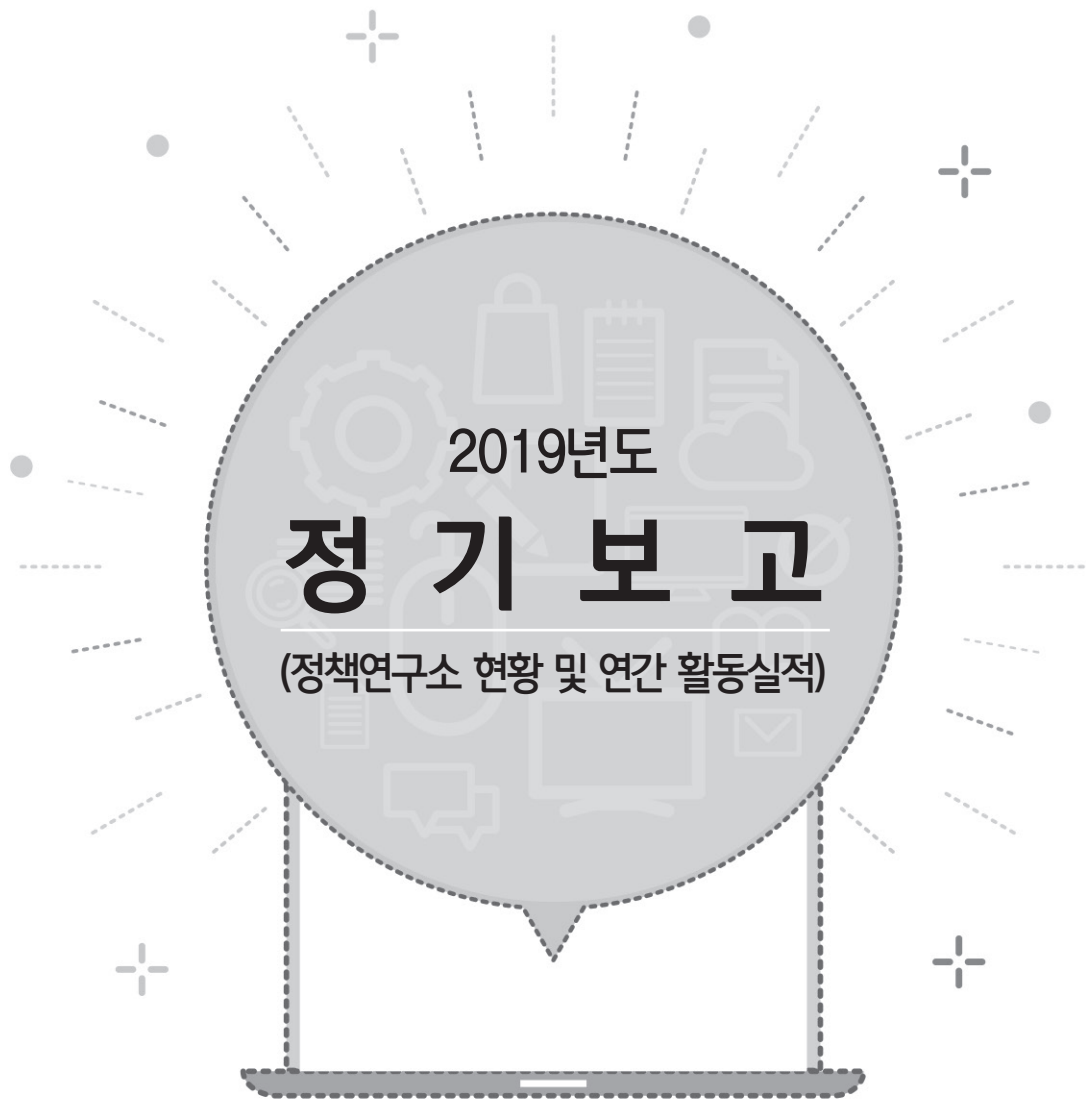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6.30	자료집	민중당 새노동정책 토론회 자료집	자체	2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6.30	자료집	민중당 새노동정책 강사단 교육 자료집	자체	2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6.30	연구논문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30	연구논문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 도입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30	연구논문	농지법 개정(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30	연구논문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 분석 및 민중당 대응방향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30	연구논문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9.27	자료집	민중당 강령	자체	5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9.27	자료집	민중당 정치전략	자체	5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9.27	자료집	조국사태로 본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자체	5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9.27	자료집	2030 인권감수성 이해하고 함께 변화하기	자체	5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9.27	자료집	2020총선 민중당 정책토론회_우리가 만드는 한반도 평화협정	자체	5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9.27	자료집	민중당 주거부동산정책 소개	자체	2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9.27	자료집	민중당의 1차 의료강화정책	자체	2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12.10	연구논문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민중당 보건의료_건강권 공약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23	자료집	민중당 청년전략 보고서	자체	5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12.30	자료집	민중당 총선정책공약 자료집	자체	전국시도당위원회 온라인 배포	
01.10	연구논문	2019년 정세전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11	연구논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19	연구논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03	연구논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분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19	연구논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25	연구논문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와 스웨덴 실무회담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31	연구논문	문재인 정부 수소차 육성 정책 평가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31	연구논문	경남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3법 탐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2.01	연구논문	문재인정부의 수소차 육성 정책의 문제점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2.01	연구논문	경남 공공조선 설립의 필요성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2.28	연구논문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2.15	연구논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2.23	연구논문	세입자 중심 임대차제도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2.17	연구논문	민중당 기본정책 해설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3.22	연구논문	정부의 조세지출 한도초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3.22	연구논문	여야4당 선거제 개혁 합의안의 내용과 과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3.31	연구논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추정 보고서 분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4.14	연구논문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4.26	연구논문	북러 정상회담의 의의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4.21	연구논문	이미션 현재재판관 임명 강행과 과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5.07	연구논문	4인이하 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5.13	연구논문	사립대학 회계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5.19	연구논문	재벌총수 취업 제한 강화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5.27	연구논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가와 개선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5.31	연구논문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03	연구논문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5.31	연구논문	고용보험 전면 개편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14	연구논문	노동법상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14	연구논문	재벌 부의 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재벌개혁 당위성 및 실천과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6.23	연구논문	시진핑 방북, '중국 신시대와 북한 새로운 길'의 변증법적 결합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7.01	연구논문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노동현장, 여전히 변한게 없다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7.19	연구논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도 하지 마시라!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7.28	연구논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8.01	연구논문	일본의 경제침략, 자립경제의 계기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8.19	연구논문	한일갈등과 미국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8.23	연구논문	성인지예산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8.30	연구논문	홍콩시위에 대한 단상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01	연구논문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01	연구논문	동물권 정책 개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13	연구논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황과 문제점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21	연구논문	주요정당 및 단체 부동산정책분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04	연구논문	방위비 분담금 5대 핵심 쟁점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10	연구논문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 방안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25	연구논문	내 삶을 바꾸는 평화!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01	연구논문	건강권 분야 정책 개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9.30	연구논문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전망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01	연구논문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01	연구논문	석파울제 이해와 과제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01	연구논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및 영향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적응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대학기숙사 주거만족도 및 졸업 이후 주거계획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민중당 보건의료_건강권 공약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재벌체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10	연구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연구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5층 애국정책전략연구원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1	7년 이상 :	자체고용: 3	
석사급: 1	2년 이상~7년 미만 :		
기 타:	2년 미만 : 2	외부파견:	
합 계: 2	합 계 : 2	합 계: 3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24,390,000	621	18,000,001	142,390,622	141,567,309	823,313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4.15~6.15	통일외교	제주4.3사건의 재조명과 대응책	자체	51p	별첨1
9.10~12.10	통일외교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참전	자체	54p	별첨2

나. 토론회 등 개최(4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정책 토론회	2.18	국회도서관 대강당	애국정책전략 연구원 개원기념 토론회	애국정책전략연구 원 활동홍보, 현시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정책 세미나	4.3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세미나	제주 4.3사건의 정확한 진실규명 및 문제해결방안 제시	
정책 토론회	8.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우리공화당 창당2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우리공화당의 역할과 사명	
정책 토론회	11.2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파독재 장기집권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법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다. 교육·연수활동(14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당원교육	2019.2월~4월	각 시도당	주사과정권의 등장	
월례강좌	5.1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불법성	
특별강좌	5.29	광화문광장	이승만대통령과 김구주석	
월례강좌	6.4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및 우파가 나아갈 길	
특별강좌	6.11	광화문광장	거꾸로 보는 현대사 이야기	
특별강좌	6.18	광화문광장	문재인의 운명을 논하다	
월례강좌	7.19	광화문광장	광화문 여기는 낙동강 전선	
특별강좌	7.23	광화문광장	잊어버린 6.25전쟁	
특별강좌	7.30	광화문광장	6.25전쟁의 진실	
특별강좌	8.6	광화문광장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1)	
특별강좌	9.4	광화문광장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2)	
특별강좌	9.26	광화문광장	유신체제와 중화학 공업	
특별강좌	10.8/10.15	광화문광장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카터	
특별강좌	12.17	여의도	재일동포 북송과 이승만의 대일외교	

라. 정책홍보(09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개원식	포토뉴스
2.1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정책토론회『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어디까지 왔나?』개최	소식 / 대외홍보
4.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세미나『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세미나』개최	소식 / 대외홍보
5.1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월례강좌 <탄핵무효!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 개최	소식 / 대외홍보
8.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창당 2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우리공화당의 역할과 사명』	소식 / 대외홍보
9.2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소책자] 박근혜가 살린 대한민국, 문재인이 다 망쳤다!	보고서 발간
9.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우리공화당NEWS(우리공화당 당보) - 2019년 10월 1호 (제24-1호)	소식 / 대외홍보
11.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 방송	시사대담 ‘9.19 남북군사 합의서의 위법성을 논한다’	소식 / 대외홍보
11.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소미아 파기·공수처법·연동형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좌파독재 장기집권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식 / 대외홍보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5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18	토론회자료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어디까지 왔나?	자체발간	300부/현장배포	
4.3	토론회자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세미나	자체발간	250부/현장배포	
8.30	토론회자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우리공화당의 역할과 사명	자체발간	300부/현장배포	
10월	정책보고서	박근혜가 살린 대한민국, 문재인이 다 망쳤다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과 공동발간	당직자, 시도당, 당원 등에게 배포	
11.22	토론회자료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발간	200부/현장배포	

